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2014. 10. 01(수) 14:00 ~ 18:00

장소 |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토론 진행순서

### 제1회의 14:00-16:00 2014 통일의식조사 결과

사 회	<b>김병연</b>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 표	<b>통일과 대북인식</b> /김병로(서울대), 정은미(서울대) <b>대북정책과 주변국관계 인식</b> /장용석(서울대), 송영훈(통일연구원) <b>계층과 통일인식</b> /강원택(서울대) <b>세대와 민주적 가치</b> /김병조(국방대)

휴 식 16:00-16:10

### 제2회의 16:10-18:00 스마트한 통일준비, 무엇을 어떻게?

사 회	<b>박명규</b>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패 널	<b>박영호</b>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송호근</b> (서울대 교수) <b>황지환</b> (서울시립대 교수) <b>조명숙</b> (여명학교 교감) <b>송승환</b> (大學新聞 기자)

---

## 목 차

---

조사설계	006
1. 통일과 대북인식	
2014 통일인식조사: 대북 인식	014
2014 통일인식조사: 통일 인식	034
2. 대북정책과 주변국관계 인식	
2014 통일인식조사: 대북정책	048
2014 통일인식조사: 주변국 관계 인식	082
3. 계층과 통일인식	
2014 통일인식조사: 사회 계층과 통일, 북한 인식	100
4. 세대와 민주적 가치	
2014 통일인식조사: 세대와 민주적 가치	122

## 통일의식조사 2014: 조사설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10. 1

### 차례

조사의 목적

조사의 주요 내용

조사의 표본설계

조사의 실사 설계

조사의 방법 및 기간

응답자 특성

부록: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 조사의 목적

-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 ▶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의식변화를 연도별로 추적 및 비교하여,
- ▶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의 주요 내용

-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대북 사안별 시급성;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견해
  - ▶ 통일의 이익 정도 (남한/자기 자신);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상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정도
- ▶ 북한에 대한 인식
  -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 ▶ 북한 사회 인지도;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 대북 정책에 관한 견해
  - ▶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 ▶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 ▶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 주변국의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북·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 ▶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실인식
  -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정치적 성향
  - ▶ 지지정당;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 ▶ 다문화 관련 인식
- ▶ 응답자 특성
  - ▶ 지역; 지역크기; 성; 연령
  - ▶ 종교;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 ▶ 가구소득수준; 가구소득계층; 사회계층; 생활수준 개선도
  - ▶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역

## 조사의 표본설계

- ▶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 ▶ 표본크기: 1,200명 (유효표본)
- ▶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 ▶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 ▶ 표본오차  $\pm 2.8\%$  (95% 신뢰수준)

## 조사의 실사 설계

- ▶ 실사지도원 교육: 조사 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며, 면접원 교육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
- ▶ 면접원 선정: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
- ▶ 면접원 교육: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포괄적으로 교육.
- ▶ 면접원 통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함.
- ▶ 검증조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본 연구소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 및 기간

-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 ▶ 조사기간: 2014년 7월 1일 - 7월 22일 (21일간)
- ▶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 가구소득수준 ■	200만원 미만	(106)	8.8	(99)	8.2
	200~299만원	(233)	19.4	(227)	18.9
	300~399만원	(397)	33.1	(393)	32.8
	400만원 이상	(464)	38.7	(481)	40.1
■ 지역 별 ■	수도권	(505)	42.1	(608)	50.6
	충청권	(149)	12.4	(120)	10.0
	호남권	(146)	12.2	(115)	9.6
	영남권	(326)	27.2	(309)	25.7
	강원제주	(44)	3.7	(35)	2.9
■ 지역 크기 ■	대도시	(30)	2.5	(13)	1.1
	중·소도시	(552)	46.0	(580)	46.7
	읍 / 면	(500)	41.7	(507)	42.2
■ 정치적 성향 ■	진보적	(148)	12.3	(134)	11.1
	중도	(329)	27.4	(333)	27.7
	보수적	(575)	47.9	(580)	48.3
	모름 / 무응답	(295)	24.6	(286)	23.8
■ 종교 별 ■	불교	(1)	0.1	(1)	0.1
	기독교	(266)	22.2	(257)	21.4
	천주교	(235)	19.6	(243)	20.3
	기타	(72)	6.0	(73)	6.1
	종교 없음	(4)	0.3	(3)	0.2
	모름 / 무응답	(601)	50.1	(603)	50.3

###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200)	100.0	(1,200)	100.0	
■ 성 별 ■	남자	(609)	50.8	(612)	51.0
	여자	(591)	49.3	(588)	49.0
■ 연령 별 ■	19 ~ 29 세	(248)	20.7	(248)	20.7
	30 대	(265)	22.1	(269)	22.4
	40 대	(304)	25.3	(304)	25.4
	50대 이상	(383)	31.9	(378)	31.5
■ 교육수준별 ■	중졸 이하	(92)	7.7	(89)	7.4
	고졸	(517)	43.1	(518)	43.2
	대재 이상	(589)	49.1	(591)	49.3
	모름 / 무응답	(2)	0.2	(2)	0.2
■ 직업 별 ■	농/수/축산업	(16)	1.3	(15)	1.2
	자영업	(214)	17.8	(203)	17.0
	블루칼라	(307)	25.6	(307)	25.6
	화이트칼라	(307)	25.6	(314)	26.2
	전업주부	(224)	18.7	(230)	19.1
	무직 / 기타	(131)	10.9	(130)	10.8
	모름 / 무응답	(1)	0.1	(1)	0.1

###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 %	1,000 ± %	1,200 ± %	2,000 ± %	3,000 ± %
50	4.4	3.1	<b>2.8</b>	2.2	1.8
40 or 60	4.3	3.0	2.8	2.1	1.8
30 or 70	4.0	2.8	2.6	2.0	1.6
20 or 80	3.5	2.5	2.3	1.8	1.4
10 or 90	2.6	1.9	1.7	1.3	1.1

\* 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200이므로 최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정도임

---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

# 통일과 대북인식

---

발표

01

- 
- 2014 통일의식조사  
: 대북 인식 / 김병로(서울대)
  - 2014 통일의식조사  
: 통일 인식 / 정은미(서울대)

## 2014 통일의식조사: 대북 인식

김병로(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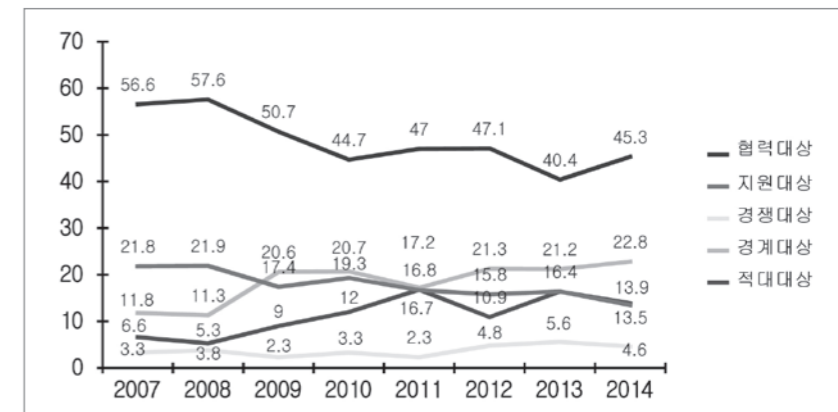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사건 혹은 정황은 어떤 것일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2013년 12월 12일에 전격적으로 집행된 장성택 처형은 남한주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제2인자로 섭정을 해오던 장성택 부장이 회의장에서 체포되고 목덜미를 잡혀 군사재판장에 끌려 나오는 모습, 판결 즉시 전격 처형된 소식은 너무 끔찍한 소식이었다.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해 걸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월 6일 '통일대박' 슬로건을 앞세우며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1월 30일부터 전면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남북의 이러한 제안이 이산가족상봉으로 이어져 2월 20일에서 25일까지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협력은 거기까지였다. 북한이 기대했던 금강산관광재개나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정책변화는 나오지 않았고,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통일대박 구상은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구체화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정부의 통일준비 논의가 세월호 사건(4.16)으로 다소 침체되었지만 7월 15일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으로 다시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북한은 자신들의 중대제안이 무산되자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미사일발사 등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박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전을 전개했다. 5월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뼈라를 뿌리듯, 북한에서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여기저기서 발견되어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와 같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남북간의 대립이 2014년 7월 조사에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45.3%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22.8%, ‘지원대상’이라는 대답은 13.5%,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13.9%,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4.6% 등이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40.4%→45.3%로 4.9%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작년에 10.9%→16.4%로 상승했던 대북 ‘적대의식’은 올해 16.4%→13.9%로 다소 누그러졌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극단적 적대의식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북 ‘경계의식’은 21.2%→22.8%로 여전히 지속되었다. 작년 상반기에 격렬한 대립을 지속하던 남북관계가 올해 연초부터 이산가족상봉과 통일대박 담론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으나, 대북 경계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말해준다.

<그림 1> 남북한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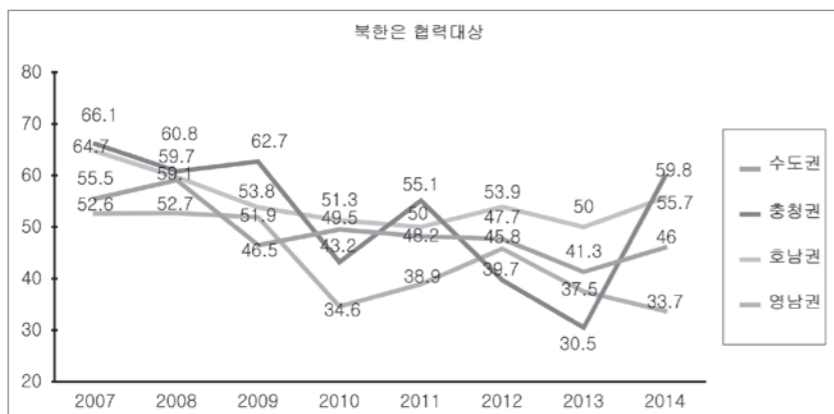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종교별 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지역변수만이 유일하게 뚜렷한 상관성(카이제곱=0.00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지난 1년 사이에 충청권이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30.5%→59.8%로 29.4% 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상향 이동을 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충청권<영남권<수도권<호남권의 순으로 충청권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왔다. 북한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북 협력인식의 과거 추이를 보면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호남권이 가장 높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그 뒤를 잇는 순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충청권은 대북 협력 대상 인식의 기폭이 매우 커서 2007~09년 시기에는 호남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심지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인 2011년에도 대북협력의식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가장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보여주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장 호의적인 대북인식을 기록했다. 올해 충청권의 대북 협력인식이 급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의 통일대박 담론과 통일준비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이 국가적, 사회적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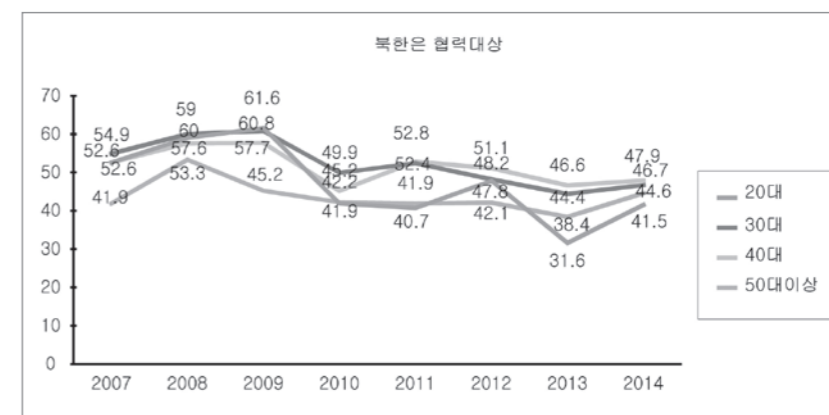
<그림 2>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연령별 대북 협력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올해 각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좁혀지는 세대 간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다. 작년에도 연령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카이제곱=0.063)는 없었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령대별 차이(카이제곱=0.368)가 크게 줄었다. 20대 연령층의 변화가 흥미로운데 대북협력의식에서 20대 연령층이 가장 높게 포진되어 있고, 대북협력

의식에서도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 50대이상 연령층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10년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며, 2013년 상반기에는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시기로, 이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에는 각 연령층간 의식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세대 간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다.

<그림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55.7%로 “변하고 있다”(44.3%)는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44.3%로 8.5% 포인트 많아졌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은 68.9%(2007년)→50.5%(2008년)→45.1%(2009년)→44.9%(2010년)→45.0%(2011년)→46.8%(2012년)→35.7%(2013년)→44.3%(2014년)로 2007년 이후 줄곧 낮아져 작년에 35.7%로 최저점을 찍은 후 올해 44.3%로 상승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카

이제곱=0.001)과 종교(0.046) 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이 61.1%로 영남권(40.7%)과 수도권(42.8%), 충청권(45.3%)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은 1년 사이에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4.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북한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역별로 변동이 매우 심했는데, 2012~2014년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3년에 급락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영남권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수도권은 41.3%→32.4%→42.8%, 충청권은 57.8%→26.3%→45.3%, 호남권은 55.7%→46.5%→61.1%로 작년에 형성되었던 부정적 인식이 올해 긍정적 인식으로 회복된 반면, 영남권은 40.5%→50.6%→40.7%로 북한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등락의 폭에 있어서 충청권은 매년 20~30% 포인트라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이처럼 기복이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내의 정권교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충청권이 가장 민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은 종교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는데, 종교별로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기독교(49.4%)>무종교(44.4%)>불교(40.2%)>천주교(3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개신교)가 북한변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면, 천주교는 북한의 변화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고, 불교와 무종교는 그 중간을 차지하였다. 연령별 차이는 북한변화 인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지면서 세대별 차이가 없어지고 의견이 수렴되었다. 재작년에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작년과 올해에는 세대별 차이가 사라졌다. 지난 5년간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던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전반적인 대북 비판의식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40대나 30대의 세대가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정권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이 55.4%로 안정될 것(12.4%)이라는 응답보다 4.5배 이상 많았다. 32.2%는 ‘그저그렇다’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변화를 보면 북한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50.9%→57.1%→55.4%로 남한주민들은 대체로 북한정권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 ‘정권안정화’는

지역(0.000), 지지정당(0.041)과만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즉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호남권(15.5%)에서 가장 높고 영남권(9.0%)이 가장 낮으며 수도권(14.3%)과 충청권(11.7%)은 그 중간을 차지한다. 그런데 충청권은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47.3%로 다른 지역(50%이상)에 비해 가장 낮은 의견을 보였으며 ‘그저그렇다’는 중간적 평가에 많은 의견(41.0%)이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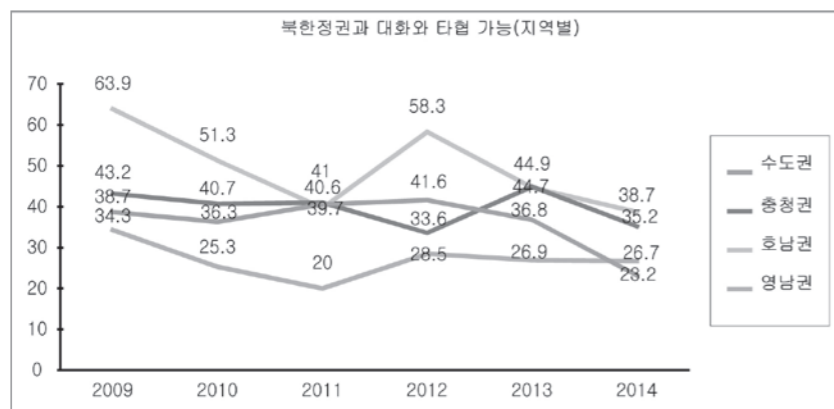
###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신뢰도)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72.5%로 “가능하다”(27.5%)는 응답보다 3배 가량 많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40.9%(2009년)→34.9%(2010년)→34.3%(2011년)→39.3%(2012년)→35.8%(2013년)→27.5%(2014년)로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 1년 사이에만 해도 8.2% 포인트가 떨어졌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불신이 최근에 이르러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지역(0.000), 정치성향(0.004), 지지정당(0.001) 변수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호남권(38.7%)>충청권(35.2%)>영남권(26.7%)>수도권(23.2%)의 순으로 신뢰도를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대북불신이 심화되어 영남권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옴으로써 영남권과 수도권이 한 그룹을 이루고 호남권과 충청권이 다른 한 그룹을 이루는 형국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북신뢰도가 하락한 반면 영남권에서만은 그대로 유지된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마도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이 현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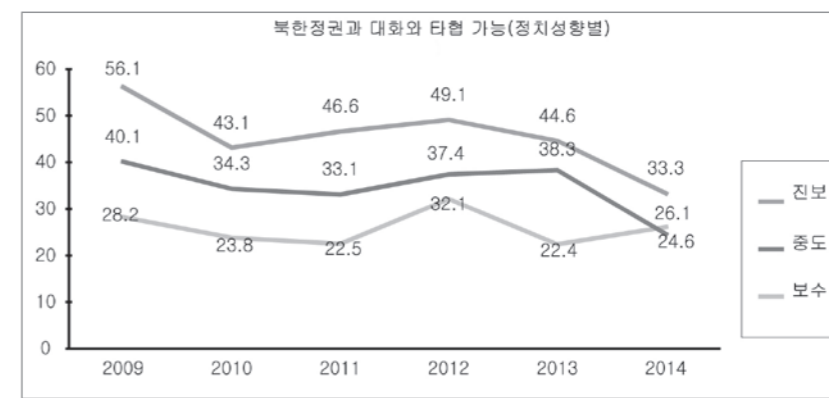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0.004)를 갖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유지하였다. 즉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패턴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단일변수로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유력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중도가 중간적 입장을 철회하고 보수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작년과 비교할 때 진보와 중도에서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반면, 보수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즉 진보는 44.6%→33.3%로, 중도는 38.3%→24.6%로 대북신뢰도가 낮아진 반면 보수는 22.4%→26.1%로 높아졌다. 보수의 이러한 반응은 위에서 추측하였듯이 현 정부의 통일담론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들어 현 정부가 통일대박과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러한 통일정책에 지지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의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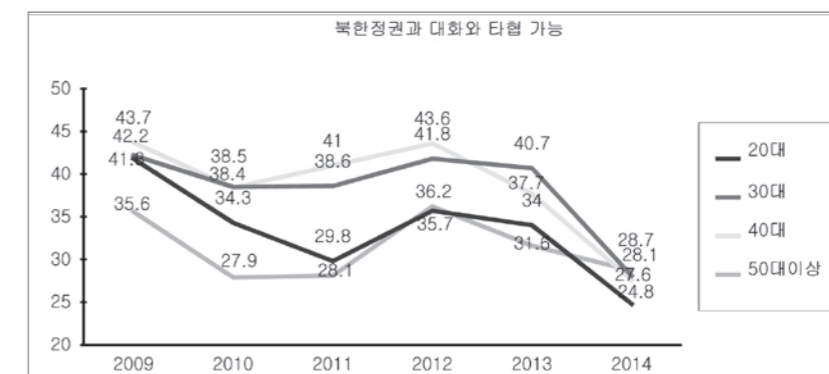
관련 정책제안들이 실현되려면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중도가 모두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진 상황에서 보수가 유독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북한정권 자체에 신뢰를 보였다고보다는 현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세대별 인식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렴현상이 진행되어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각 세대로 30대~40대와 20대·50대 두 그룹으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작년의 경우처럼 각 연령대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정권 신뢰도가 하락하여 세대간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8.0%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작년의 84.6%에서 올해 3.4% 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시계열로 보면 2008년에 71.7%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에 83.7%로 12% 포인트가 높아졌고 그 후 80%대를 지속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1.7%→83.7%로 12% 포인트가 늘어났으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는 85.9%→84.6%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한 터라 3차 핵실험은 남한주민들의 북핵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북한위기의식

###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5.5%, “다소 위협을 느낀다” 53.7%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78.4%보다 10.9%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시계열로 보면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 61.3%→74.3%로 70%대에 올라선 후, 73.8%(2010년)→80.7%(2011년)→80.4%(2012년)→78.4%(2013년)→89.3%(2014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던 2013년에는 그 이전 해에 비해 핵위협이식이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다가 올해 89.3%로 역대 최고의 위협수위로 올라섰다. 2014년 들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무인기 남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 지속적인 대남군사 위협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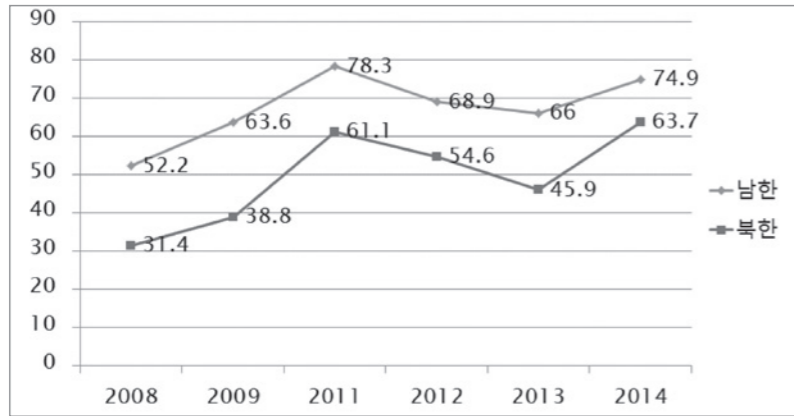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은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작년에는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53.8%였는데 올해는 55.3%로 큰 변화가 없었다.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은 대북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4.9%로 ‘없다’(25.1%)는 응답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가장 우려했던 2011년(78.3%) 이후 10% 포인트 낮아지다가 올해 다시 10% 포인트가 상승하여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발 안보불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부장의 전격 처형과 올해 들어 지속된 무력시위와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 등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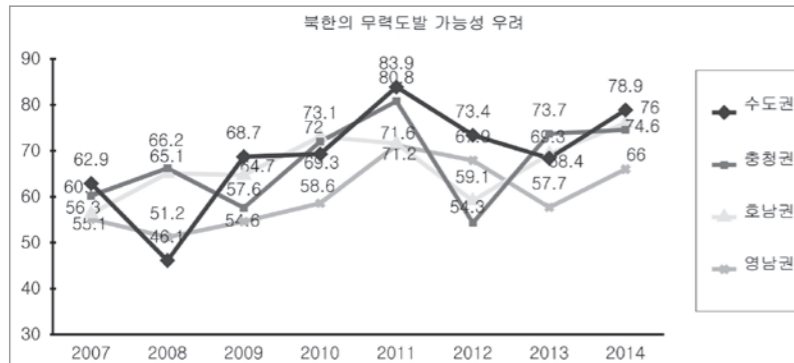
한편,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남한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3.7%, ‘없다’는 응답(36.3%)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도 남한발 무력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한 주민들의 안보불안의 실제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미국인 반면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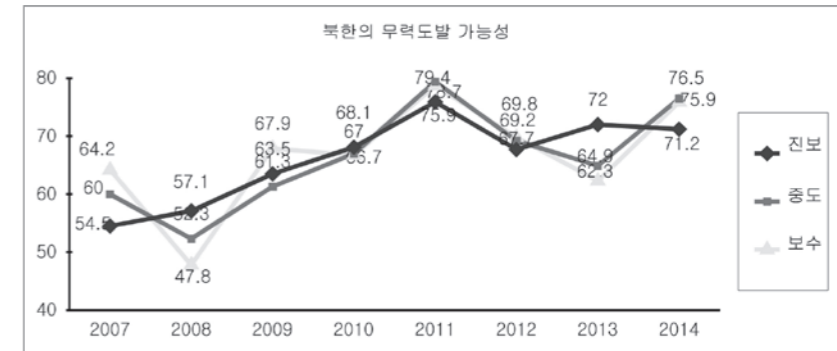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지역(0.003), 이념(0.002), 교육수준(0.002), 종교(0.006)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78.9%)>호남권(76.0%)>충청권(74.6%)>영남권(66.0%) 순으로 북한발 안보불안이 높았다. 작년에는 충청권이 가장 불안해 한 반면 올해는 수도권이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나왔다. 남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는 휴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보불안을 덜 느끼는 양상이 나타났다. 남북간 교류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권역별로 기복이 심해졌으나, 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은 대체로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영남권은 불안감이 낮은 양상은 과거와 비슷하다. 다만 충청권의 등락 폭이 심하다든가 호남권의 안보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다.

〈그림 8〉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은 중도(76.5%)보수(75.9%)진보(71.2%)로 작년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작년에는 전형적인 정권교체기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보수(69.8%)가 진보(67.7%)보다 안보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진보(72.0%)>보수(62.3%)로 진보가 안보불안을 훨씬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즉 진보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보수는 그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역전의 역전 현상은 정권교체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 한 반면,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사라지고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의 도발을 높게 보는 평년의 패턴으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이 정권교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64.0%)<고졸(72.8%)<대재이상(78.3%)로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종교별로는 기독교(79.9%)>천주교(75.8%)>무종교(75.5%)>불교(70.0%)로 기독교(개신교)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고 천주교와 무종교는 중간, 그리고 불교는 그 가능성을 가장 낮게 예측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안보불안 측면에서는 기독교가 불안감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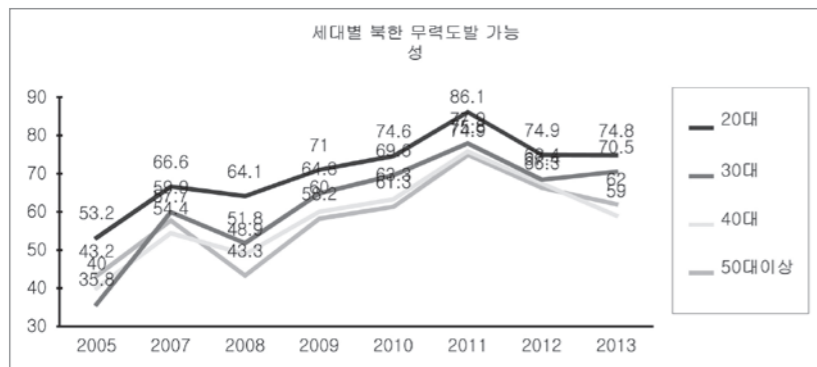
1) 이러한 정권교체 현상은 2008년에도 유사하게 전개된 적이 있다.

고 불교가 가장 낮으며 천주교와 무종교가 중간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안보불안이 상승하면서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20대가 가장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sup>2)</sup>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0.000), 연령(0.050) 변수가 통계적 상관성이 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미성(카이제곱=0.050)이 확인되었다.

즉 20대(74.8%)>30대(70.5%)>50대이상(62.0%)>40대(59.0%)로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의 안보불안이 상승하였다. 올해 변화의 특징은 30대가 북한발 무력도발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30대가 기존의 40~50대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20대 쪽으로 이동하는 변화, 즉 30대가 안보불안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림 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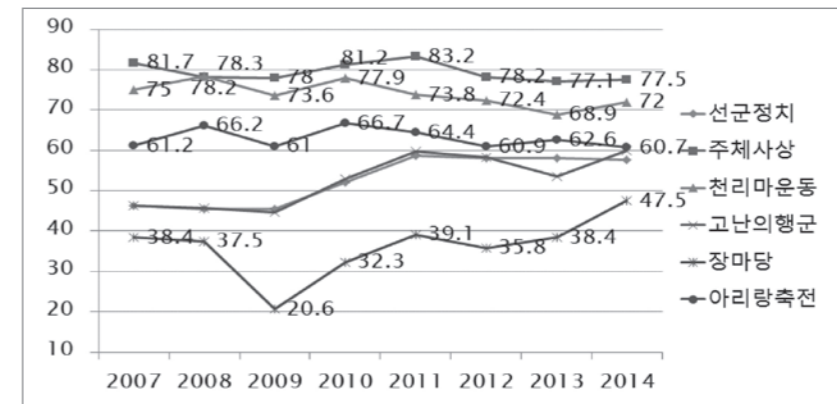
###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

2)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0.000), 연령(0.050) 변수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미성(카이제곱=0.050)이 확인되었다.

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4년에는 작년과 비교할 때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등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사건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2.6% 포인트 하락한 후 2013년에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올해 약간 상승하였다. 2014년에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신설, 북중 경제협력 관련 소식 등 북한발 경제소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통일대박 담론이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1〉 북한사회 인지도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자는 4.3%(2011년)→4.1%(2012년)→3.4%(2013년)→2.8%(2014년), 대북지원활동이나 단체참여 경험도 2.0%(2011년)→1.4%(2012년)→1.3%(2013년)→0.9%(2014년)로 감소하였고,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도 10.9%(2009년)→13.8%(2010년)→16.2%(2011년)→19.0%(2012년)→21.8%(2013년)→13.9%(2014년)로 작년보다 7.9%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46.2%(2009년)→37.4%(2010년)→31.5%(2011년)→32.3%(2012년)→27.3%(2013년)→31.5%(2014년)로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줄어든 것은 최근 새터민 입국이 감소한 추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이 증가한 것은 국내의

통일담론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북한관련 소식과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1.0%), 생활수준(93.6%), 역사인식(83.4%), 언어사용(83.6%), 생활풍습(83.3%), 가치관(91.8%) 등 모든 분야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북의 이질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91.9%(2011년)→90.6%(2012년)→88.9%(2013년)→87.8%(2014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남북 간에 전반적으로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이질성 인식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사회를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남한	북한
선거방식	91.0	97.3
생활수준	93.6	98.7
역사인식	83.4	95.3
언어사용	83.6	97.3
생활풍습	83.3	91.9
가치관	91.8	93.3

## 6. 소결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특징은 첫째,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북한발 안보불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대북신뢰도'가 지난 1년 사이에 8.3% 포인트 감소(35.8%→27.5%)하였고 2011년을 정점(78.3%)으로 누그러지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이 10% 포인트가 상승(66.0%→74.9%)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장성택 처형과 올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무력시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위협 의식이 89.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88%로 이 수치 역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핵에 대한 불안과 해결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의식이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다 생각된다.

둘째,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 의식은 높아졌다.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는 4.9% 포인트 증가(40.4%→45.3%)한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의식은 16.4%→13.9%로 다소 누그러졌다. 전반적으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이 최고조로 상승한 가운데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북불신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진 것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를 표출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부정적·비관적 대북인식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대별 의식의 격차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북 협력대상 인식과 신뢰도, 안보불안 의식 등 대부분의 대북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 '협력대상' 인식이나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신뢰도), 북한발 안보불안의식 등 대부분의 대북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없고 한 곳으로 모이는 세대 간 수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영남권)하거나 소폭 증가(수도권, 호남권)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대폭(30.5%→59.8%) 상승하였다. 충청권은 2년 연속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가장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에는 가장 높은 위치로 상승하는 특이한 변화를 보였다. 또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 라는 북한정권 신뢰도에서도 충청권은 호남권과 한 그룹을 이루고 수도권은 영남권과 한 그룹을 이루는 양상이었다. 충청권의 이러한 극단적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진행된 정부 통일정책과 활동, 그리고 북한발 사건에 충청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북한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되었으나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으며 중도가 보수로 수렴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남북한 관계 인식에서는 정치성향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북한정권 안정화를 예측하는 항목에서도 정치성향은 유력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다만,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신뢰도' 항목은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2014년에도 유의미했으나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중도의 보수화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미 작년부터 나타났고 올해에도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의식이 최고조로 상승한 가운데 그럼에도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불신과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하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변수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좁혀지는 대북인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30대가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세대간 대북인식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나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성향별 격차는 더 좁혀지고 있다.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나 충청권의 기복이 심하여 이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불확실하다. 세대 간 의식의 수렴, 중도의 보수화, 충청권의 부상 등 2014년 대북인식의 변화가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에서 형성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트렌드의 과정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판적 대북인식의 강화가 어떠한 정책요구로 나타나는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014 통일의식조사: 대북 인식(요약)

김병로(서울대)

### 1.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북한발 안보불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정적, 비판적 대북인식이 최고조에 이름.

-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대북신뢰도'가 35.8%→27.5%로 지난 1년 사이에 8.3% 포인트 감소, 이는 2007년 조사 이래 최저 수치
- 2011년을 정점(78.3%)으로 누그러지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이 66.0%→74.9%로 10% 포인트가 상승
- 북핵위협은 작년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89.3%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수치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는 88%로 이 수치 역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 장성택 처형과 올 들어 잦아진 북한의 무력시위가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임

### 2. 그럼에도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은 40.4%→45.3%로 4.9%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의식은 16.4%→13.9%로 다소 감소

- 북한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를 표출한 것으로 보임

### 3. 부정적·비판적 대북인식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대별 의식의 격차가 좁혀지는 수렴현상 진행

- '협력대상' 인식이나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신뢰도),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 등 대부분의 대북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없고 한 곳으로 모이는 세대 간



수렴현상 뚜렷

#### 4.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

- 다른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영남권)하거나 소폭 증가(수도권, 호남권)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대폭(30.5%→59.8%) 상승
- 충청권은 2년 연속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에는 가장 높은 위치로 상승하는 극심한 기복현상을 보임
-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진행된 정부 통일정책과 활동, 그리고 북한발 사건에 충청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임

#### 5. 대북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되었으나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으며 중도가 보수로 수렴되는 '중도의 보수화' 현상이 진행됨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신뢰도' 항목은 지난 7년간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이었음
- 2014년에는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
- 북한의 핵위협 및 무력도발 가능성 등 안보불안이 고조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6. 결론적으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인식이 최고조로 상승한 가운데 그럼에도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존, 국민들의 북한발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북불신과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하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변수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좁혀지는 대북인식의 수렴현상 진행
-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성향별 격차는 더 좁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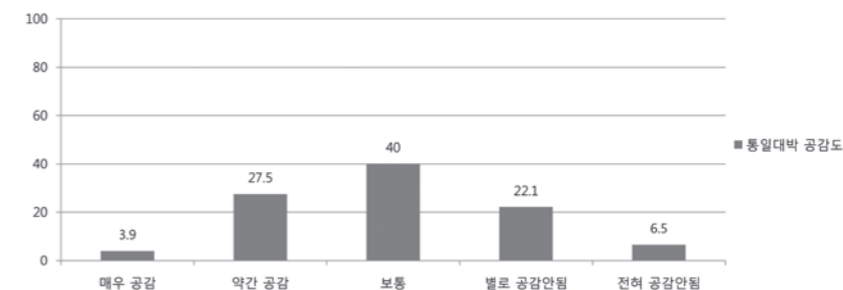
-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나 충청권의 기복이 심하여 이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불확실
- 세대 간 의식의 수렴, 중도의 보수화, 충청권의 부상 등 2014년 대북인식의 변화가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에서 형성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의 과정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4 통일의식조사

## : 통일 인식

2014.10.1(수)  
정은미(IPUS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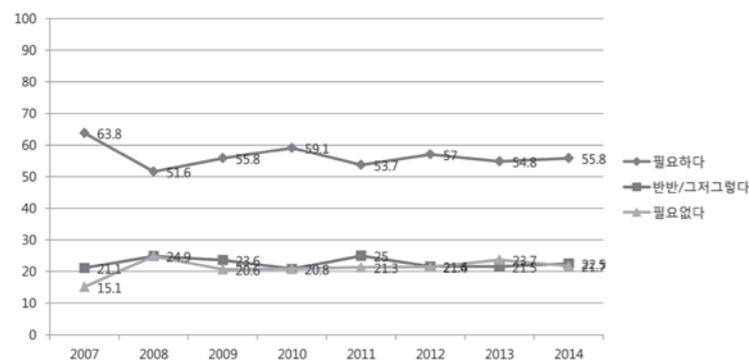
###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 현정부의 '통일대박론' 공감률 31.4%에 불과
- 여성보다 남성 공감수준 높음 (여성 29.6%, 남성 32.4%)
- 연령간 격차 크게 나타남 (20대 21.8%, 30대 24.3%, 40대 33.4%, 50대이상 40%)
- 제주지역 제외 강원 공감도 가장 높고(43%), 충청권 가장 낮음(20.5%). 영남권보다 오히려 호남권 공감도 더 높음(영남 33.3%, 호남 35%)
- 진보 성향보다 보수성향의 공감도가 더 높음, 중도 성향의 공감도 가장 낮음 (진보 34.1%, 중도 25.8%, 보수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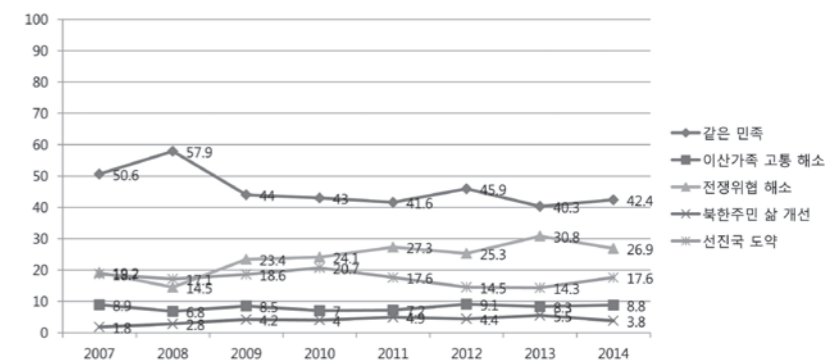
3

###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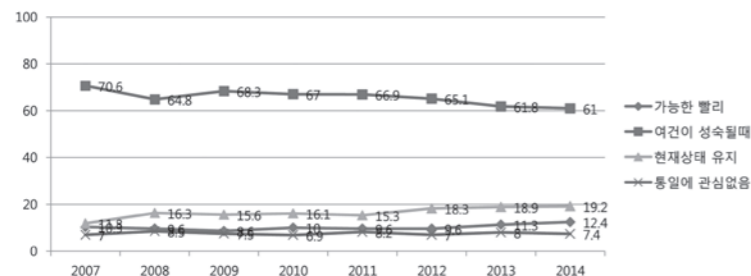
- 전년 대비 통일의 필요성 소폭 상승(1%p), 연초 박근혜대통령 '통일대박론' 제기와 독일 드레스덴 선언, 주요 일간지 '통일' 연속 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이슈 관련 사회적 분위기 띄우기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 크게 높아지지 않음
- '통일 필요없다' 응답률 전년 23.7%에서 올해 21.7%로 감소한 것이 주목할 사항
- 성별 격차가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17.9%p→12.3%p). 남성 61.9%,여성 49.6%
- 19~29세 연령집단 전년 대비 통일 필요성 응답률 소폭 증가(40.4%→43.1%). 반면에 30대, 40대의 통일 필요 응답률 모두 감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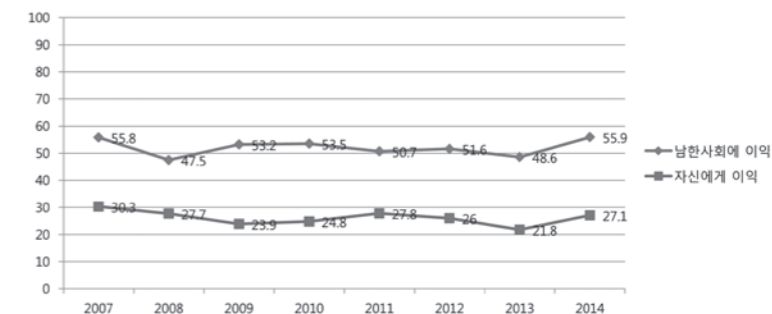
- '같은 민족이니까' 42.4%로 통일 이유 1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26.9% 전년대비 소폭 하락, 대신 '선진국 도약' 17.6% 전년대비 상승
- 같은 민족' 제외하면, 남성은 '선진국 도약'을, 여성은 '전쟁위협 해소'를 중시
- 20대 '전쟁위협 해소'에 가장 민감. 30대 '선진국 도약'을 중시
- 소득 낮을 수록 '같은 민족' 중시, 소득 높을 수록 '전쟁위협 해소' 중시
- 통일 이유에 대한 연령층간 격차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현실적 인식 경향 뚜렷

### 통일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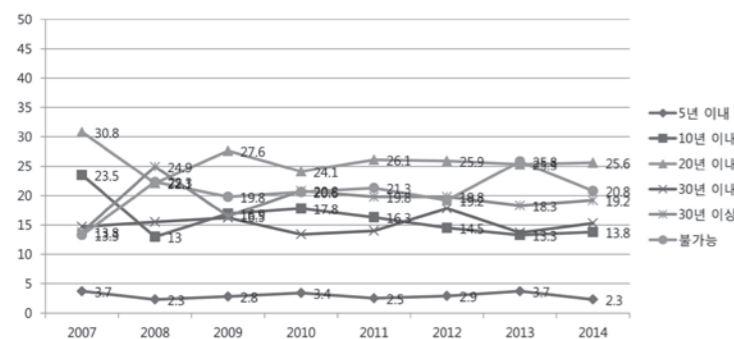
- '여건 성숙될 때 통일' 견해 61%,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여전히 압도적 비중 차지. 그러나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
- '현재상태가 좋다' 견해 19.2%,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 '가능한 빠른 통일' 견해 12.4%, 역대 최고 수치, 성별 간 격차 크게 나타남. 남성 15.4%, 여성 9.3%
- 20대, 30대 '현재상태가 좋다' 응답률 높은 패턴 유지, '통일 관심 없음' 응답률 높은 패턴 유지. 20대 '현재상태가 좋다' 응답률 28.6%로 역대 최고 수준
- '가능한 빠른 통일' 보수>진보>중도, '여건 성숙될 때 통일' 중도>진보>보수, '현재상태 유지' 보수>진보>중도

###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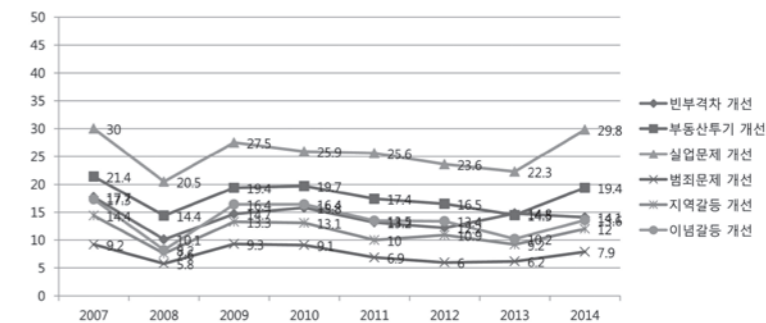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 응답 55.9%, 작년 대비 크게 증가.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효과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응답 27.1%, 전년 대비 증가
-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 수준 더 높음(10%p 차이)
- 남한사회 이익에서는 연령이 높을 수록 기대수준 높고, '자신에게 이익'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수준 높음
- 교육수준 높을수록 기대감 높고, 낮을수록 기대감 낮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강원도의 기대수준이 높고, 영남권의 기대수준이 가장 낮음

### 통일 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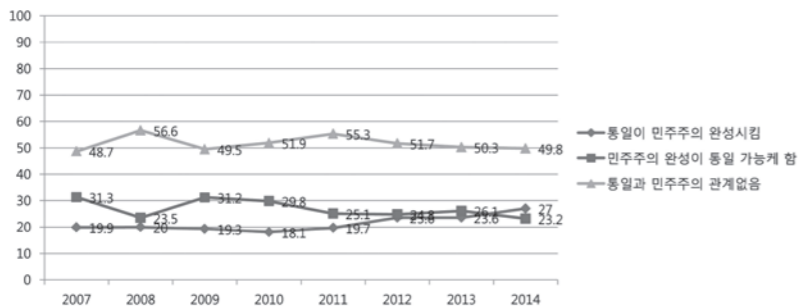
- '20년 이내 통일' 응답률 25.6% 1위, 2013년에 예외적으로 2위였다가 다시 1위로 복귀
- 2위인 '통일이 불가능하다' 20.8%, 전년 대비 감소폭 큼.
- '30년 이내'와 '30년 이상' 응답률 소폭 증가
- '5년 이내 통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통일 불가능' 응답-성별격차 전년 대비 크게 좁혀짐(2013년 11.9%p→2014년 3.6%p). 여성의 통일 회의적 시각 크게 감소. 젊은 층일수록 통일 불가능 응답률 높아짐(20대 30.5%, 30대 23.5%, 40대 22.6%, 50대 19.6%). 영남권 28.1% 최고, 충청권 16.4%로 최저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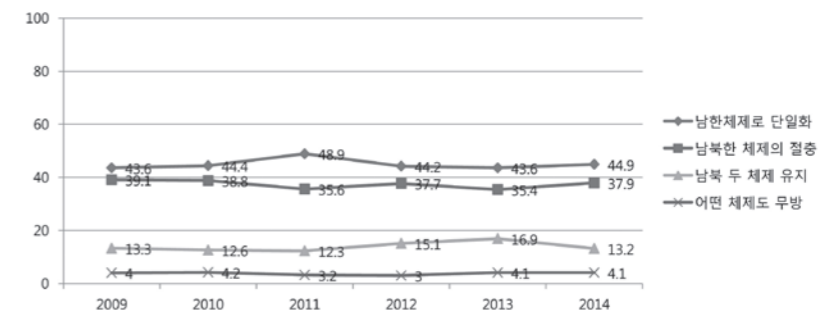
- 빈부격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문제 개선 기대감 상승
-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 가장 높고, 범죄문제에 대한 우려 가장 높음, 실업문제 29.8%>부동산투기 19.4%>빈부격차14.1%>이념갈등13.6%>지역갈등 12%>범죄문제 7.9%
-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작년조사: 실업문제에서만 젊은층일수록 기대감 수준 높게 나타남)
- 전년대비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실업문제 개선 7.5%p ↑, 부동산투기 개선 4.6%p ↑), 통일대박론 효과?

###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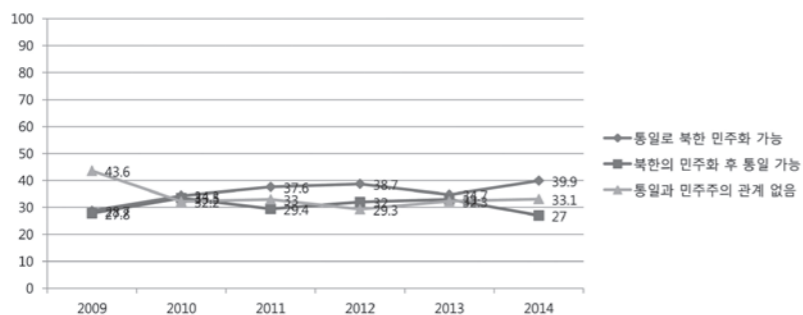
- 전년과 달리 통일이 돼야 남한에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응답(23.6%→27%)이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26.1%→23.2%)보다 더 많음
- 2012년부터 통일과 민주주의 아젠다가 서로 경합하는 추세가 지속됨
- 여전히 통일과 민주주의를 독립된 사회과제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 지속
- 연령별 분포, 나이들수록 통일 우선, 젊은층일수록 민주주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생각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 우선, 높을수록 민주주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생각
- 보수와 중도성향은 통일 우선, 진보 성향은 민주주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생각

###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 '남한의 현체제로 단일화' 44.9%로 가장 많으나 '남북한 체제의 절충' 37.9%로 두 견해간 격차가 크지 않음
-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국가연합/연방제) 13.2%로 전년대비 감소
- 연령별 분포, '남한의 현체제로 단일화' 30대(49.2%)와 40대(39.3%) 간 격차가 10%p 정도로 큼. '남북한 체제 절충'은 20대가 39.9%로 가장 높음
- 소득수준별 분포, 높을수록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희망, 낮을수록 절충형 선호
- 지역별 분포,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영남권(63.4%)이 압도적으로 높음(타지역 30%대 응답률)
- 보수 성향은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선호, 진보 성향은 절충형 선호

### 북한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



- 작년에 세 응답이 수렴되던 것과 달리 올해 다시 세 응답간 격차가 벌어짐
- 통일이 돼야 북한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견해 39.9%로 1위. 북한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27%로 3위
- 장기적 추세로 보면, 북한의 자생적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통일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북한의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높음
- 연령별 분포,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30대에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호남과 강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음

### 요약 및 결론

- 박근혜 대통령의 연초 '통일대박론', 독일 드레스덴 선언, 주요 일간지 '통일' 연속 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관련 사회적 분위기 형성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통일 대박론 공감률 31.4%)
- 그러나, 통일 인식 관련 많은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소폭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통일대박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전년과 대조적으로 '통일 필요하다' 응답 소폭 증가, '통일 필요없다' 응답 소폭 감소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 여전히 1위, 비록 장기적으로는 하향세이더라도 민족주의 담론이 통일의 주요 견인력
-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해야 한다' 견해가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나 2009년 이후 하락세인 반면, 빠른 통일에 대한 견해가 꾸준히 증가세
-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단기내(5~10년) 통일보다는 20년 이상 먼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더 많음.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 여전히 많은 비중 차지해 우리 사회 안에 통일회의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가져다 줄 남한사회와 개인에 대한 이익 기대감 전년대비 동반 상승,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효과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전년대비 대부분 상승 (빈부격차 문제 개선 기대감만 하락)
- 특히, 실업문제와 부동산문제 개선 기대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 전년과 대조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우 모두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견인적 역할에 대한 응답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완성 응답보다 더 많음
- 젊은 층일수록 민주주의 완성에,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의 견인력을 중시하는 경향
-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체제로 단일화' 응답이 가장 많으나, '남북한 체제의 절충' 응답과 큰 격차 보이지 않음
- 소득수준 높을수록 남한체제로 단일화, 낮을수록 절충형을 선호, 보수 성향은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를, 진보 성향은 절충형을 선호

## 요약 및 결론

- 박근혜 대통령의 연초 '통일대박론', 독일 드레스덴 선언, 주요 일간지 '통일' 연속 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관련 사회적 분위기 형성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통일 대박론 공감률 31.4%)
- 그러나, 통일 인식 관련 많은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소폭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통일대박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전년과 대조적으로 '통일 필요하다' 응답 소폭 증가, '통일 필요없다' 응답 소폭 감소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 여전히 1위, 비록 장기적으로는 하향세이더라도 민족주의 담론이 통일의 주요 견인력
-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해야 한다' 견해가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나 2009년 이후 하락세인 반면, 빠른 통일에 대한 견해가 꾸준히 증가세
-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단기내(5~10년) 통일보다는 20년 이상 먼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더 많음.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 여전히 많은 비중 차지해 우리 사회 안에 통일회의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줌성향은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를, 진보 성향은 절충형을 선호
- 통일이 가져다 줄 남한사회와 개인에 대한 이익 기대감 전년대비 동반 상승,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효과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전년대비 대부분 상승(빈부격차 문제 개선 기대감만 하락)
- 특히, 실업문제와 부동산문제 개선 기대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 전년과 대조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우 모두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견인적 역할에 대한 응답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완성 응답보다 더 많음
- 젊은 층일수록 민주주의 완성에,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의 견인력을 중시하는 경향
-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체제로 단일화' 응답이 가장 많으나, '남북한 체제의 절충' 응답과 큰 격차 보이지 않음
- 소득수준 높을수록 남한체제로 단일화, 낮을수록 절충형을 선호, 보수 성향은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를, 진보 성향은 절충형을 선호

## 2014 통일의식조사: 통일 인식(요약문)

정은미(서울대)

### 1. 설문 문항별 결과

#### 1) 통일의 필요성

- 전년 대비 통일의 필요성 소폭 상승(1%p)
- 연초 박근혜대통령 '통일대박론' 제기와 독일 드레스덴 선언, 주요 일간지 '통일' 연속 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이슈 관련 사회적 분위기 띄우기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 크게 높아지지 않음('통일대박론' 공감률 31.4%)
- '통일 필요없다' 응답률 전년 23.7%에서 올해 21.7%로 감소한 것이 주목할 사항
- 20대 연령집단 전년 대비 통일 필요성 응답률 소폭 증가(40.4%→43.1%), 반면에 30대, 40대의 통일 필요 응답률 모두 감소
- 통일 이유
  - '같은 민족이니까' 42.1%로 통일 이유 1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27%로 2위, 전년대비 소폭 하락
  - 남성은 '선진국 도약'을, 여성은 '전쟁위협 해소'를 중시

#### 2) 통일 이유

- '같은 민족이니까' 42.4%로 통일 이유 1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26.9%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대신 '선진국 도약' 17.6%로 전년대비 상승
- 남성은 '선진국 도약'을, 여성은 '전쟁위협 해소'를 중시
- 20대 '전쟁위협 해소'에 가장 민감. 30대 '선진국 도약'을 중시

#### 3) 통일의 추진 방식

- '여건 성숙될 때 통일' 견해 61%,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 유지. 여전히 압도적 비중 차지. 그러나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
- '현재상태가 좋다' 견해 19.2%,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 20대, 30대 '현재상태가 좋다' 응답률 높은 패턴 유지, '통일 관심 없음' 응답률 높은 패턴 유지. 20대 '현재상태가 좋다' 응답률 28.6%로 역대 최고 수준
- '가능한 빠른 통일' 보수>진보>중도, '여건 성숙될 때 통일' 중도>진보>보수, '현재상태 유지' 보수>진보>중도

#### 4) 통일 가능 시기

- '20년 이내 통일' 응답률 25.6%로 1위, 2013년에 예외적으로 2위였다가 다시 1위로 복귀
- 2위인 '통일이 불가능하다' 20.8%, 전년대비 감소폭 큼
- '30년 이내'와 '30년 이상' 응답률 소폭 증가, '5년 이내 통일' 전년대비 소폭 감소
- '통일 불가능' 응답-성별격차 전년대비 크게 좁혀짐(2013년 11.9%p→2014년 3.6%p). 여성의 통일 회의적 시각 크게 감소. 젊은 층일수록 통일 불가능 응답률 높아짐(20대 30.5%, 30대 23.5%, 40대 22.6%, 50대 19.6%)

#### 5)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 응답 55.9%, 작년 대비 크게 증가,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효과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응답 27.1%,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 수준 더 높음(10%p 차이)
- 남한사회 이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수준 높고, '자신에게 이익'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수준 높음
- 교육수준 높을수록 기대감 높고, 낮을수록 기대감 낮음

## 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 빈부격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문제 개선 기대감 상승
-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 가장 높고(29.8%), 범죄문제에 대한 기대감 가장 낮음(7.9%)
- 전년대비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통일대박론 효과

## 7)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

- 남한과 북한의 경우 모두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견인적 역할에 대한 응답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완성 응답보다 더 많음
- 남한의 경우, 2012년부터 통일과 민주주의 아젠다가 서로 경합하는 추세
- 북한의 경우, 북한의 자생적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통일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북한의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높음

## 8)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 '남한의 현체제로 단일화' 44.9%로 가장 많으나 '남북한 체제의 절충' 37.9%로 두 견해간 격차가 크지 않음
- 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국가연합/연방제) 13.8%로 전년대비 감소
- 수준별 분포, 높을수록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희망, 낮을수록 절충형 선호
- 지역별 분포,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영남권(63.4%)이 압도적으로 높음(타지역 30%대 응답률)
- 보수 성향은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선호, 진보 성향은 절충형 선호

## 2. 시사점

박근혜 정부의 통일 관련 사회적 분위기 형성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통일 인식 관련 많은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소폭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통일대박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예비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발표

02

# 대북정책과 주변국관계 인식

- 2014 통일의식조사  
: 대북정책 / 장용석(서울대)
- 2014 통일의식조사  
: 주변국 관계 인식 / 송영훈(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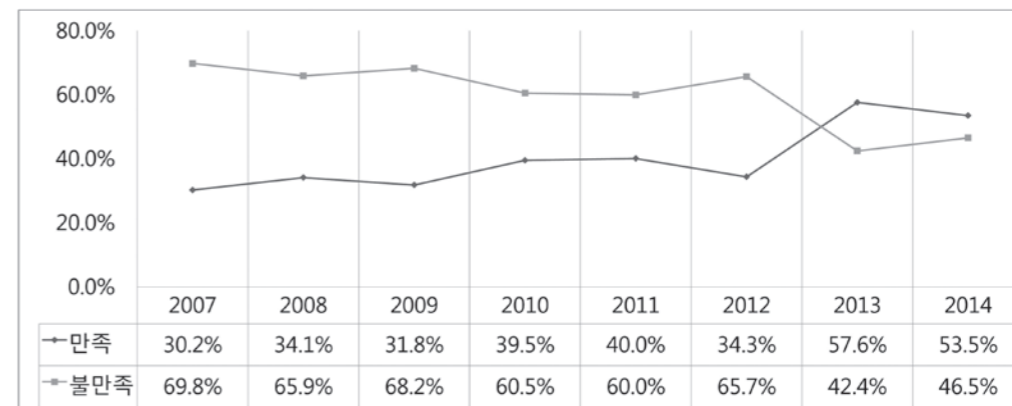


# 2014 통일외식조사 대북정책

2014.10.1(수)  
장용석(IPUS 선임연구원)

-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2.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 1-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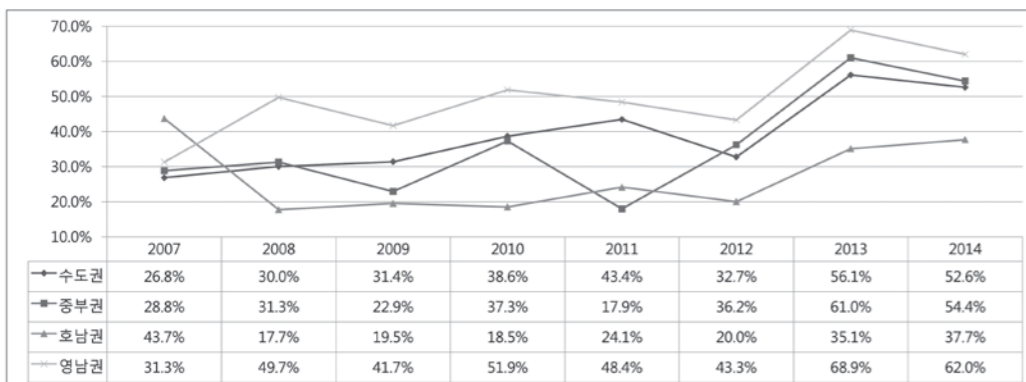
○ 만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오차범위 이내인 4.1%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50%를 상회

## 1-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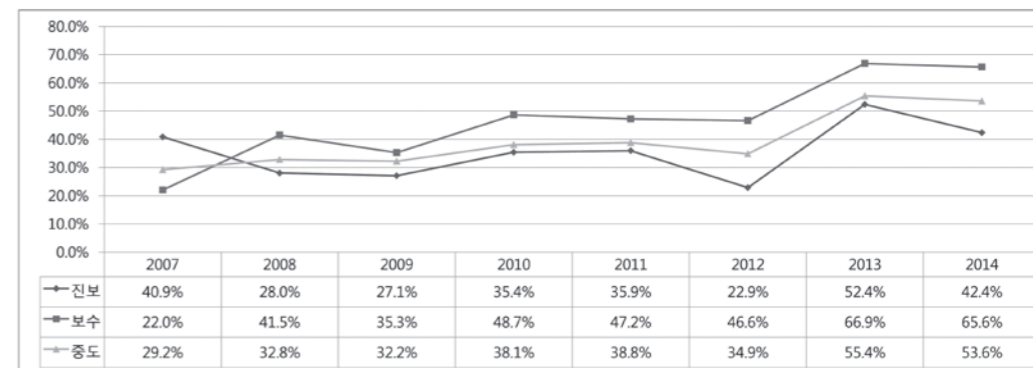
○ 50대 이상이 6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세대는 50% 전후로 수렴된 양상 지속

### 1-3.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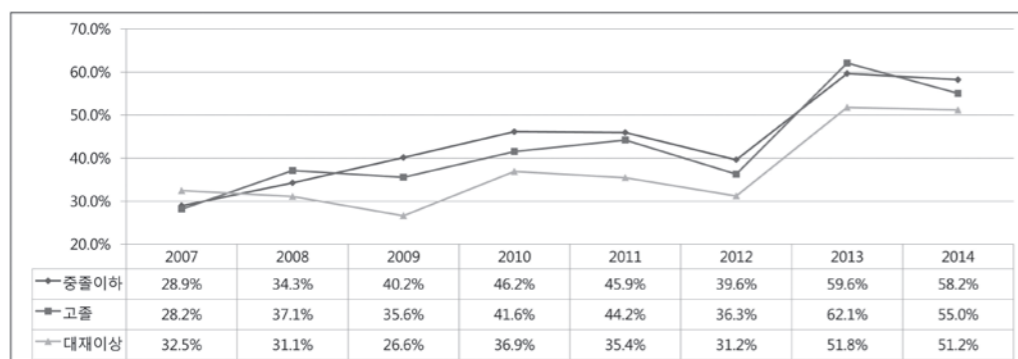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영남권(-6.9%)과 중부권(-6.6%), 수도권(-3.5%)에서 감소  
○ 2012년 이후의 영남권>수도권과 중부권>호남권의 차이 양상이 지속

### 1-5.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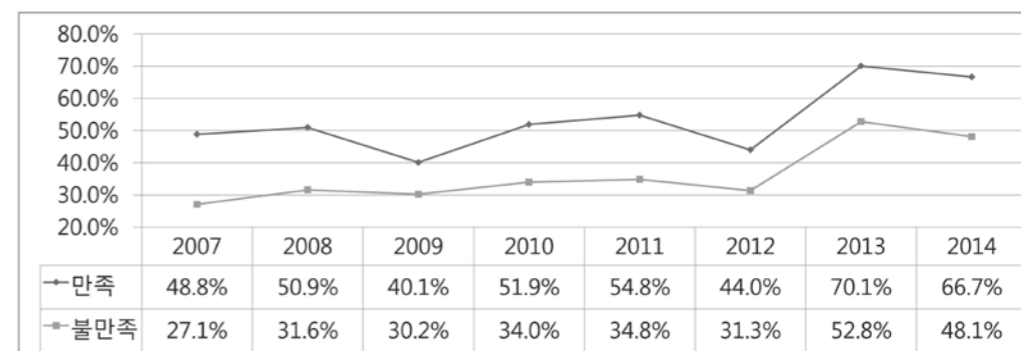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진보층 만족도가 10.0% 하락하였으나 보수와 중도는 비슷한 수준 유지  
○ 2008년 역전된 이후 추세 지속

### 1-4. 교육수준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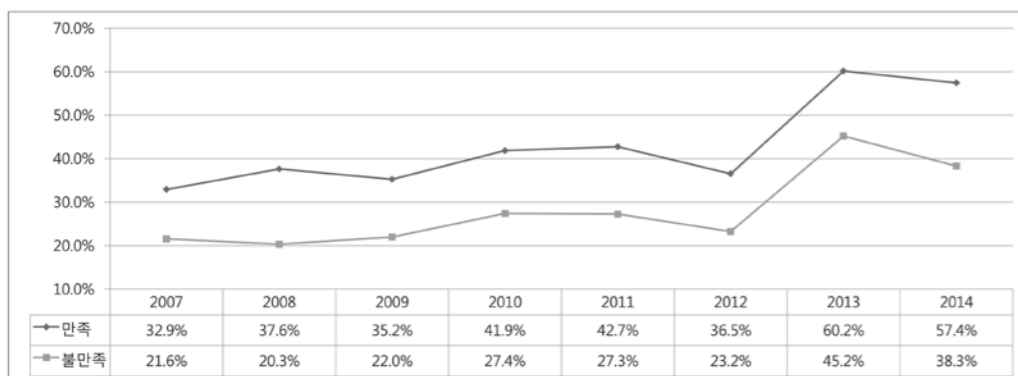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고졸학력 수준의 만족 비율이 7.1% 감소  
○ 2008년 이후 대재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추세를 지속

### 1-6. 경제상황 만족도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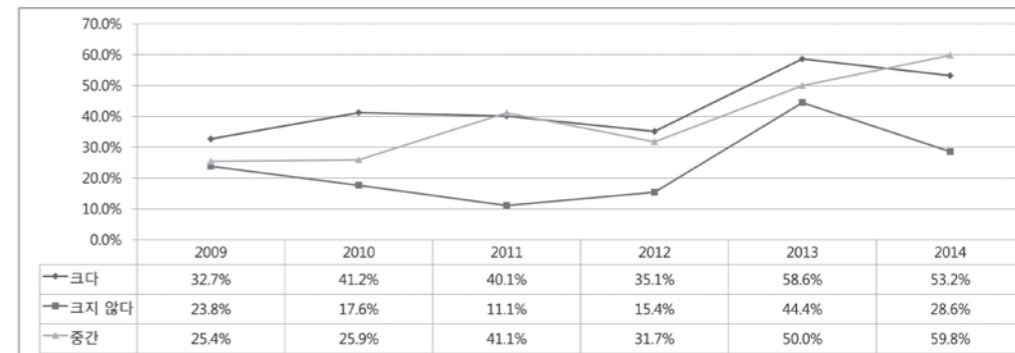
○ 올해의 경우 경제상황 만족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불만족층보다 18.6% 높음  
○ 2007년 조사 이후 경제상황 만족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은 경향 지속

### 1-7. 한국에 대한 자긍심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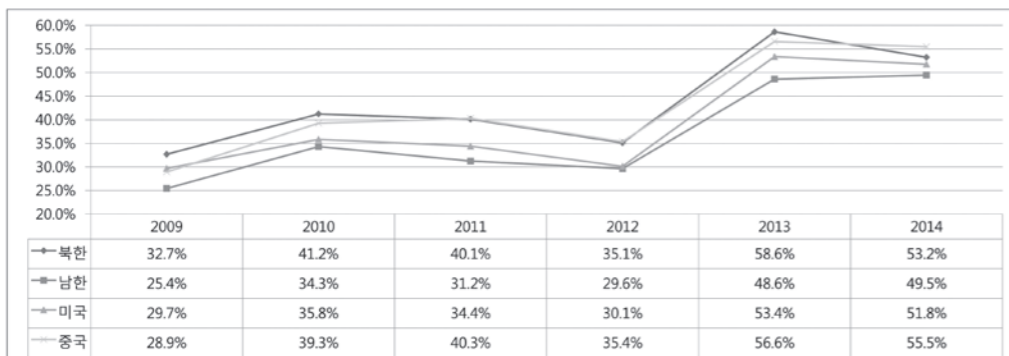
○ 2007년 조사 이후 정책변화와 무관하게 자긍심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 지속

### 1-9.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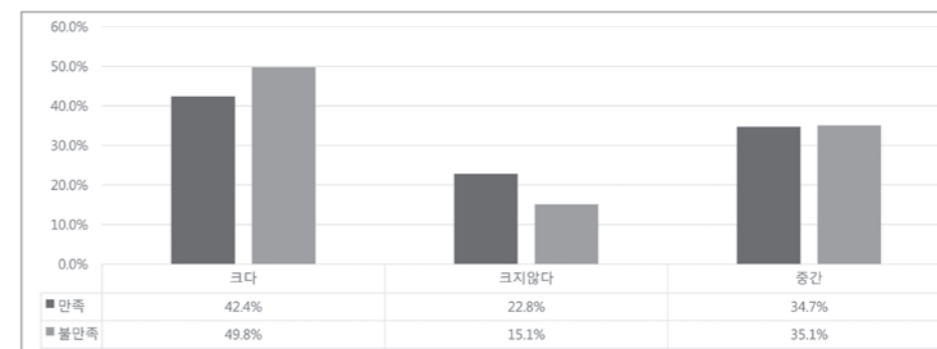
○ 2009년 조사 이후 북한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별 만족도 격차가 지속  
 ○ 올해의 경우 크다(-5.4%) 및 크지 않다(-15.8)는 응답층 모두에서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나  
 - 중간 응답층에서는 9.8% 증가(전체 가운데 지역별로 수도권(26.8%)과 영남권(38.1)/  
 지지정당별로 무당파 47.4%가 다수 차지)

### 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 책임(크다)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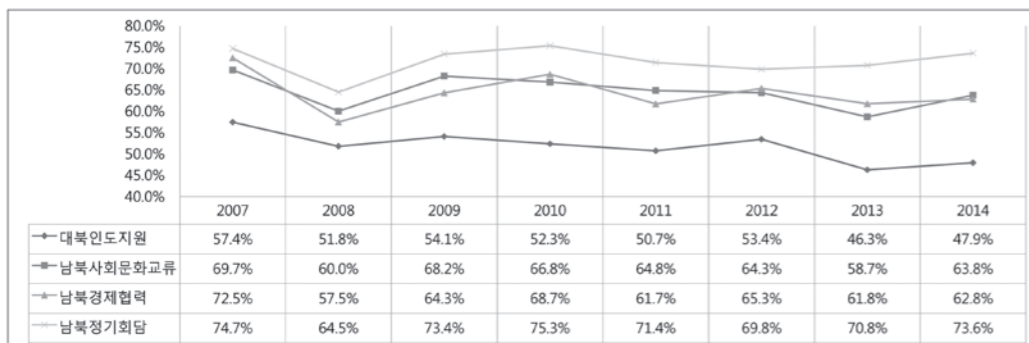
○ 2009년 조사 이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타국에 돌릴 경우 대체로 만족도가 높음  
 - 특히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러한 경향이 증가  
 ○ 올해에는 남한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지만(+0.9%) 북한(-5.4%), 미국(-1.6%), 중국(-0.9)의 경우 만족도가 감소 -> 타국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력을 촉구

### 1-10.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 책임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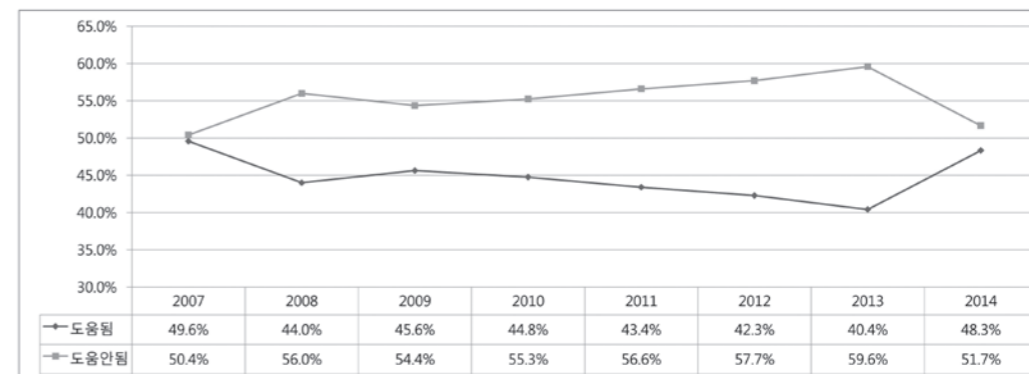
○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층에서도 40% 이상이 남북관계 악화에 남한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만족 층의 크지 않다는 인식은 22.8%)

### 2-1. 통일을 위한 분야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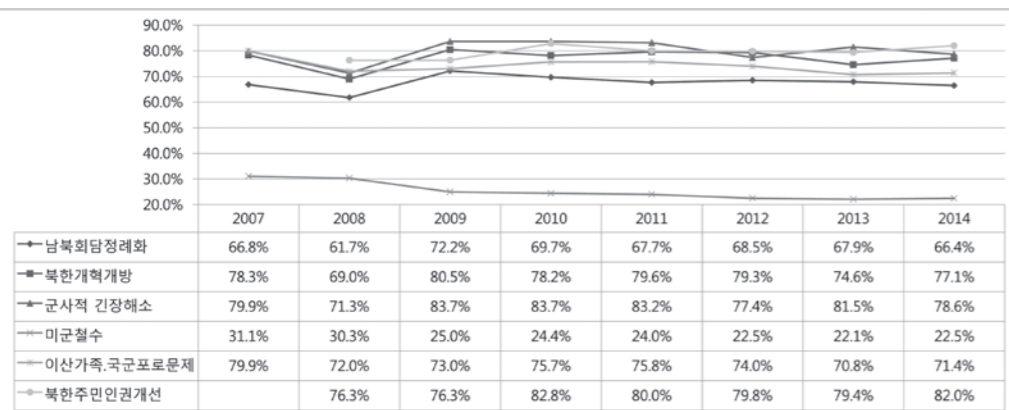
- 대북인도지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절반 이하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초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당국 간 회담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
-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들이 미세하나마 증가

### 2-3.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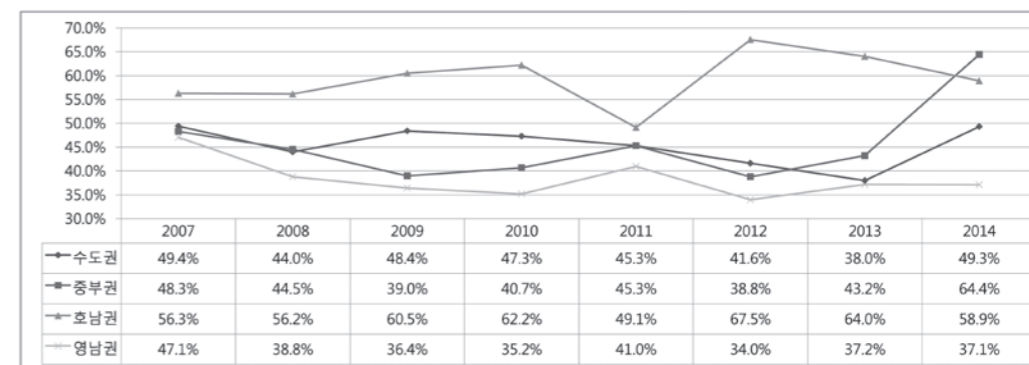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 증가
- 전체적으로 2009년 이후 하락하던 긍정적 인식이 5년 만에 반전

### 2-2.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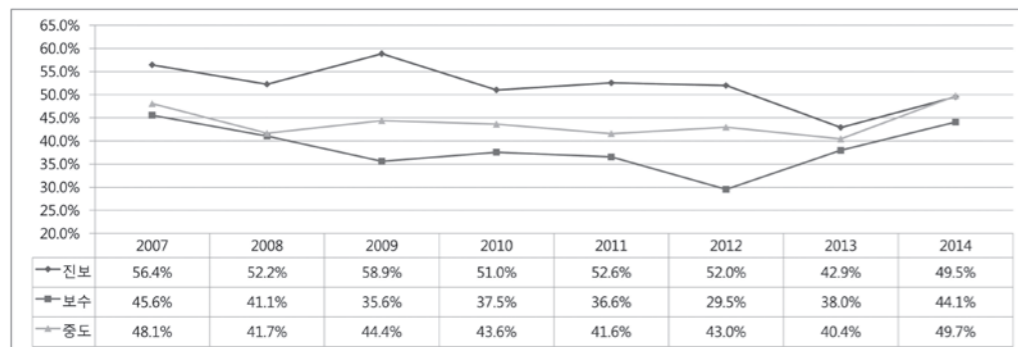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미미하나마 북한주민인권개선과 북한개혁개방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증가 반면 군사적 긴장해소나 남북간 회담정례화는 감소
- 전체적으로 북한주민인권개선>군사적 긴장해소>북한개혁개방>인도적 사안>회담정례화 순

### 2-3-1. 지역별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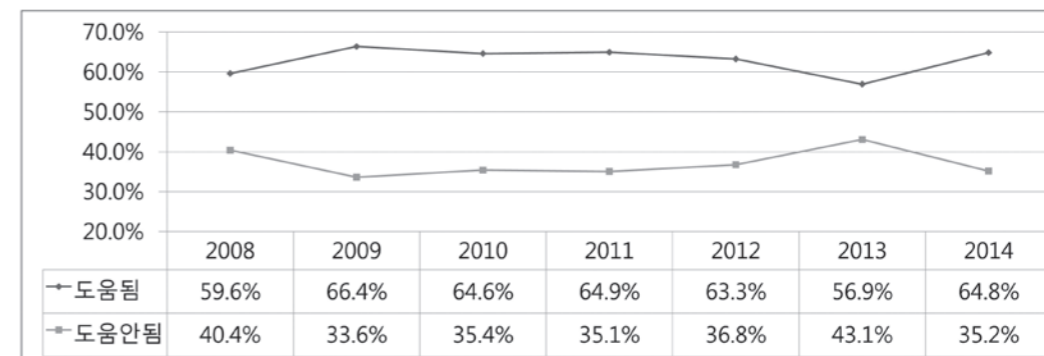
- 2011년 전국적인 수렴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호남과 비호남으로 분화되었으나, 올해 중부권(21.2%)과 수도권(11.3%)의 증가로 중부권과 호남>수도권>영남권으로 분화
- 호남권(60% 전후 긍정적)과 영남권(60% 이상 부정적)의 인식 차 지속

### 2-3-2. 정치성향별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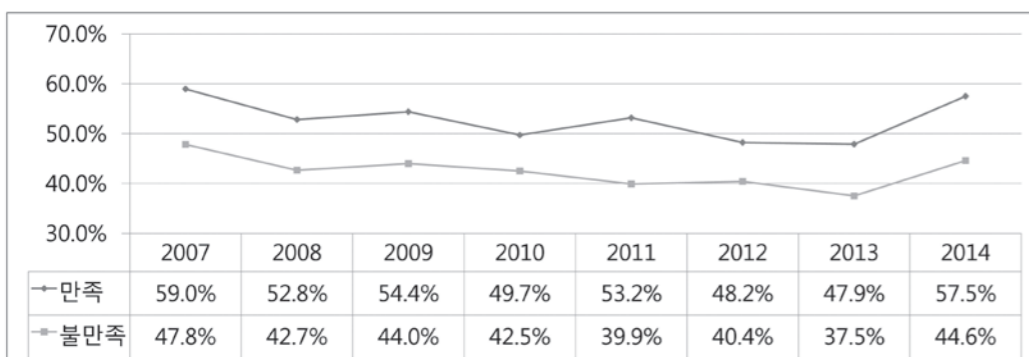
○ 진보(6.6%), 보수(6.1), 중도(9.3%)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  
 ○ 2013년부터 나타난 정치성향 간 수렴 양상이 지속

### 2-4. 북한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제협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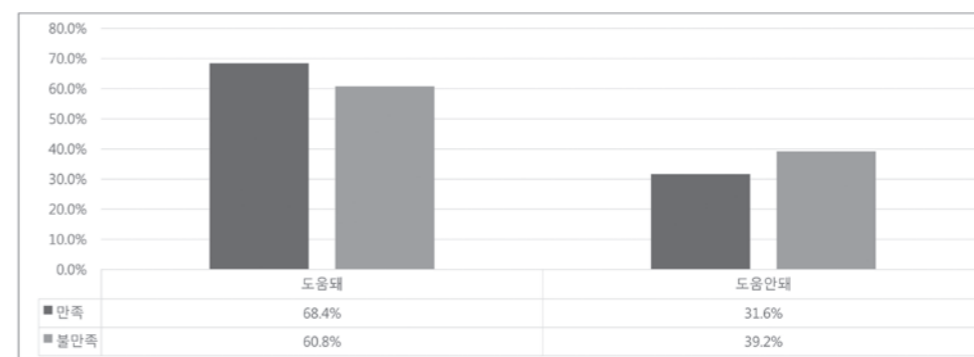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 증가  
 ○ 전체적으로 2009년 이후 하락 추세였던 긍정적 인식이 5년 만에 반전

### 2-3-4. 경제상황 만족도별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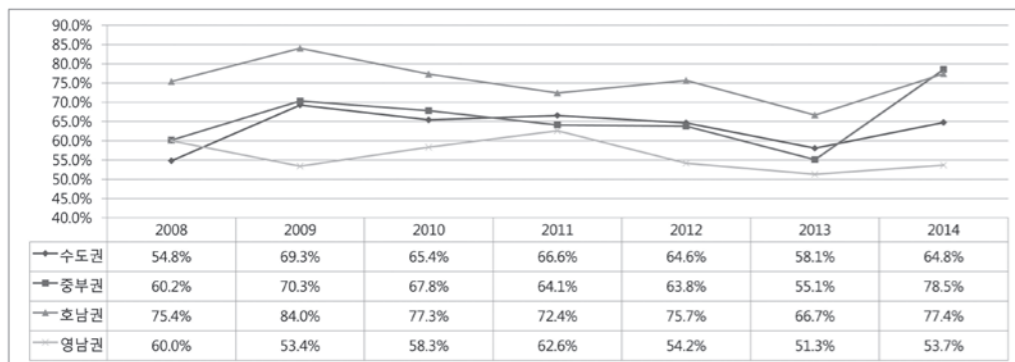
○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지속

### 2-4-1. 대북정책 만족도별 남북경협 기여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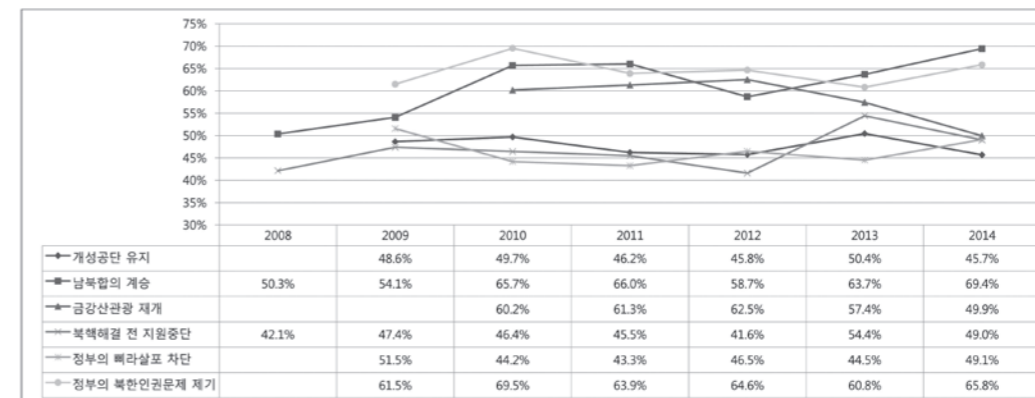
○ 개성공단 현상유지 이외의 대북경협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층에서도 남북경협의 북한 변화 기여 인식이 불만족 층보다 7.6% 높다는 점에 유의

### 2-4-1. 지역별 남북경협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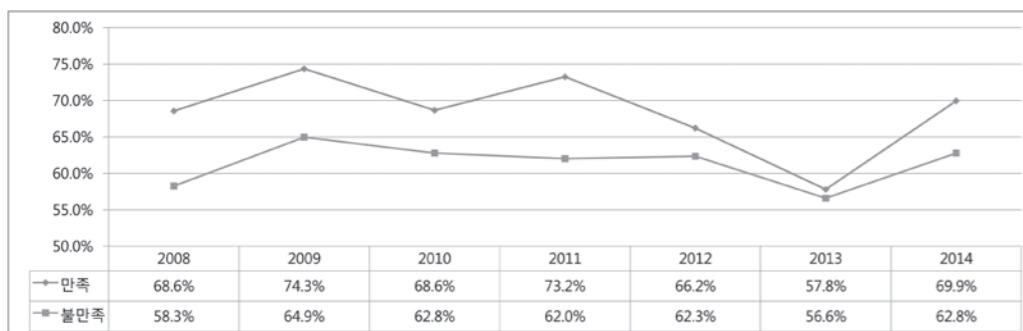
- 올해 중부권(23.4%)이 급증한 가운데 호남권(10.7%)과 수도권(6.7%)이 증가  
중부권과 호남>수도권>영남권으로 분화
- 호남권과 영남권 간에 20% 전후의 인식 차 지속

### 2-5.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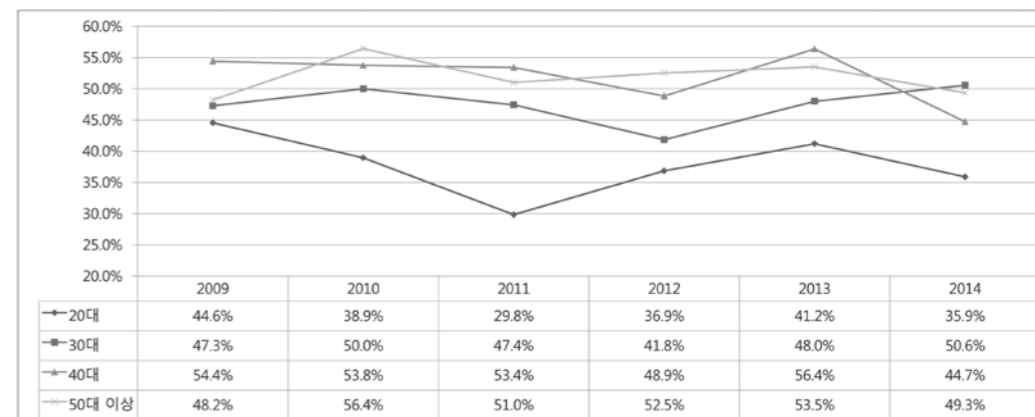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남북합의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돼야(5.7%), 정부가 대북배라살포를 막아야(4.6%) 응답이 증가하고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5% 감소  
- 동시에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5.0%)는 응답은 증가
-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7.5%)와 개성공단 유지(-4.7%)는 절반 이하로 하락

### 2-4-2. 경제상황 만족도별 남북경협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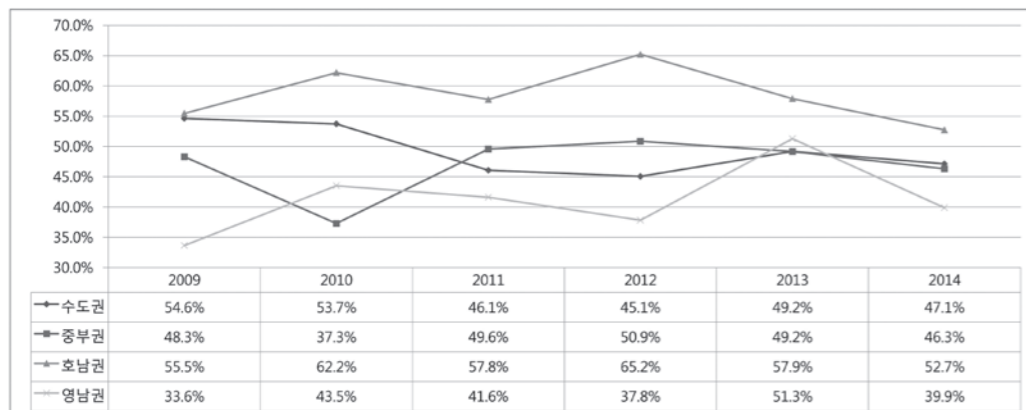
- 만족층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2013년과 달리 만족층과 불만족층 간 격차가 확대

### 2-5-1. 연령대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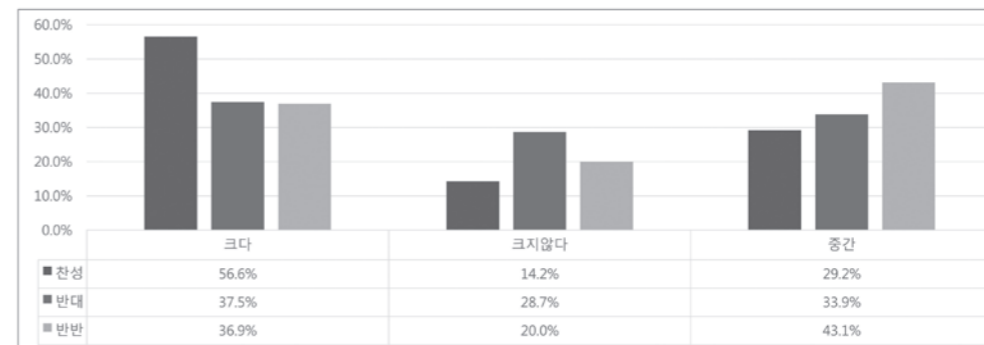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40대(11.7%)의 하락폭이 큰 가운데  
- 2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30, 40, 50대는 수렴되는 양상

### 2-5-2. 지역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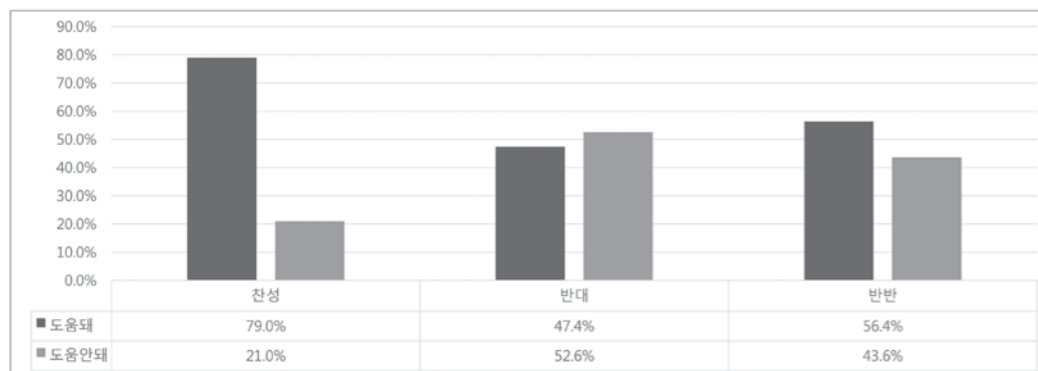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영남권의 하락폭(-11.4%)이 큰 가운데 호남과 영남 간 격차 지속

### 2-5-4. 개성공단 유지 인식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 책임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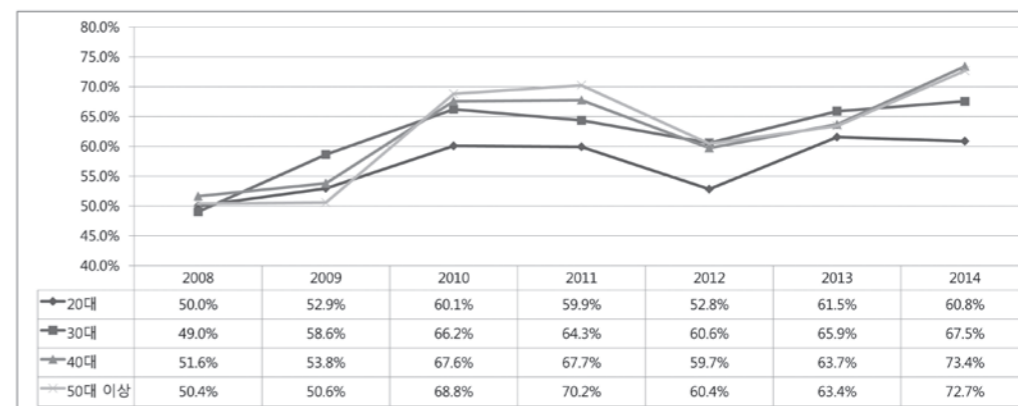
○ 남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개성공단 유지 찬성 층에서 반대 층보다 19.1% 높게 나타남  
○ 반대 층에서도 남한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37.5%로 크지 않으나 중간보다 높음

### 2-5-3. 개성공단 유지 인식별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개혁개방 기여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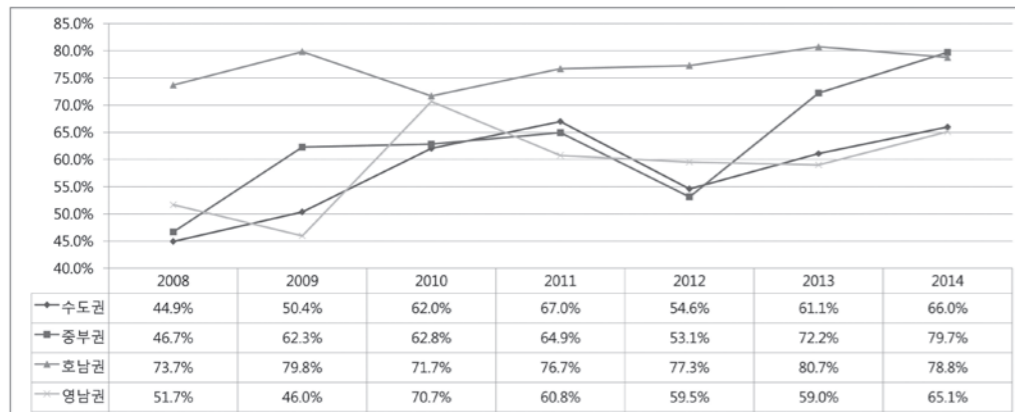
○ 개성공단 유지 찬성 층의 긍정적 인식이 반대 층보다 31.6% 높음  
○ 개성공단 유지 반대 층이나 반반이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절반 전후가 긍정적으로 인식

### 2-5-5. 연령대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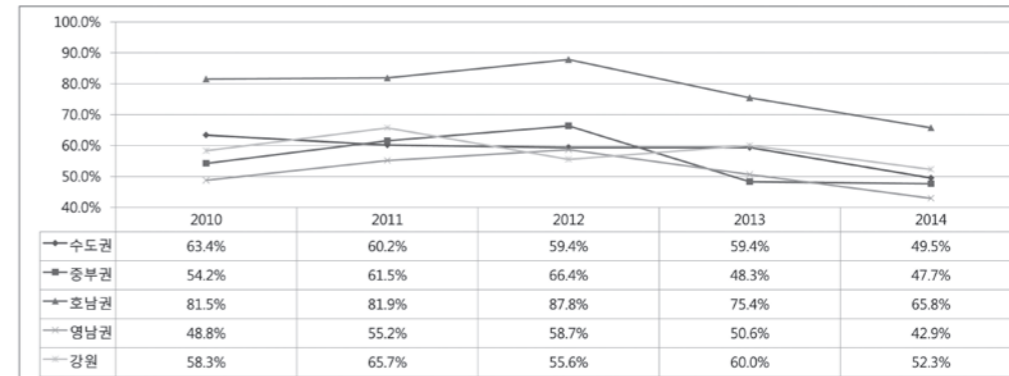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40대(+9.7%)와 50대(+9.3%)에서 동의 비율이 상승

### 2-5-6. 지역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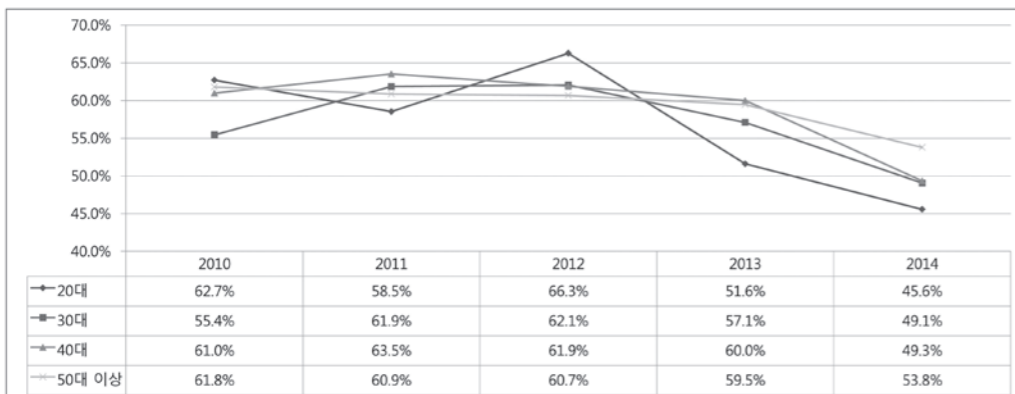
○ 충청권의 비율(+7.5%)이 상승 / 수도권 및 영남권과 중부권 및 호남권으로 분화되는 양상

### 2-5-8.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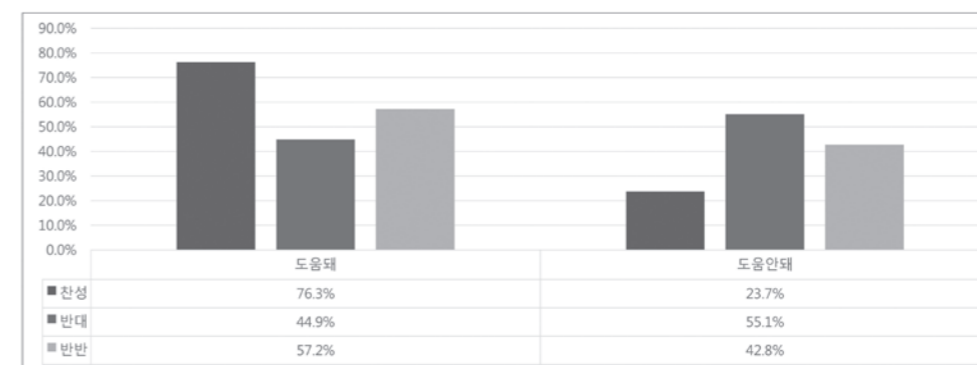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9.9%)과 호남권(-9.6%)의 하락폭이 큰 가운데  
- 호남권과 비호남권 간의 격차 지속

### 2-5-7.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동의 비율



○ 지난해에 비해 40대의 하락폭(-10.7%)이 가장 큰 가운데  
- 2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5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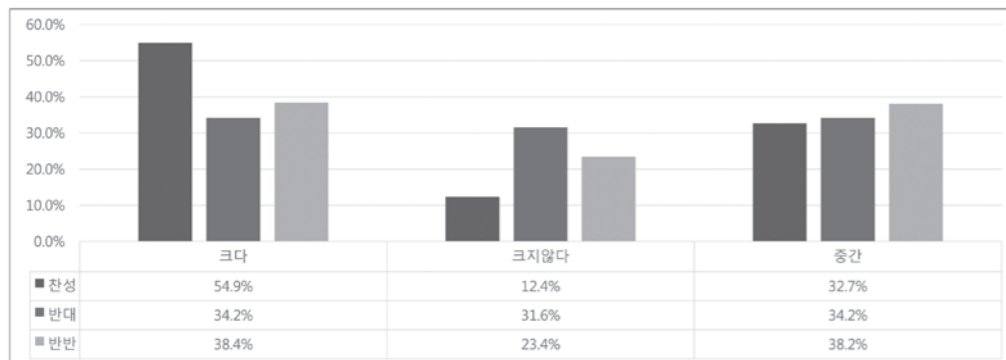
### 2-5-9.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별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개혁개방 기여 인식(2014)



○ 관광 재개 찬성 층의 긍정적 인식이 반대 층보다 31.4% 높음  
○ 관광재개 반대 층(44.9%)이나 반반 층(57.2%)에서도 긍정적 인식이 절반 전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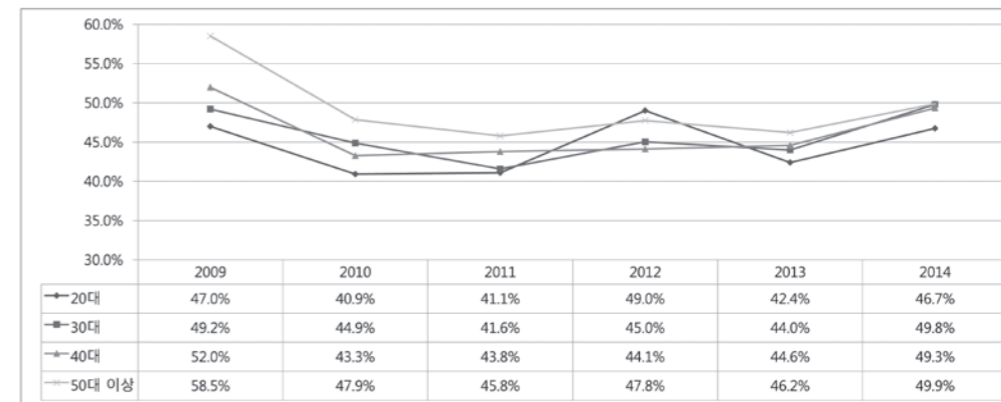


### 2-5-10.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 책임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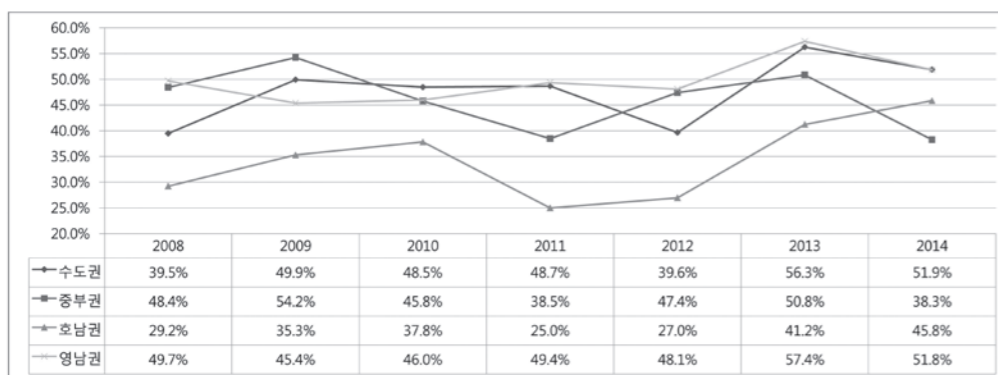
- 관광 재개 찬성 층에서 남한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대 층보다 20.7% 높음
- 관광재개 반대(31.6%), 반반(23.4%) 층에서 크지 않다는 인식은 1/3 이하

### 2-5-1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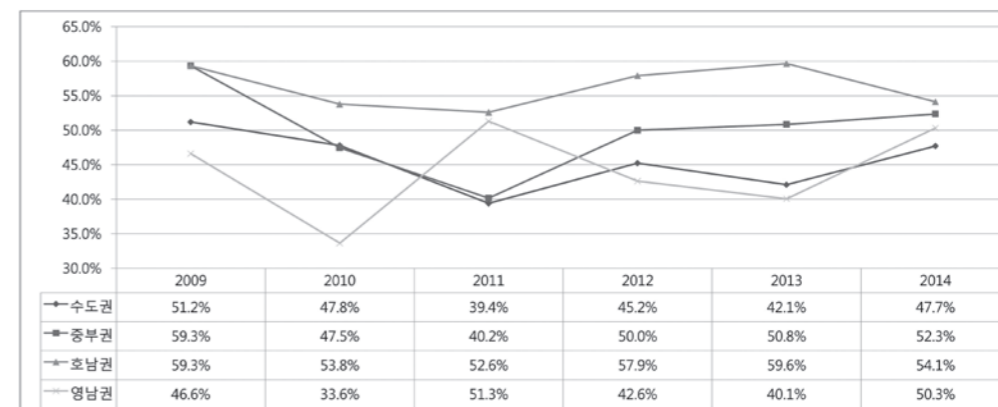
- 모든 세대가 40% 후반대로 수렴되는 양상

### 2-5-11. 지역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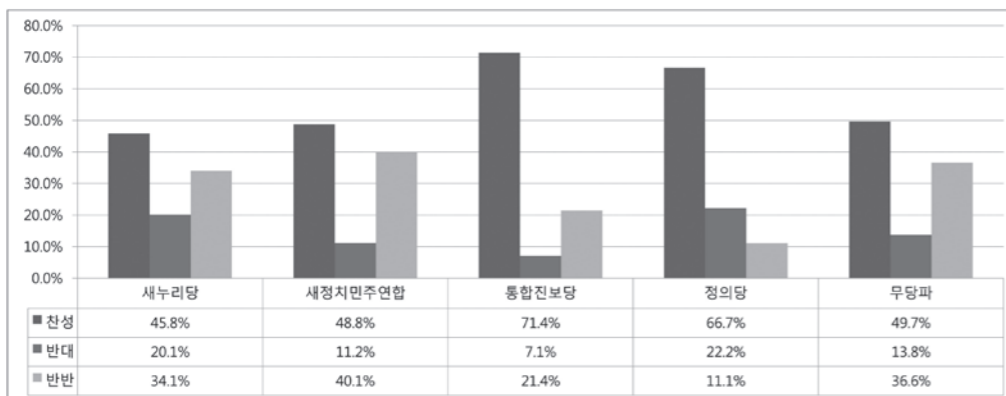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중부권의 하락폭(-12.5%)이 가장 큰 가운데 - 수도권 및 영남권 대 호남권의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양상

### 2-5-13. 지역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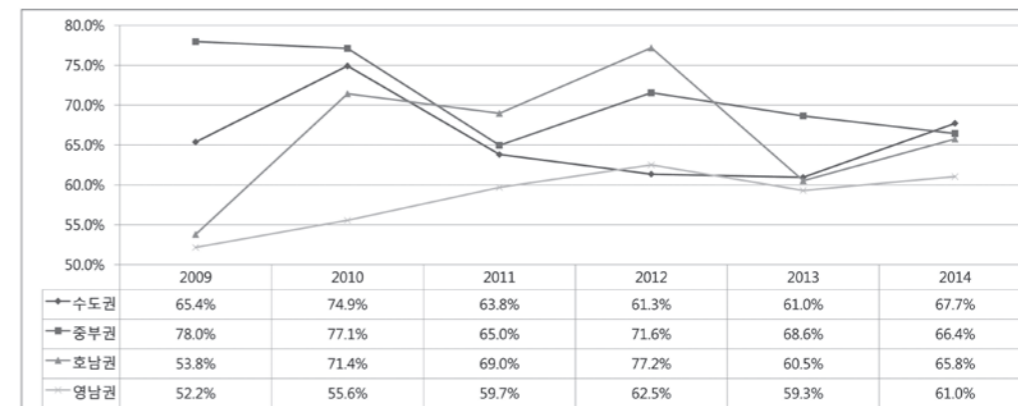
- 수도권(+5.6%) 및 영남권(+10.2%)의 상승과 호남권(-5.5%)의 하락으로 - 전 지역에서 5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

### 2-5-14. 지지정당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동의 비율(2014)



○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절반 이하)과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60% 후반 이상) 간 분화양상

### 2-5-16. 지역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동의 비율



○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호남권이 상승하면서 비영남권이 60% 중후반대로 수렴되는 양상

### 2-5-15. 연령대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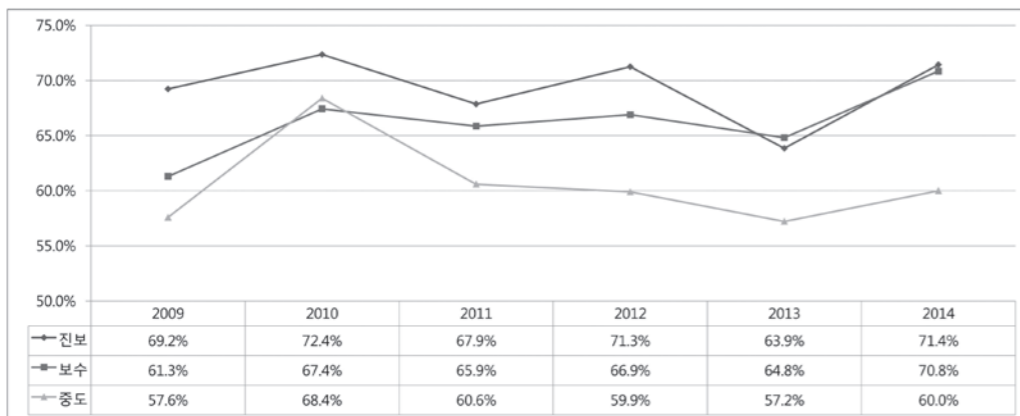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20대(8.1%), 30대(7.8%), 50대(6.8%)에서 증가하면서 60% 중반대로 수렴

### 2-5-17. 교육수준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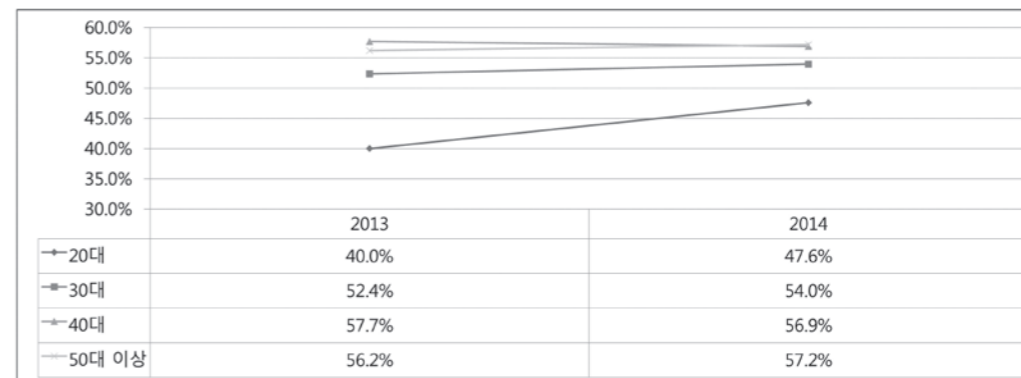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대학 재학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양상 지속

### 2-5-18. 정치성향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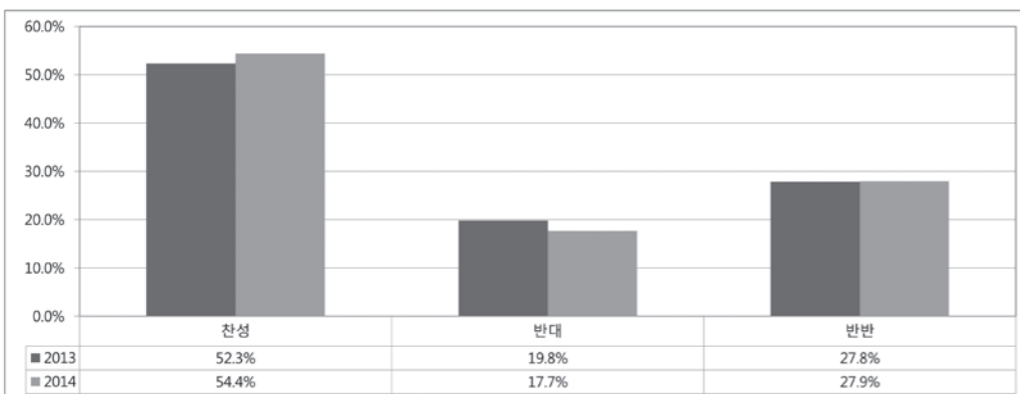
○ 지난해 이후 진보와 보수층이 수렴된 양상을 지속

### 2-6-1. 연령대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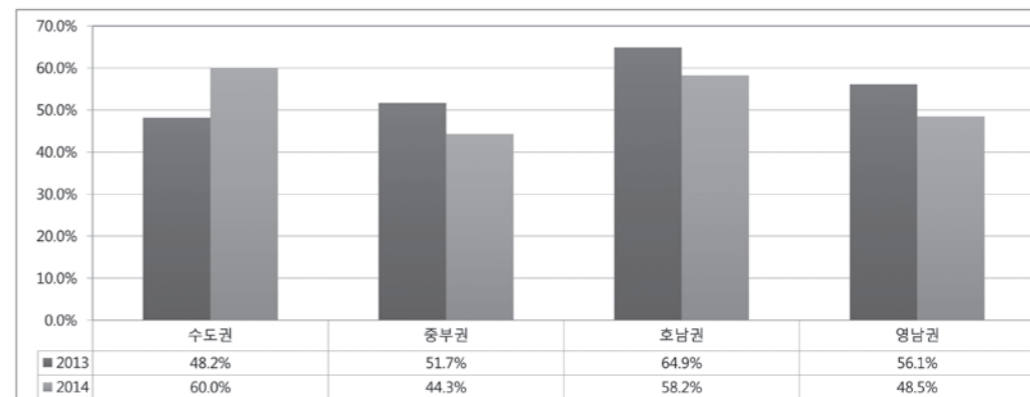
○ 20대의 찬성 비율이 7.6% 증가한 가운데 나머지 세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6.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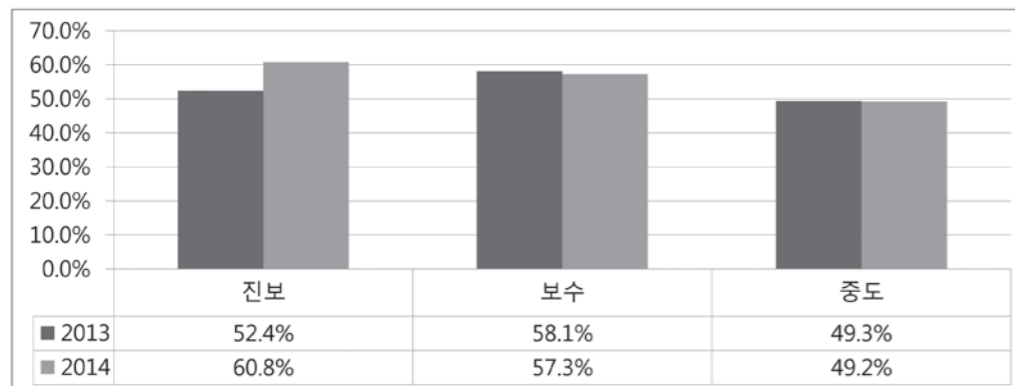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찬성이 2.1% 증가하고 반대가 2.1% 감소  
=> 절반이상이 찬성

### 2-6-2. 지역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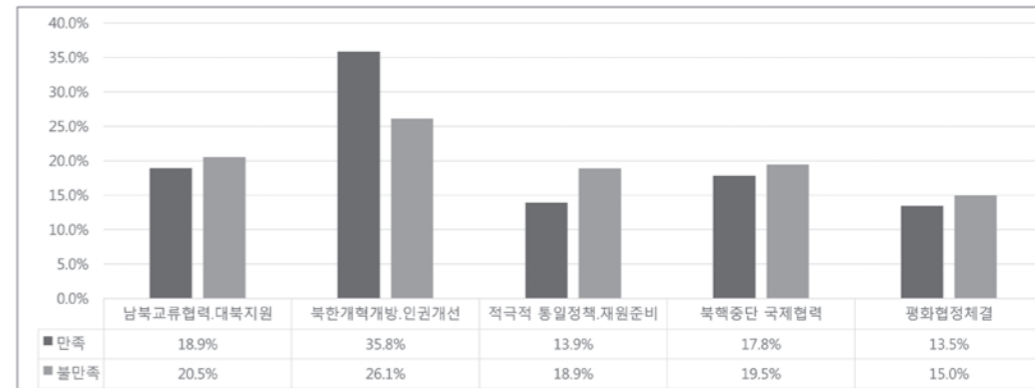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이 11.8% 증가한 반면 중부권(-7.4), 호남권(-6.7), 영남권(-7.6%) 감소

### 2-6-3. 정치성향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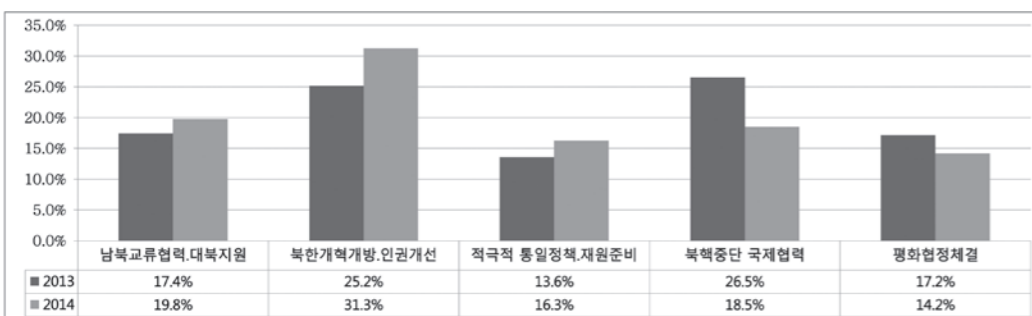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진보층이 증가(+8.8%)한 가운데 진보 및 보수층 대 중도층 간 분화 양상

### 2-7-1. 대북정책 만족도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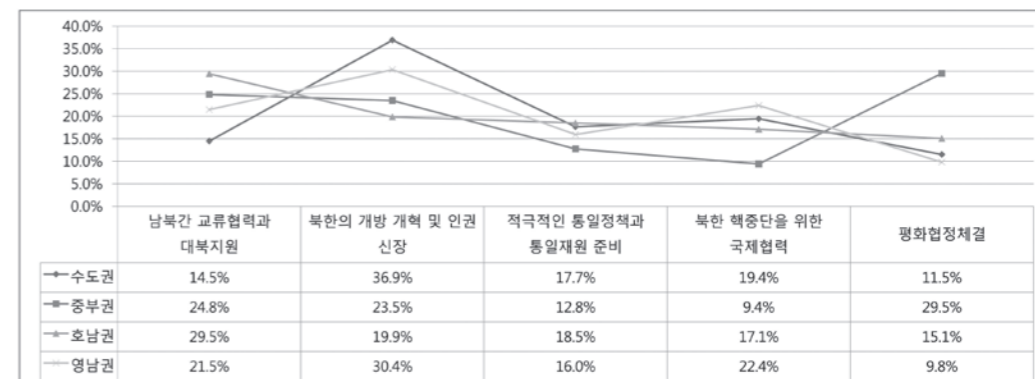
○ 대북정책 만족층의 북한개혁개방과 인권개선 비율이 불만족층보다 9.7% 높음  
○ 한편 불만족층도 북핵문제 중시 비중은 20% 미만

### 2-7.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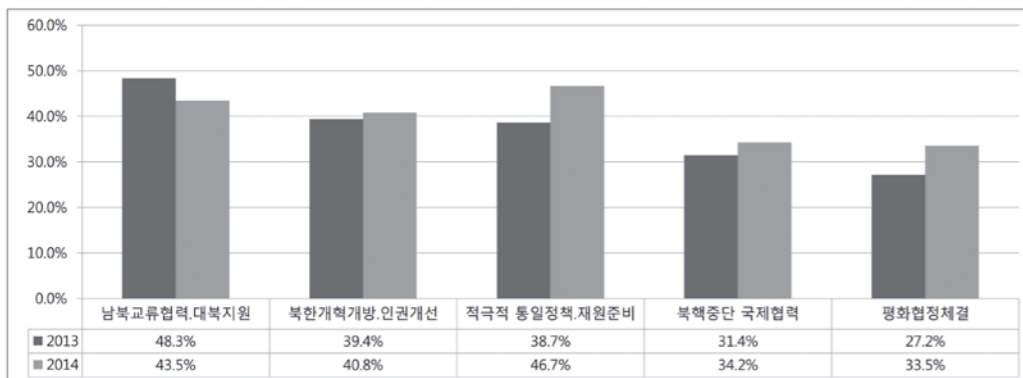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6.1%), 통일정책.자원준비(2.7), 교류협력.지원(2.4%) 증가  
- 반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8.0%)과 평화협정체결(-3.0%)은 감소  
=> 북한내부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인식  
=> 핵 문제에 대한 피로 만성화와 우회적, 대안적 방안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

### 2-7-2. 지역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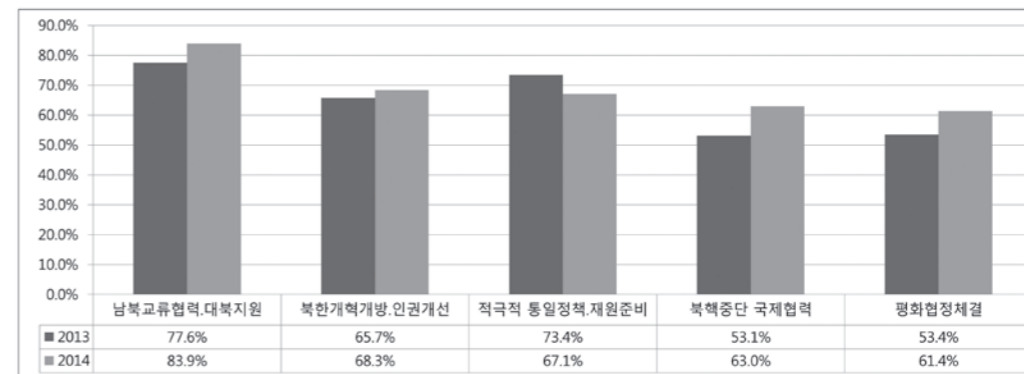
○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변화, 중부권은 평화협정체결, 호남권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7-3. 최우선시 대북정책별 정치적 관심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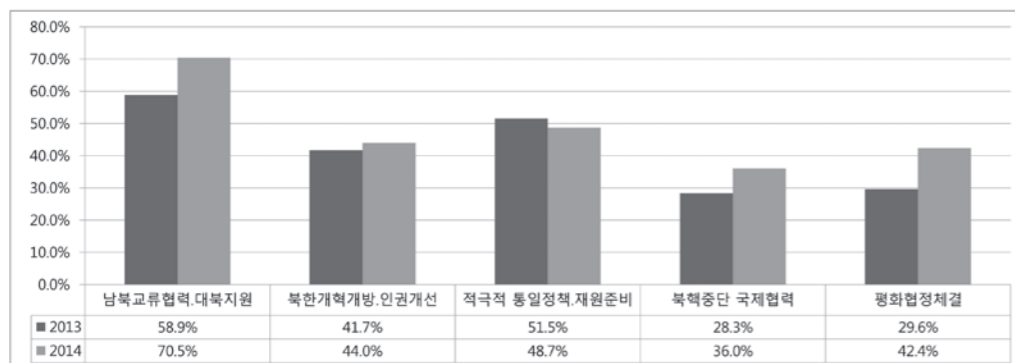
- 지난해와 비교해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의 관심층 비중(+8%)이 증가
-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북한변화, 통일준비 지지층의 정치적 관심이 북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평화협정체결 지지층보다 높은 양상 => 정부의 적극적, 현실적 정책 주문

### 2-7-5. 최우선 대북정책별 남북합의 계승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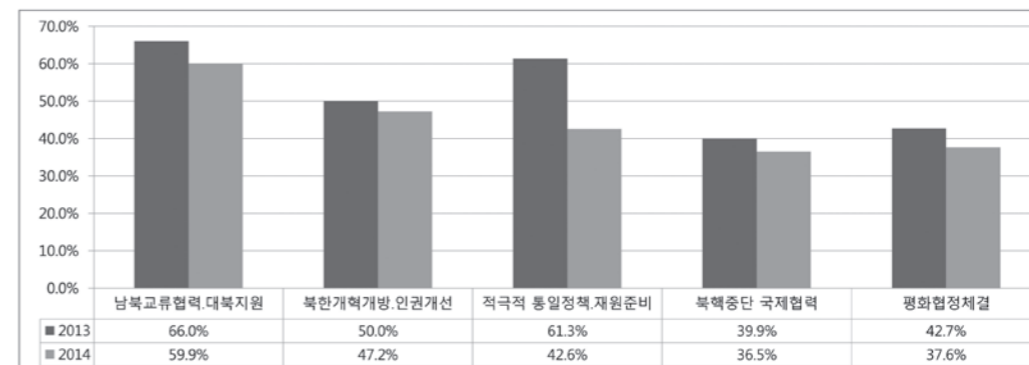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지지층의 동의 비율이 국제협력이나 평화협정체결 지지층보다 높은 양상

### 2-7-4. 최우선 대북정책별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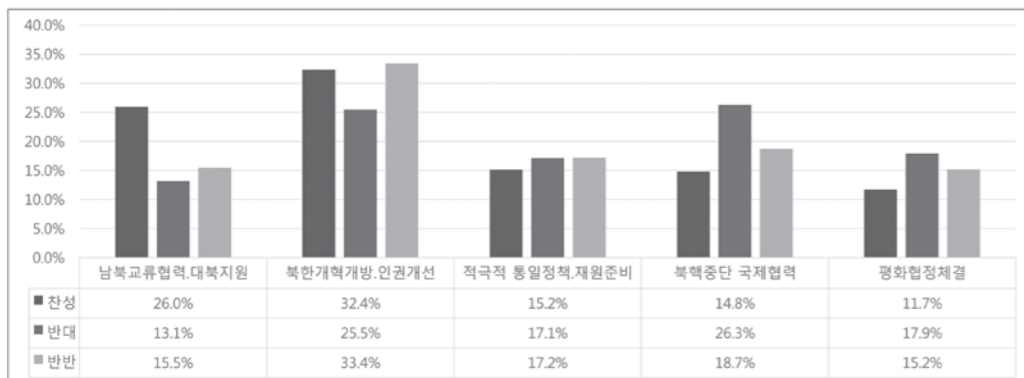
- 지난해와 비교해 남북교류협력 지지층의 긍정적 인식(+11.6%)이 가장 크게 증가
-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북한변화, 통일준비 지지층의 긍정적 인식이 북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평화협정체결 지지층보다 높은 양상

### 2-7-6. 최우선 대북정책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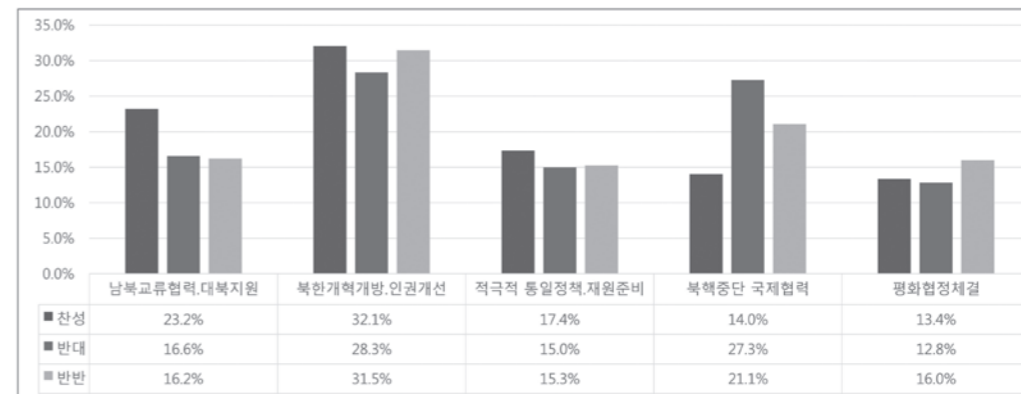
- 올해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지지층이 60%정도인 반면 다른 정책 지지층은 절반 이하를 기록
- 개성공단을 북한변화의 측면보다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 2-5-7. 개성공단 유지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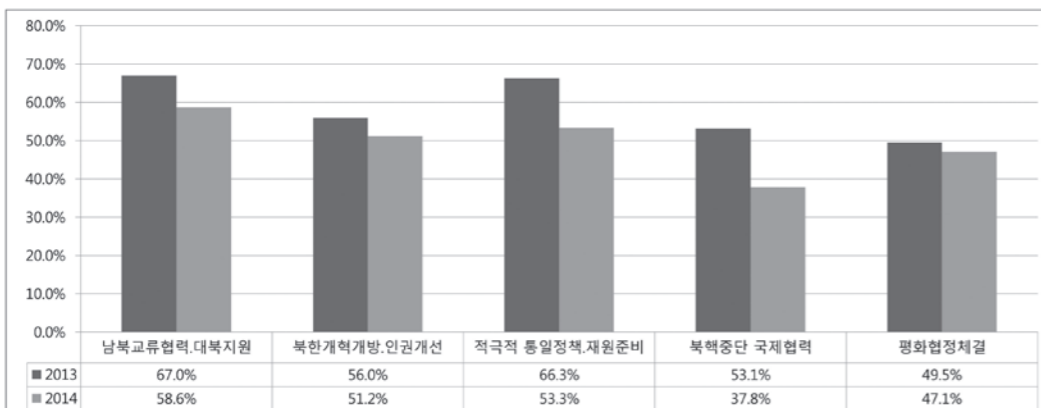
- 개성공단 유지 찬성 층의 남북교류협력(+12.9%)이나 북한변화(+6.9) 비율이 반대 층보다 높고 반대 층의 북핵 중단 국제협력(+11.5%) 비율이 찬성 층보다 높음
- 반대 층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나 북한변화를 위한 정책 비율이 38.6%를 차지

### 2-5-9.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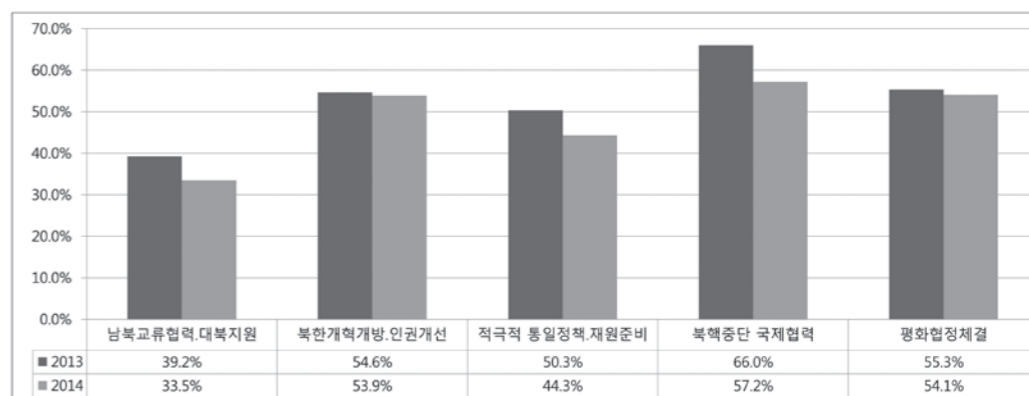
- 관광 재개 찬성 층은 남북교류협력이(+6.6%), 반대 층은 북핵중단 국제협력이(+13.3%) 높음
- 반대 층의 남북교류협력과 북한변화를 위한 정책 요구 비율이 44.9%로 나타남

### 2-7-8. 최우선 대북정책별 금강산관광 재개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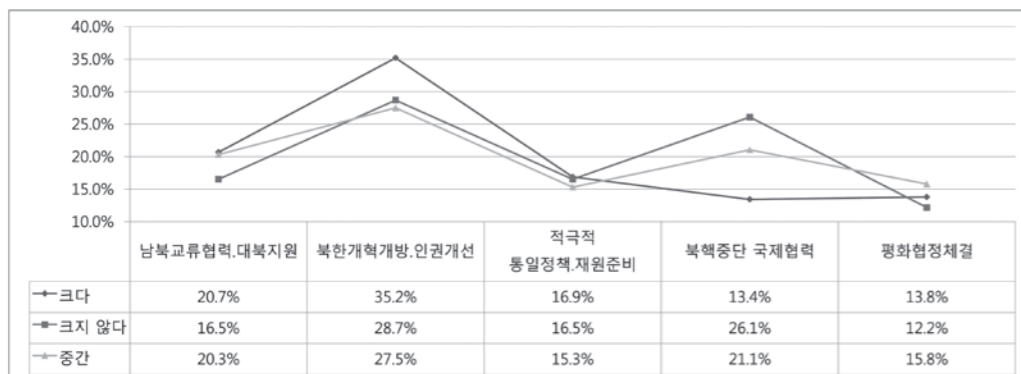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8.4%),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준비(-13.0%),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15.3%) 지지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2-7-10.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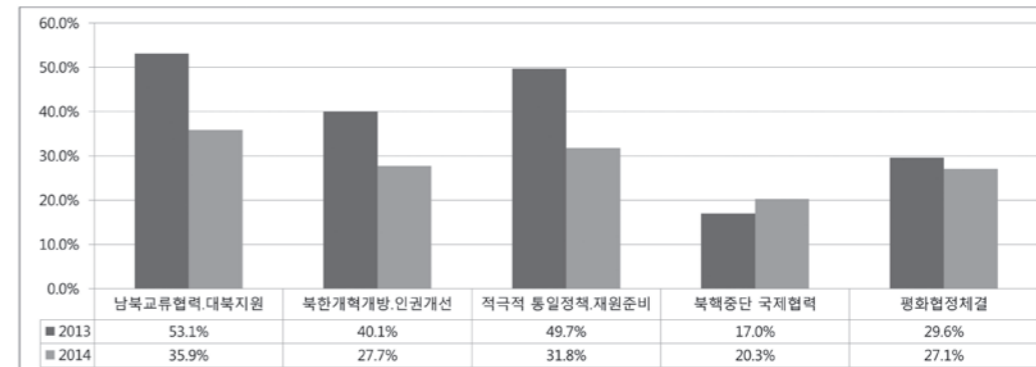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5.7%),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준비(-6.0%),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8.8%) 지지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2-7-11. 남한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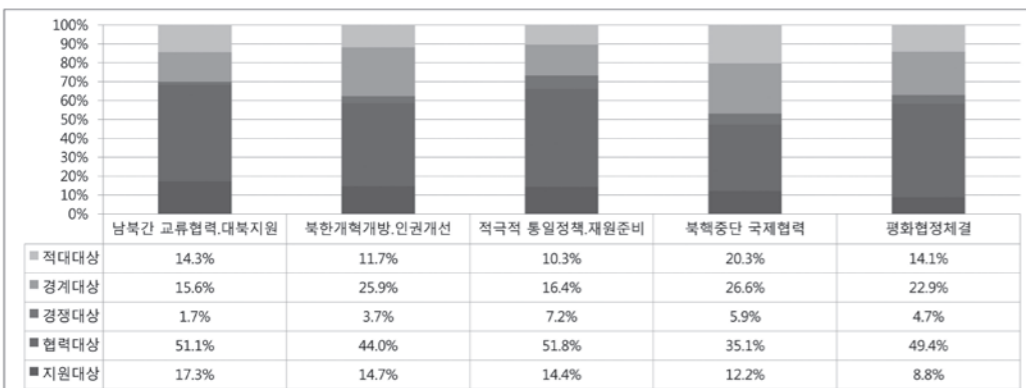
○ 모든 층에서 북한 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크다는 층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크지 않다는 층에서는 북핵중단 국제협력, 중간 층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북핵중단 국제협력이 각각 그 다음을 차지

### 2-7-13.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한과의 대화 가능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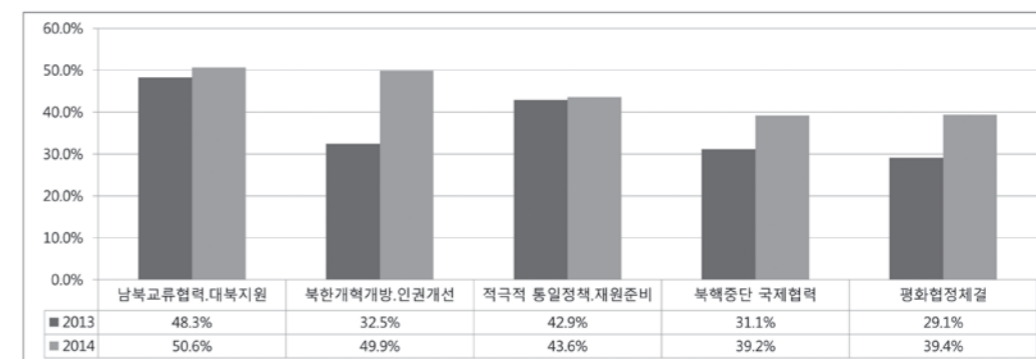
○ 지난해와 비교해 남북교류협력(-17.2), 북한변화(-12.4), 통일준비(-17.9%) 층에서 크게 하락  
 ○ 남북교류협력 > 통일준비 > 북한변화 ≒ 평화협정체결 > 북핵중단 국제협력 순으로 높음

### 2-7-12.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한 인식 비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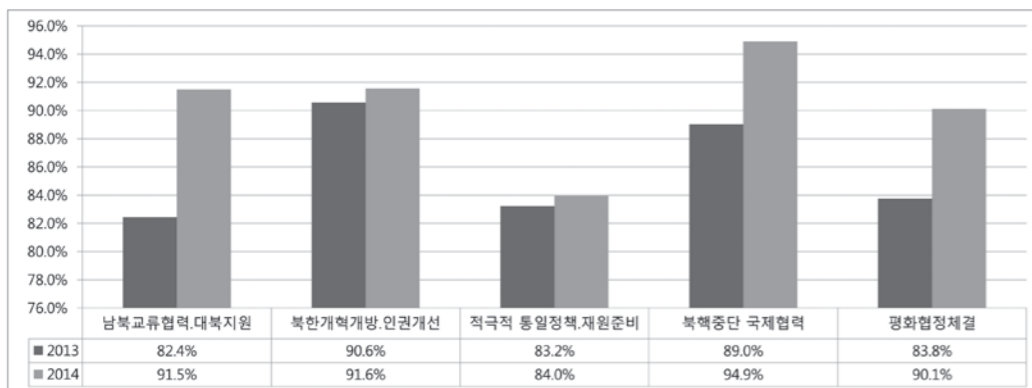
○ 지원과 협력대상을 합한 비율을 보면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68.4%, 통일준비 66.2% > 북한변화 58.7%, 평화협정체결 58.2% > 북핵중단 국제협력 47.3% 순으로 높음  
 - 경계와 적대대상을 합한 인식은 북핵중단 국제협력에서 46.9%로 가장 높음

### 2-7-14.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한 변화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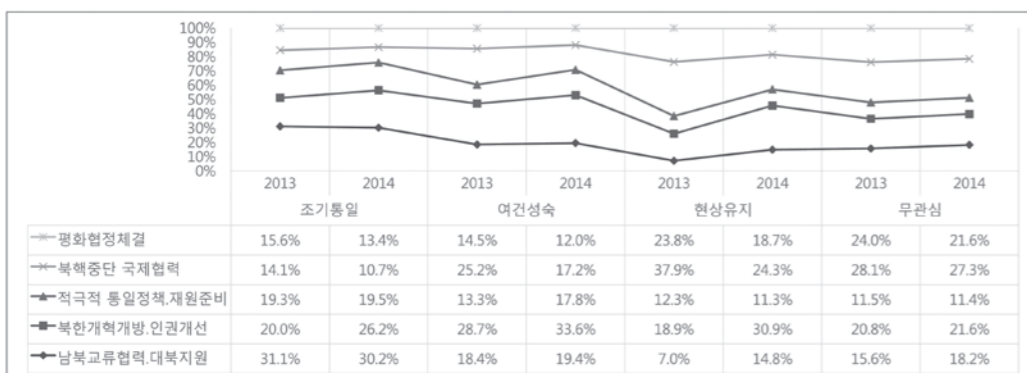
○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변화(+17.4), 북핵중단 국제협력(+8.1%), 평화협정체결(+10.3%) 상승  
 ○ 남북교류협력 ≒ 북한변화 > 통일준비 > 평화협정체결 ≒ 북핵중단 국제협력 순으로 높음

### 2-7-15. 최우선 대북정책별 북한 핵 불포기 동의 비율



○ 지난해와 비교해 남북교류(+9.1), 평화협정체결(+6.3), 북핵중단 국제협력(+5.9) 상승  
 ○ 북핵중단 국제협력 > 북한변화 > 남북교류협력 > 평화협정체결 > 통일준비 순으로 높음

### 2-7-16. 통일에 대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 조기통일 층은 남북교류협력(30.2%), 여건성숙 우선 층은 북한개혁개방(33.6%),  
 현상유지 선호 층도 북한변화(30.9%), 무관심 층은 북핵 중단 국제협력(27.3%)을 가장 선호  
 ○ 차선은 여건성숙 우선: 남북교류협력(19.4%), 현상유지 선호: 북핵중단 국제협력(24.3%)이 차지

### 3. 결론(요약)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3.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를 상회
-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7.9%)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7.9%)
-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 비율에서
  -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여(+4.6%) 절반에 근접(49.1%)
  -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응답도 증가하여(+5.7%) 69.4%로 상승
  - 정부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여(+5.0%) 65.8%로 상승
  -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4.7%) 다시 절반 이하로 하락
  -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7.5%)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 2.1% 증가하여 54.4%로 절반 이상을 유지
- 최우선시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서는
  - 북한의 개혁개방과 주민인권개선이 3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19.8%), 북핵중단 국제협력(18.5%), 통일준비(16.3%)가 그 다음 차지
  - 북한의 개혁개방과 주민인권개선은 6.1% 증가하고 북핵중단 국제협력은 8.0% 감소
  - \* 북한 핵 불포기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이 통일준비(84.0%)를 제외한 모두 선호에서 90% 상회
- 통일에 대한 견해에 따른 최우선 대북정책 선호에 대해 1, 2순위를 살펴보면
  - 조기통일 층: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30.2%) > 북한개혁개방, 인권개선(26.2%),
  - 여건성숙 우선 층: 북한개혁개방(33.6%) > 남북교류협력(19.4%),
  - 현상유지 선호 층: 북한개혁개방(30.9%) > 북핵중단 국제협력(24.3%),
  - 무관심 층: 북핵 중단 국제협력(27.3%) > 북한개혁개방=평화협정체결(21.6%)



## 2014 통일의식조사: 대북 정책(요약문)

장용석(서울대)

###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3.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를 상회

- 연령대: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60%로 가장 높고 나머지 세대는 50% 전후로 수렴
- 경제상황 만족도와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양상 지속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도 지속

### 2.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에서 북한주민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해소와 북한개혁개방이 높은 비율을 차지
-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와 남북회담 정례화는 하위권을 차지
- 주한미군 철수는 2009년 이후 20% 초반 수준을 지속

### 3.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7.9%)

- 경제상황 만족도가 높을 수록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지속

### 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7.9%)

-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층의 긍정적 인식이 불만족 층보다 7.6% 높은 양상
- 경제상황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경향 지속

### 5.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 비율에서

- 정부의 대북빼라살포 차단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여(+4.6%) 절반에 근접(49.1%)
- \* 모든 세대와 지역이 각각 40% 후반과 5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
-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응답도 증가하여(+5.7%) 69.4%로 상승
- 정부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여(+5.0%) 65.8%로 상승

- \* 모든 세대와 지역이 각각 60% 중반과 60% 중.후반으로 수렴되는 양상
-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4.7%) 다시 절반 이하로 하락
- \* 2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30대와 50대 이상은 50%로 수렴되는 양상
- \* 올해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개성공단 유지 찬성 층에서 반대 층보다 19.1% 높은 양상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7.5%)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
- \* 40대 비율이 10.7% 하락하였으며, 20대가 가장 낮고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양상

### 6.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 2.1% 증가하여 54.4%로 절반 이상을 유지

- 20대의 찬성이 7.6% 증가하고, 수도권에서도 11.8% 증가(타 지역은 감소)
- 진보 층 찬성이 증가하여(+8.8%) 진보(60.8%), 보수(57.3%) 대 중도(49.2%) 구도 형성
- \* 진보: 정치관심 층 다수, 보수와 중도: 정치 무관심 층 다수

### 7. 최우선시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서는

- 북한의 개혁개방과 주민인권개선이 3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 남북교류협력(19.8%), 북핵중단국제협력(18.5%), 통일준비(16.3%)가 그 다음을 차지
- 북한의 개혁개방과 주민인권개선은 6.1% 증가하고 북핵중단국제협력은 8.0% 감소

### 8. 통일에 대한 견해에 따른 최우선 대북정책 선호에 대해 1, 2순위를 살펴보면

- \* 조기통일 층: 남성 63.1%, 50대 이상 50.3% > 40대 22.8%, 정치관심 층 56.4%
- \* 현상유지 선호 층: 여성 55.7%, 20대 30.9% > 50대 이상 23.9%, 정치관심 층 28.7%
- 조기통일 층: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30.2%) > 북한개혁개방, 인권개선(26.2%),
- 여건성숙 우선 층: 북한개혁개방(33.6%) > 남북교류협력(19.4%),
- 현상유지 선호 층: 북한개혁개방(30.9%) > 북핵중단 국제협력(24.3%),
- 무관심 층: 북핵 중단 국제협력(27.3%) > 북한개혁개방 = 평화협정체결(21.6%)

### 9. 핵문제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대안적 방안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이 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9.1), 평화협정체결(+6.3%), 북핵중단 국제협력(+5.9%) 선호에서 증가하여 통일준비(84.0%)를 제외하고 모두 90% 상회

## 통일의식조사 2014: 대외관계인식

송영훈 (통일연구원)

2014. 10. 1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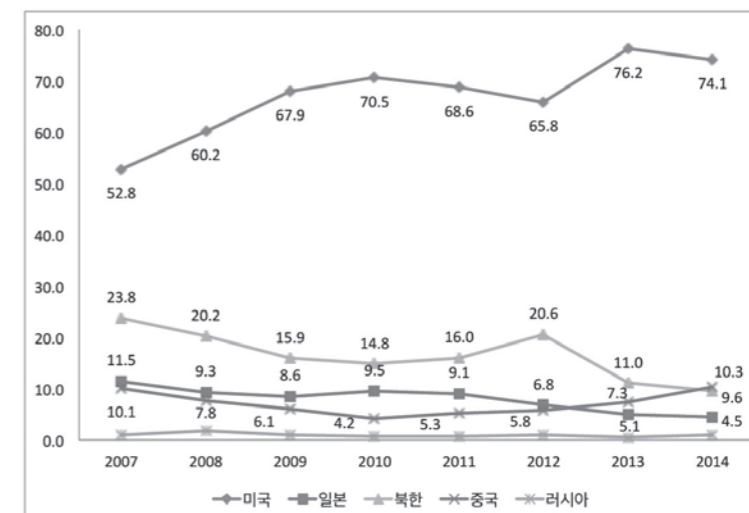
가장 친근한 국가,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역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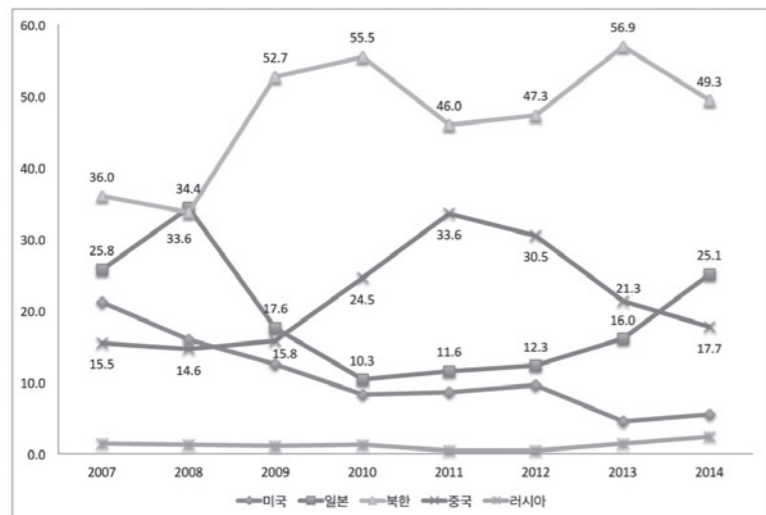
기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

###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 2007년 이후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으나, 2014년에는 오차범위에 있지만 중국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가 북한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를 약 0.8% 높음.
- ▶ 북한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가 천안함 사건 이후 일부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2012년의 약 절반 수준을 기록함.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에 대한 피로감 등의 원인을 추정해 봄.
- ▶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가장 낮았던 2010년보다 약 5.8% 증가.
- ▶ 일본에 대한 친밀감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4.5%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이어 사실상 가장 낮은 친밀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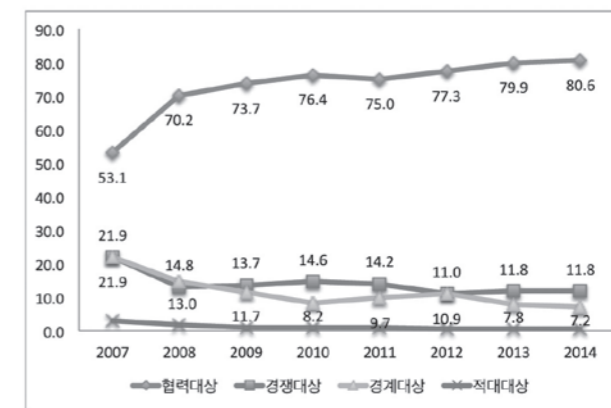
###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구분	인원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기타	없음
전체	(1200)	5.4	24.6	49.7	17.6	2.6	.1	100.0
성별	(612)	4.7	24.2	48.9	19.2	3.0	.0	100.0
남성	(366)	6.2	25.0	50.6	15.8	2.2	.1	100.0
여성	(248)	3.6	21.0	54.3	18.1	3.0	.0	100.0
연령	(289)	6.3	21.1	48.2	20.9	3.5	.0	100.0
10대	(304)	7.5	28.9	43.4	18.5	1.5	.2	100.0
20대	(378)	4.2	26.0	53.0	14.2	2.6	.0	100.0
30대	(89)	8.1	20.9	50.3	15.8	4.9	.0	100.0
40대	(518)	5.2	28.8	46.8	16.5	2.7	.0	100.0
50대	(91)	5.2	21.4	52.2	18.8	2.2	.1	100.0
60대 이상	(2)	.0	60.1	39.9	.0	.0	.0	100.0
직업	(15)	14.6	27.6	51.3	6.5	.0	.0	100.0
학생	(203)	9.0	26.4	46.7	14.1	3.4	.4	100.0
사무직	(307)	6.0	26.9	45.0	19.5	2.6	.0	100.0
서비스직	(314)	4.7	23.3	48.8	21.5	1.8	.0	100.0
농림수산업	(230)	2.8	25.2	54.2	14.7	3.0	.0	100.0
무직	(130)	3.6	16.4	60.1	14.8	3.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0	100.0
지역	(99)	11.5	25.4	49.7	10.2	3.1	.0	100.0
200만 원 이하	(227)	8.2	27.5	50.2	14.0	.0	.0	100.0
200만 원 이상	(333)	5.5	21.5	47.6	21.9	3.5	.0	100.0
400만 원 이상	(481)	2.8	25.6	51.2	17.2	3.0	.2	100.0
지역	(608)	6.1	24.6	48.6	17.4	3.3	.0	100.0
수도권	(120)	7.5	23.9	45.7	21.0	1.4	.6	100.0
중부권	(115)	12.1	31.7	38.2	18.0	.0	.0	100.0
동부권	(309)	1.3	19.2	58.2	18.1	3.2	.0	100.0
제주권	(35)	.0	47.7	47.9	4.4	.0	.0	100.0
기타	(13)	7.3	34.8	44.3	13.6	.0	.0	100.0
지역	(590)	3.2	22.1	49.7	21.4	3.7	.0	100.0
수도권	(937)	6.8	26.7	50.5	14.6	1.2	.1	100.0
중부권	(134)	9.4	27.2	46.9	12.7	3.7	.0	100.0
동부권	(333)	6.9	25.7	46.8	18.9	1.7	.0	100.0
제주권	(90)	5.1	22.5	50.7	18.4	3.3	.0	100.0
기타	(286)	4.4	27.8	51.3	14.4	1.8	.3	100.0
무응답	(1)	.0	.0	.0	.0	100.0	.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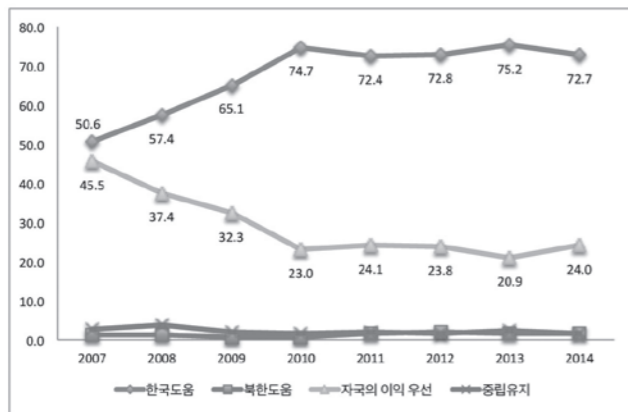
- ▶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여전히 북한임.
- ▶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전년대비 9.1% 증가).
- ▶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 한중관계의 개선과 한일관계의 악화가 국민들의 의식에 반영되고 있음.

### 대미 국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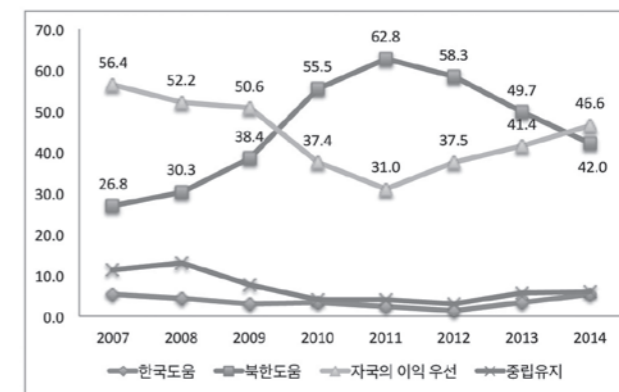
- ▶ 미국의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꾸준히 상승함.
- ▶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 중 79.4%가 협력대상이라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긍정적인임.

### 대미인식: 한반도 전쟁시 미국의 태도 예상



- ▶ 한국을 도울 것이다: 약 73%,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24%
- ▶ 201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대중인식: 한반도 전쟁시 중국의 태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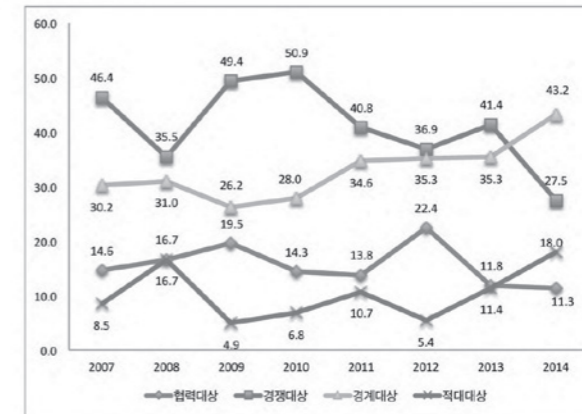
- ▶ 북한을 도울 것이다: 약 42.0%,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46.6%
- ▶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전쟁시 중국의 태도 예상의 순위 변화.

### 대중 국가이미지



- ▶ 중국의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 2년 연속 상승.
- ▶ 경계대상 이미지도 상승
- ▶ 연령이 높을 수록 협력대상 대중 이미지가 상승.
- ▶ 2013년 대비 20대 와 50대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 협력대상 이미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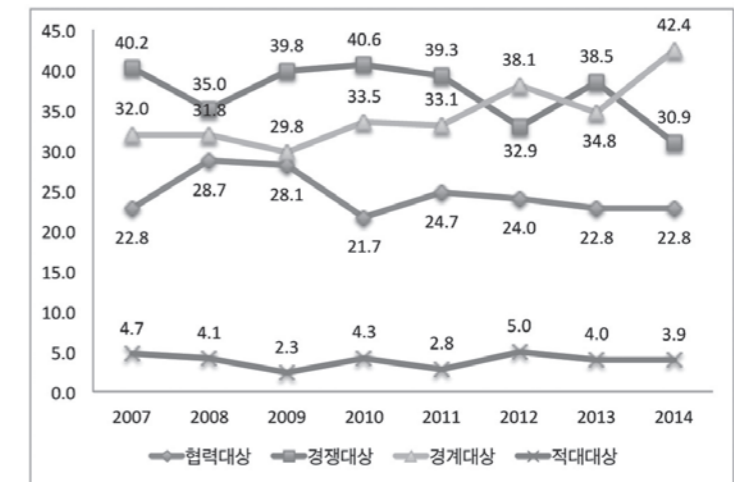
### 대일 국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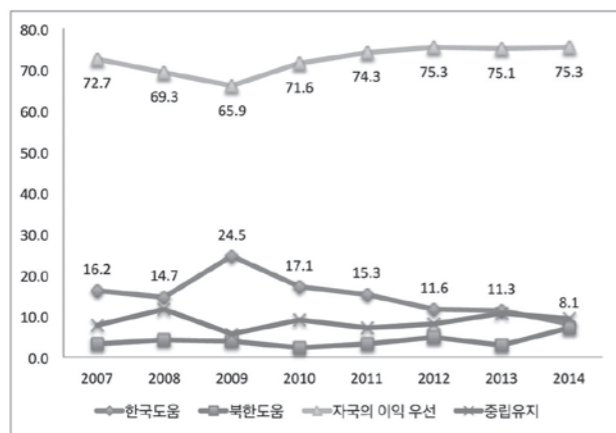
- ▶ 일본의 국가이미지 악화: 경계대상 35.3%→43.2, 적대대상 11.4%→18.0%
- ▶ 30대와 40대의 경쟁대상 이미지 10% 이상 상승; 진보층 8.3% 증가
- ▶ 20대와 40대의 적대대상 이미지 약 20%; 진보와 보수의 약 20%

■ 전체	(1200)	11.4	27.0	44.0	17.5	.1	100.0
■ 연령별							
19-29세	(248)	11.0	29.7	38.9	19.9	.5	100.0
30-39세	(269)	15.1	26.4	42.7	15.8	.0	100.0
40-49세	(304)	11.8	25.8	48.1	14.3	.0	100.0
50대 이상	(378)	8.7	26.7	44.9	19.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9)	11.5	28.5	43.6	16.5	.0	100.0
고졸 이상	(518)	7.2	27.1	45.3	20.5	.0	100.0
대졸 이상	(591)	15.0	26.6	43.0	15.1	.2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0	.0	.0	100.0
■ 직업별							
직무수행/직무수행안함	(15)	15.7	18.8	59.0	6.5	.0	100.0
자영업/관리	(203)	9.4	27.1	45.9	17.6	.0	100.0
블루칼라	(307)	8.7	28.2	45.2	17.9	.0	100.0
화이트칼라	(314)	17.9	24.2	41.5	16.0	.4	100.0
전업주부	(230)	8.2	30.3	43.8	17.7	.0	100.0
무직/기타	(130)	10.6	26.2	42.2	21.0	.0	100.0
모름/무응답	(1)	.0	.0	100.0	.0	.0	100.0
■ 가구소득수준별							
200만원 미만	(99)	12.3	35.8	31.5	20.4	.0	100.0
200-299만원	(227)	11.7	31.1	43.4	13.9	.0	100.0
300-399만원	(393)	10.0	28.1	42.6	19.3	.0	100.0
400만원 이상	(481)	12.3	22.4	47.9	17.1	.3	100.0
■ 지지대							
수호대	(608)	13.0	21.4	49.9	15.5	.2	100.0
반대	(120)	13.1	38.9	40.5	7.5	.0	100.0
모름/무응답	(115)	8.8	21.2	43.1	27.0	.0	100.0
지지대	(309)	9.6	35.3	34.1	20.9	.0	100.0
반대	(36)	4.6	30.4	45.0	20.1	.0	100.0
모름/무응답	(13)	7.3	25.1	37.7	29.9	.0	100.0
■ 지역별							
도시	(560)	10.5	24.7	44.7	20.1	.0	100.0
수도권	(507)	12.6	27.9	43.5	15.7	.2	100.0
비수도권	(134)	10.4	33.5	42.6	13.5	.0	100.0
■ 정치성향별							
보수	(333)	14.1	24.0	42.1	19.8	.0	100.0
진보	(580)	11.9	29.0	44.0	15.1	.0	100.0
수	(286)	7.3	26.6	45.9	19.7	.4	100.0
모름/무응답	(1)	.0	.0	100.0	.0	.0	100.0

### 대러 국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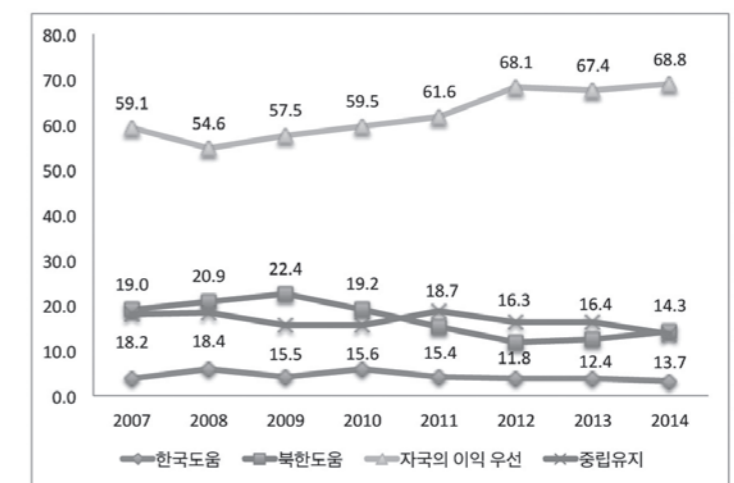


### 대일인식: 한반도 전쟁시 일본의 태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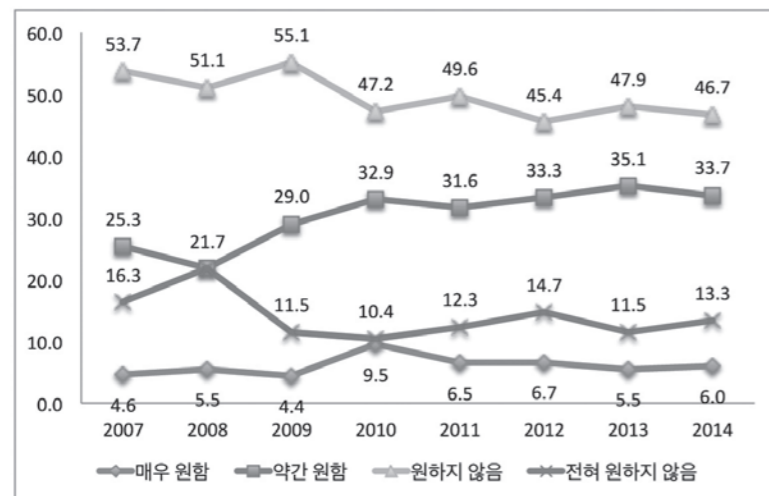


- ▶ 한국을 도울 것이다: 8.1%,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75.3%
- ▶ 한반도 전쟁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에 큰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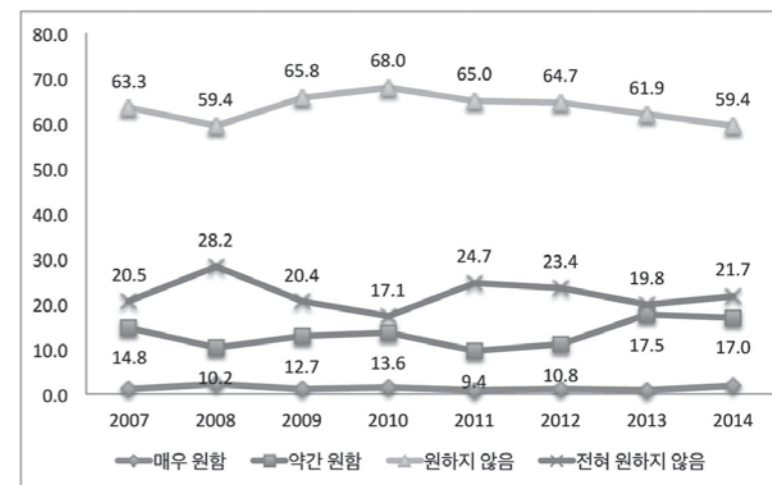
### 대러인식: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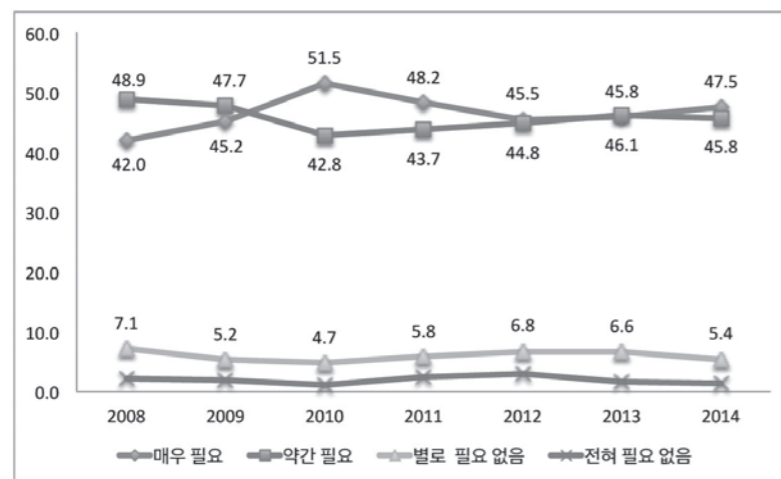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 희망: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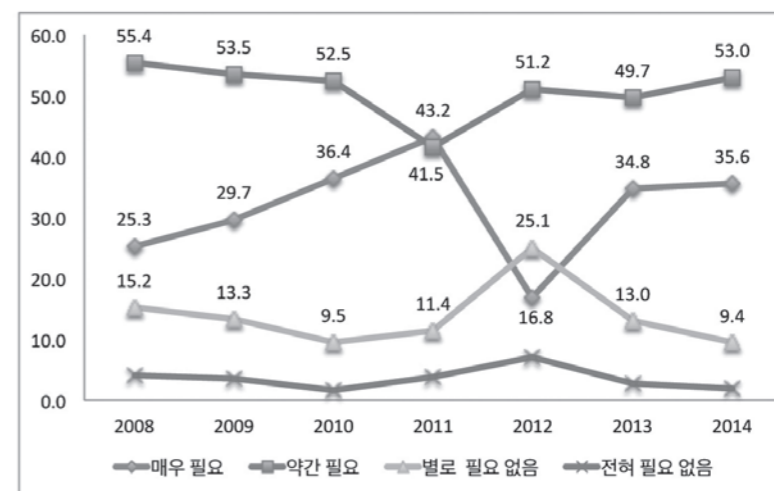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 희망: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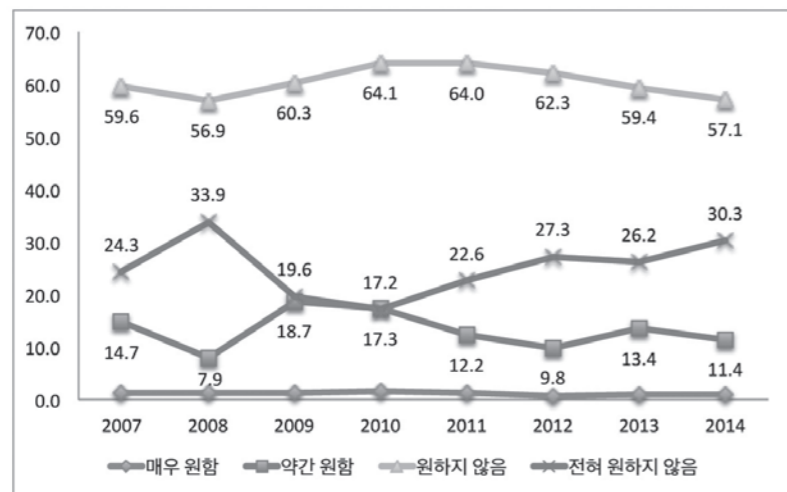
###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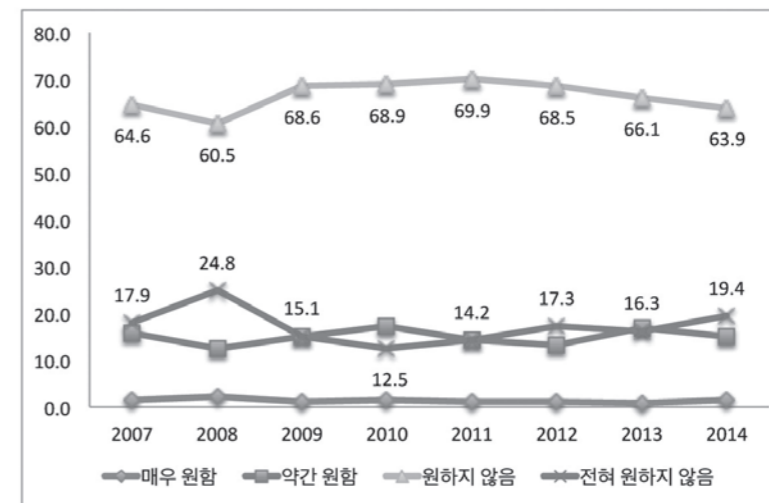
###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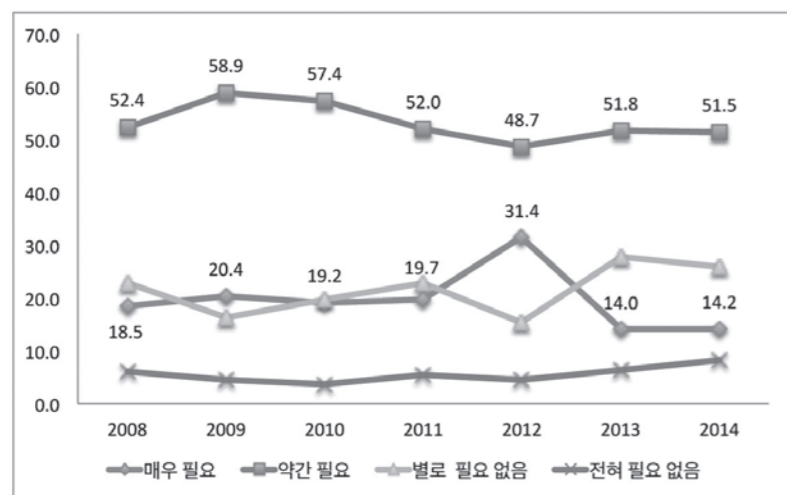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 희망: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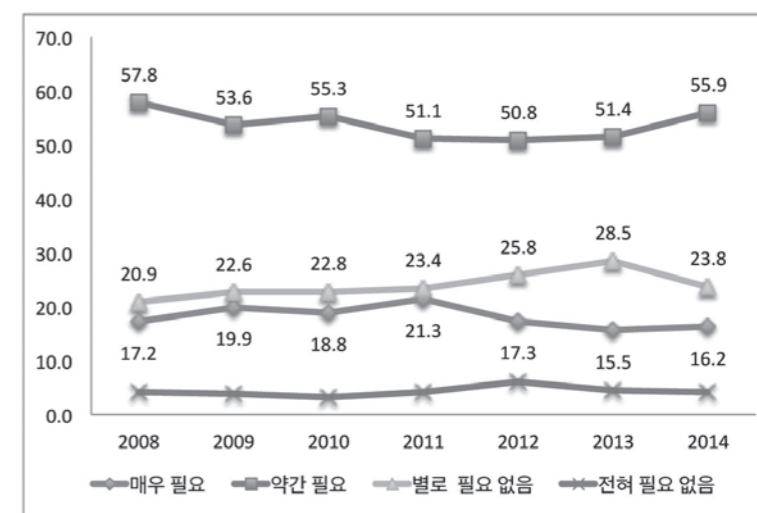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 희망: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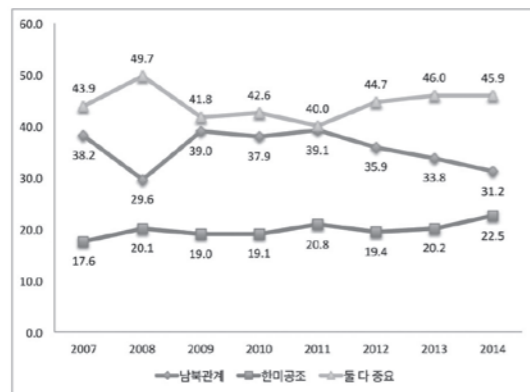
###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일본



### 통일을 위한 주변국 협조 필요성: 러시아



### 남북관계 개선 vs. 한미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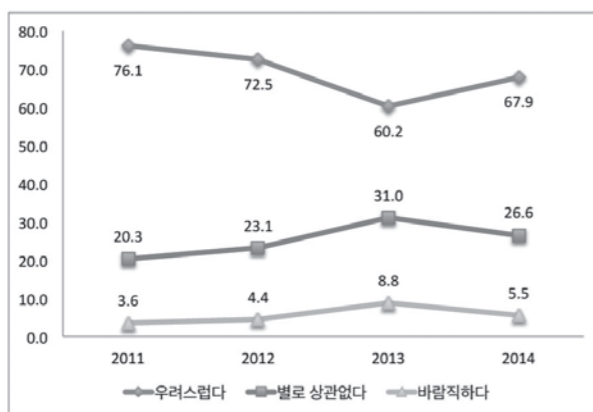
- ▶ 남북관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를 모두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함.

### 월드컵 응원: 북한 팀 vs. 미국 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북한 팀	80.8	76.5	67.8	70.2	61.7	66.2	56.7	61.0
미국 팀	4.0	7.0	8.4	8.6	12.9	11.3	13.4	11.6
양 팀 모두 응원	6.1	6.4	9.8	9.9	10.9	9.8	11.2	11.7
모두 응원하지 않음	8.8	10.0	13.6	10.9	14.3	12.8	18.7	15.7
기타	0.0	0.0	0.1	0.1	0.2	0.0	0.1	0.0
무응답	0.3	0.1	0.4	0.3	0.0	0.0	0.0	0.1

- ▶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피로감 확산,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민족주의적 유대감이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음.
- ▶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에 대한 남측 시민들의 응원과 북한 선수들의 화답 등은 정치적 갈등 이외의 측면에서 민족적 화합의 긍정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기대함.

### 북중경협 확대



- ▶ 북중경협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 통일의식조사: 주변국 관계 인식(요약문)

송영훈 (통일연구원)

### 1. 미국에 대한 높은 친근감은 계속 유지됨.

-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 10%에 그침.

###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 중국 순에서 북한, 일본 순으로 바뀜.

- 일본이라는 응답이 전년대비 9.1% 증가  
- 한중관계의 개선과 한일관계의 악화 등의 반영

### 3. 중국의 협력대상 이미지 증가 속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계, 적대인식의 증가

- 협력대상: 미국(80.6) > 중국(34.0) > 러시아(22.8) > 일본(11.3)  
- 경쟁대상: 중국(34.6) > 러시아(30.9) > 일본(27.5) > 미국(11.8)  
- 경계대상: 일본(43.2) > 러시아(42.4) > 중국(29.1) > 미국(7.2)  
- 적대대상: 일본(18.0) > 러시아(3.9) > 중국(2.3) > 미국(0.5)  
- 일본의 경계 혹은 적대 이미지 전년대비 14.5% 증가: 46.7% → 61.2%  
- 일본에 대한 경계 혹은 적대 이미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  
-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세대와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증가  
-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도 동식에 증가

### 4.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

- 일본(75.36) > 러시아(68.8) > 중국(46.6) > 미국(24.0)

### 5.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가 매우 큼.

- 미국 (39.7%) > 중국 (18.5%) > 러시아(16.2%) > 일본(12.3%)  
-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6.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건 바라지 않건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의 지속 (2012, 2013, 2014 결과 예시)

- 미국: 90.3 → 91.9 → 93.3  
- 중국: 76.3 → 84.5 → 88.6  
- 러시아: 68.1 → 66.9 → 72.1  
- 일본: 80.1 → 65.8 → 65.7  
- 일본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지난 3년 동안 감소

### 7.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강화 둘 다 모두 중요하다고 봄 (45.9%).

### 8.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의 증가

- 북중경협 강화 우려스럽다: 60.2 → 67.9

### 9. 10명 중 7명 이상이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결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거나 양팀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함.

- 정치적 갈등 이외에 스포츠 교류의 측면에서 긍정적 민족주의의 발현을 예상할 수 있음.  
-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시민들의 북한선수 또는 북한팀에 대한 응원은 긍정적인 민족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

---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

# 계층과 통일인식

---

발표

---

# 03

---

· 2014 통일의식조사  
: 사회 계층과 통일, 북한 인식  
/ 강원택(서울대)

## 2014 통일의식조사: 사회 계층과 통일, 북한 인식

강원택(서울대)

###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 시대적 흐름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계층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 대학 등록금이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었는데,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이슈를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더욱 부각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이 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고, 이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계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계층별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대하는 상이한 태도와 가치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이한 계층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된 한 가지 원인은 그동안 이와 같은 통일, 북한 관련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차원에서 매우 커다란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 북한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는 이념적, 정파적 갈등과 관련된 세대, 지역, 이념 등의 변수만이 주목을 받았다. 계층 변수가 주목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원인은 그동안 선거에서의 투표 행태나 정파 지지를 두고 볼 때, 하위 계층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계급배반 투표’ 등이 이러한 특성을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원택 2013). 따라서 하위 계층은 곧 보수적이며, 따라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경험이나 적대적 관계의 지속, 반공 이념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증오, 미움, 불신 등의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계

층적 지위에 따라서 통일이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을 두고 볼 때,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기회보다 더 큰 부담이나 비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진 것이 적은 자’의 시각에서는 그러한 부담이나 비용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북한, 대북 관계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계층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처럼 계층을 분석 단위로 할 때 종종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계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을 많이 사용하지만, 홍두승(2008: 91-133)은 중산층의 객관적 기준으로 가구의 계급적(직업적) 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본인의 교육 정도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했다. 한편,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2013)은 가구 소득이 아니라 보유 재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강원택(2014)은 홍두승(2008)의 분석을 발전시켜 객관적 계층 분류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 소속감까지 아울러,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대표하는 기준 네 가지씩을 각각 포함하여 분석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심은 주로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통일, 북한,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예시한 연구와는 달리 가구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했다.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가구 소득 중에서 중위수는 350-399 만원 소득층, 평균은 300-349만원과 350-399만원 사이, 최빈값은 300-349만원 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감안하여 300-399 만원 소득층을 중간층으로 보고, 그보다 소득이 적은 계층, 즉 299만원 이하 층을 하위층으로, 400만원 이상 소득층을 상위층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이다. 각 집단의 비율은 하위층 28.3%, 중간층 33.1%, 상위층 38.7%이다.

### 2.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계층과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니더

라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계층별 차이, 특히 하위층의 강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61.4%인데 비해, 중간층에서 53.9%, 상위층에서는 53.4%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도 하위층에서는 18.3%인데 비해 중간층에서는 23.2%, 상위층에서는 22.8%로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두 계층과 비교할 때 하위 계층에서 통일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통일의 필요성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 없다	전체
하위층	61.4	20.4	18.3	100.0(339)
중간층	53.9	22.9	23.2	100.0(397)
상위층	53.4	23.7	22.8	100.0(464)

chi square=6.1 p=0.19

〈표 2〉 통일에 대한 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여건 성숙 기다려야	현재대로 좋다	관심 없다	전체
하위층	18.3	61.7	15.3	4.7	100.0(339)
중간층	12.3	59.7	19.9	8.1	100.0(397)
상위층	8.2	61.6	21.3	8.8	100.0(464)

chi square=24.9 p<0.00

이런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유사한 질문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았다. 〈표 2〉에는 통일에 대한 계층별 태도가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적 응답은 하위층에서 18.3%로 가장 높았고 계층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뚜렷이 낮아졌다. 중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은 12.3%였으며 상위층에서는 8.2%로 낮아졌다. 하위층과 상위층 차이는 10%에 달했다. 한편, ‘현재

대호가 좋다’는 현상유지적 태도는 계층이 올라갈수록 높아져서 통일지상주의적 응답의 양상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상유지적 태도의 비율은 하위층에서 15.3%, 중간층에서 19.9%,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1.3%로 높아졌다. 〈표 1〉과 〈표 2〉의 결과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현상유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전체
하위층	47.5	8.3	22.7	4.4	16.5	0.6	100.0(339)
중간층	44.6	10.3	24.4	4.0	16.4	0.3	100.0(397)
상위층	36.9	8.0	32.1	3.2	19.4	0.4	100.0(464)

chi square=17.9 p<0.1

이번에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도 계층별로 비교적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하위층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5%였지만, 중간층으로 가면 44.6%로 낮아지고 상위층에서 그 비율은 36.9%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서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에서는 반대로 상위층의 경우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중간층에서는 24.4%, 하위층에서는 22.7%로 낮아졌다. 이는 통일의 이유를 정서적이기보다 ‘도구적(instrumental)’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위층에서 특히 이런 관점이 높게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도구적 성격을 지닌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상위층은 중간층이나 하위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중간층이나 하위층과 비교하여 민족주의나 동포애 등의 정서적 요인보다 도구적 요인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4〉 통일이 남한에 이익?

	이익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59.6	40.4	100.0(339)
중간층	55.4	44.6	100.0(397)
상위층	53.7	46.3	100.0(464)
chi square=2.8 p=0.24			

통일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층으로 갈수록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해 개인적 이익으로 보는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하위층의 경우에 32.7%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 것에 비해 중간층은 23.9%, 상위층은 25.9%로 차이를 보였다.

〈표 5〉 통일이 개인에 이익?

	이익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32.7	67.3	100.0(339)
중간층	23.9	76.1	100.0(397)
상위층	25.9	74.1	100.0(464)
chi square=7.8 p<0.05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평균 31.4%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28.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40%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응답의 패턴은 계층별로 달랐는데, 하위층에서 통일 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36%인 것에 비해, 중간층은 32.3%, 그리고 상위층에서 그 비율은 27.3%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상위층의 경우 34.2%로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은 하위층의 응답률 21.5%보다 12% 이상 높은 수치였다.

〈표 6〉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 여부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36.0	42.5	21.5	100.0(339)
중간층	32.3	39.6	28.0	100.0(396)
상위층	27.3	38.5	34.2	100.0(462)
chi square=16.7 p<0.00				

〈표 7〉 남한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뤄져야 통일 가능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무관	전체
하위층	31.0	24.5	44.5	100.0(339)
중간층	31.0	23.2	45.8	100.0(397)
상위층	20.7	22.2	57.1	100.0(464)
chi square=19.7 p<0.00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서는 하위층과 중간층의 응답 패턴이 거의 동일했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으며, 통일과 민주주의가 무관하다는 응답은 45% 내외였다. 그러나 상위층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어야 남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응답의 비율은 20.7%로 다른 계층과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신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상위층에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하는 응답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응답이 앞의 〈표 7〉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계층별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8〉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뤄져야 통일 가능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는 무관	전체
하위층	42.5	24.5	33.0	100.0(339)
중간층	35.8	29.5	34.8	100.0(397)
상위층	41.6	26.7	31.7	100.0(464)
chi square=4.9 p=0.30				

이상에서 본 대로, 통일의 이유나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계층별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계층의 경우 통일 문제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입장'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통일은 필요하고 그것은 민족주의적이고 동포애적인 이유에 근거하며, 통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이익이나 남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도 비교적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는 이들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현상유지적인 속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일의 이유 역시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북한에 대한 태도

앞 절에서 통일에 대한 계층별 상이한 태도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까? 우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9〉에서 보듯이, 계층별 시각의 차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양상이 확인된다. 주어진 다섯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 북한을 바라보는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대상의 경우, 하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이 17.4%인데 비해 중간층에서는 21.9%,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5.4%로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위층, 중간층의 순이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하위층과 상위층 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데,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의 경우 하위층에서 그 합이 61.4%임에 비해 상위층에서는 57.5%였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의 경우에는 하위층에서 그 합이 32.4%임에 비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그 합이 39.4%에 달했다. 상위층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하위층	12.1	49.3	6.2	17.4	15.0	100.0(339)
중간층	17.9	42.8	4.5	21.9	12.8	100.0(397)
상위층	11.6	45.9	3.0	25.4	14.0	100.0(464)
chi square=19.6 p<0.05						

이번에는 북한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별로 매우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북한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층에서 그 비율은 27.7%로 낮아지며, 상위층에서의 응답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응답 비율의 차이는 12% 정도였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상위층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북한과 대화 타협 가능 여부

	대화 타협 가능	대화 타협 불가능	전체
하위층	36.0	64.0	100.0(339)
중간층	27.7	72.3	100.0(397)
상위층	23.9	76.1	100.0(464)
chi square=14.2 p<0.01			

이번에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역시 북한을 진정성을 가진 상대방으로 바라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시각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위층 중에서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22.7%였음에 비해,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은 15.9%에 그쳤다. 하위층에서 비교적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북한 정권 통일 원할까

	통일 원한다	통일 원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22.7	77.3	100.0(339)
중간층	15.9	84.1	100.0(397)
상위층	15.9	84.1	100.0(464)
chi square=7.7 p<0.05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태도에서의 계층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살펴 본 대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여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표 12> <표 13>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북한의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가능성 있다	가능성 없다	전체
하위층	72.0	28.0	100.0(339)
중간층	75.1	24.9	100.0(397)
상위층	76.1	23.9	100.0(464)
chi square=1.8 p=0.41			

<표 13> 북한 핵무기 보유로부터 위협

	위협 느낀다	위협 안 느낀다	전체
하위층	87.3	12.7	100.0(339)
중간층	87.7	12.3	100.0(397)
상위층	90.5	9.5	100.0(464)
chi square=2.6 p=0.27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무력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별 응답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계층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계층이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미세하게라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은 두 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도 상위층이고 북한 핵무기 보유로부터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층도 상위층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상위층은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대화, 타협이 어렵고 통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하위층에 비해서 상위층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계층과 무관하게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계층별 시각의 차이는 결국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이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제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4. 대북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한 계층별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았다. <표 14>에서 보듯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4> 바람직한 대북 정책

	남북한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	북한의 개방 개혁, 인권 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전체
하위층	20.4	34.8	17.1	15.6	12.1	100.0(339)
중간층	21.7	31.1	17.4	17.9	11.9	100.0(396)
상위층	17.7	28.9	14.7	21.1	17.7	100.0(464)
chi square=15.1 p<0.1						

우선 '남북한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에 대해서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개방, 개혁, 인권 신장에 대해서도 하위층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였다.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특히 평화협정 체결인데, 17.7%로 다른 계층에 비해 5~6% 높은 응답을 보였다.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응답자들이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응답에서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유독 상위층에서 이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앞 절의 발견과 관련해서 본다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보다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나 부담에서 제

도적으로 보장된 형태로 벗어나겠다는 정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의 항목에서도 상위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15〉 이전 정부의 남북한 합의 사항을 계승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73.6	26.4	100.0(303)
중간층	68.4	31.6	100.0(358)
상위층	67.2	32.8	100.0(405)
chi square=3.6 p=0.16			

이번에는 이전 정부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한 사항을 후임 정부가 계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이 질문은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정부 시기는 현 정부와 정파가 다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접촉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 정부에서의 합의 사항은 현 정부와 정파가 다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3 이상은 모두 이전 정부의 합의 사항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층별로도 비교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하위층에서 합의 사항 계승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6%인데 비해서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러한 응답의 비율은 68% 전후였다. 하위층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16〉 구체적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정책	구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카이제곱검정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찬성	47.2	43.3	46.3	$\chi^2=4.5$ p=0.34
	그저그렇다	33.6	32.2	34.5	
	반대	19.2	24.4	19.2	

정책	구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카이제곱검정
금강산관광은 재개해야	찬성	47.6	47.1	56.3	$\chi^2=11.6$ p<0.05
	그저그렇다	38.4	34.8	28.9	
	반대	14.0	18.1	14.7	
북핵해결 이전 지원 반대	찬성	49.8	49.1	47.8	$\chi^2=1.9$ p=0.76
	그저그렇다	33.2	31.1	34.8	
	반대	17.0	19.7	17.4	
대북빠라 살포 반대	찬성	52.2	48.9	45.1	$\chi^2=4.3$ p=0.37
	그저그렇다	33.1	36.8	39.2	
	반대	14.7	14.4	15.6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야	찬성	69.6	65.0	61.7	$\chi^2=6.9$ p=0.14
	그저그렇다	25.2	28.0	32.4	
	반대	5.2	7.1	5.9	
한국도 핵무장해야	찬성	56.9	56.2	49.0	$\chi^2=9.7$ p<0.05
	그저그렇다	24.1	29.0	31.9	
	반대	19.0	14.9	19.2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계층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교차분석에서 차이가 확인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절반에 달하지만 계층별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된다. 상위층이나 중간층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대인데 비해서 하위층에서 이에 대한 응답은 56.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층은 대북빠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52.2%가 찬성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국 역시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위층에서 56.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중간층에서는 56.2%, 그리고 하위층에서는 49%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층이 전반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층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위층에서 찬성이 69.6%인데 비해 하위층에서 그 비율은 61.7%로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북한의 책임 정도와 남한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표 17>에서 보듯이 남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데 대한 상위층의 응답 비율은 무려 92.5%였으며 중간층 역시 91.9%의 응답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하위층에서 그 비율은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 측의 책임이 작다는 응답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위층에서 2.7%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도 상위층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최근 남북한 관계 악화의 책임 소재

악화 책임	구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카이제곱검정
북한	크다	92.5	91.9	87.0	$\chi^2=12.8$ $p<0.05$
	중간	6.9	7.6	10.3	
	작다	0.6	0.5	2.7	
남한	크다	47.4	45.3	44.8	$\chi^2=3.5$ $p=0.47$
	중간	31.9	35.8	37.8	
	작다	20.7	18.9	17.4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앞에서 본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만큼 뚜렷하고 큰 것은 아니었지만, 상위층에서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가 높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판적 시각이 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라는 '부담'에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북 정책, 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국제 협력, 한국의 핵 무장 등에 대한 선호가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

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상적으로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의 소극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정책으로부터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앞에서 본 결과로부터 추론한다면 대북 협력에 보다 긍정적이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더욱 우호적 태도를 보인 하위층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현상유지나 대북 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인 상위층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8>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에서 벗어났다. 우선 계층별로 만족, 불만족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하위층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층이나 상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8> 현 정부 대북 정책 만족도

	만족	불만족	전체
하위층	56.5	43.5	100.0(338)
중간층	52.4	47.6	100.0(395)
상위층	52.2	47.8	100.0(462)
chi square= 1.8 p=0.42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북한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국내 정치 문제로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정파적,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계층별 정치 성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 5. 계층별 정치 성향 분석

한국 정치에서 대북 정책이나 북한 이슈는 그동안 이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등의 원천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이들은 대북 화해,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며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은 이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강원택 2005). 그런데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계층적으로 볼 때 하위 계층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상위 계층이 오히려 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택 2013). 앞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통일, 북한, 대북정책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확인되었고 하위 계층에서 보다 전향

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선거에서의 투표 행태나 정당 일체감 등에 기반하여 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와 대북,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별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이러한 차이가 데이터의 자체 문제 때문이거나 혹은 계층 분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정파적 지지, 이념성향,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표 19〉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 지지와 지지 정당 없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하위층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31.6%인데 비해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 비율은 25.2%로 6%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6% 이상의 차이는 결코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하위층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9〉 계층별 지지 정당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 정당 없음	전체
하위층	31.6	20.4	2.1	0.9	45.1	100.0(339)
중간층	25.2	19.1	2.5	0.8	52.4	100.0(397)
상위층	25.2	20.9	2.4	0.6	50.9	100.0(464)
chi square=6.4 p=0.60						

이와 같은 하위 계층의 정치적 보수성은 이념 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하위층에서 진보적 성향에 대한 비율은 22.2%, 중간층에서 그 비율은 27.4%,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31.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31.2%, 중간층에서는 21.2%,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0.7%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하위층이 이념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며 상위층이 더욱 진보적 성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0〉 계층별 이념 성향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전체
하위층	2.4	19.8	46.6	27.7	3.5	100.0(339)
중간층	1.0	26.4	51.4	18.4	2.8	100.0(397)
상위층	3.0	28.3	46.0	19.7	3.0	100.0(464)
chi square=20.5. p<0.01						

이런 특성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계층별로 살펴보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정파적 지지나 이념 성향 역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이들의 비율은 하위층에서 56.8%, 중간층에서 52.8%, 그리고 상위층에서 47.9%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평가에서 하위층과 상위층 간에는 거의 10%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비율은 앞의 〈표 20〉에서 본 이념적 입장의 차이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전체
하위층	13.9	42.9	33.1	10.1	100.0(339)
중간층	5.4	47.4	34.7	12.5	100.0(397)
상위층	6.3	41.6	42.6	9.5	100.0(464)
chi square=29.0 p<0.00					

〈표 19〉, 〈표 20〉, 〈표 21〉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층적으로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비해 이념적으로 보다 보수적이며, 정파적으로 새누리당을 보다 많이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면 화해, 협력 중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본 세 개의 표의 결과는 하위 계층이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보다 보

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북 정책이나 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에 서도 보다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위 계층은 통일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상위 계층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도 상위층은 하위층에 비해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도 컸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하위층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의 분석의 결과를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격차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제 계층별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통일의 필요성이나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위협부담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통일이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하위층이었다. 이런 차이는 결국 통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상이한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통일로 인한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우려와 부담감이 통일이나 북한, 대북정책에서의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계층적 구분은 이제 통일과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하위 계층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현실정치에서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계층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른 통일,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세대적 요인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성 등의 요인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때문이다. 즉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정파적 대립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계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어느 한 편으로 입장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겉으로 드러난 통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의 수면 아래에서는 계층에 따른 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

와 태도의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이나 정파적 지지가 세대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다면 사회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6. 결론

지금까지 가계 소득에 따른 사회 계층별로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표를 통해 드러난 대로, 통일,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층별로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한 태도가 발견되었다.

하위 계층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하위층은 통일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주의적이고 동포애에 기반을 두고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신이나 비판의 정도는 낮았다. 또한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하위층의 지지가 높았다.

이에 비해 상위층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출했다.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상위층에서 높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라는 '위협'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북 정책, 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국제 협력, 한국의 핵 무장 등에 대한 선호가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위층의 이런 태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바가 지니는 의미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회 계층이라는 변수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처럼 상위층의 보수적 태도와 하위층의 전향적 태도는 사실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지위를 생각한다면 '합리적(rational)'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이 민족적으로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수반할 것이고 더욱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비용과

불확실성은 현재의 기득권층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유지보다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이제 통일, 북한 관련 이슈는 단순히 이념이나 정파적인 고려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태도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투표 선택이나 정파적 지지와 같은 현실정치에서는 여전히 하위층의 보수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세대적 요인이나 정당 일체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사회 계층에 따른 상이한 태도가 형성된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보다 큰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4. “사회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강원택 외.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권 3호, 5-28.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193-217.
-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 2013.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22집 2호, 1-23.
- 홍두승. 2008.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4 통일의식조사: 사회 계층과 통일, 북한 인식(요약문)

강원택 (서울대)

이 글에서는 사회 계층별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서 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하위 계층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위층은 통일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주의적이고 동포애에 기반을 두고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신이나 비판의 정도는 낮았다. 또한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하위층의 지지가 높았다.

이에 비해 상위층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출했다.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상위층에서 높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라는 ‘위협’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북 정책, 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국제 협력, 한국의 핵 무장 등에 대한 선호가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위층의 이런 태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발견들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회 계층이라는 변수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예비군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

발표

04

---

# 세대와 민주적 가치

---

· 2014 통일의식조사  
: 세대와 민주적 가치 / 김병조(국방대)

## 2014 통일외식조사: 세대와 민주적 가치

김병조(국방대)

### 1. 머리말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대박이라는 단어사용의 적절성이 논란되기도 하였지만,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기반을 위한 대북제안을 제시하고, 선언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7월 15일 발족하였으며, 8월 7일에는 1차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2014년 9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연초의 '대박론' 발표 때 이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 때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대부분의 국정논의가 우선순위에서 세월호 대책에 밀려났고, 통일논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통일과 같은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국가 과업이 한 때 유행처럼 즉흥적으로 논의되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신 통일논의는 건강이나 행복, 아니면 교육이나 취업처럼 국민들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논의를 향상적인 국민적 관심사로 제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까? 개인별로 특정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르고 관심 초점이 다르듯이,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나 관심의 초점 또한 다를 것이다. 예컨대,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정책이 필요하듯이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개인별 특성이 맞는 통일논의 그리고 통일실천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한다. 이에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 하위집단별 통일의식의 편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하위집단에 적합한 통일논의와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하위집단을 '세대'와 '민주적 가치'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통일관련 의식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대별로 통일관이 다르다는 기존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세대별로 통일관련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는 이제 상식이지만, 통일의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대박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별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민주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이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 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자체보다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민주적 가치'로 구분된 하위집단들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세대와 통일의식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단은 줄어들고,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집단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초점에 '세대', 특히 젊은 층이 있다.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젊은 층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이산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통일하면 겪게 될 풍요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한마디로 통일에 소극적인 집단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젊은 층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저하 현상의 주범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는 청년세대 책임론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세대별 통일의식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장년, 노년층이 청년층에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설령 청년층이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분석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이 통일에 적극

적으로 나서도록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전이 바로 통일대박론의 내용이 될 것이다.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는 같은 생애주기(life cycle)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세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되, 성별로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양식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통일의식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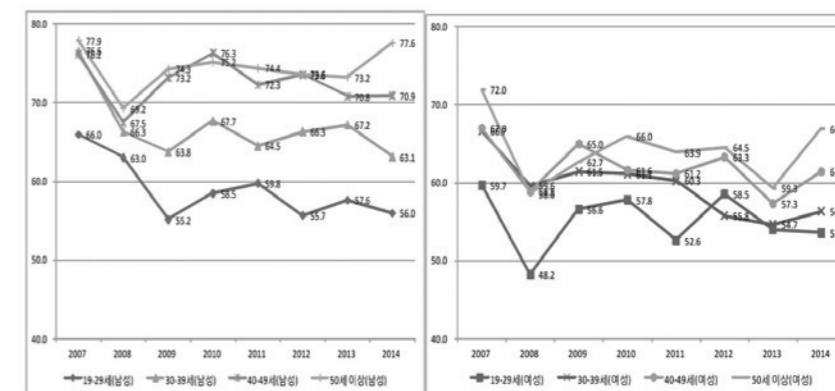
### 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대박론

〈그림 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세대별,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남녀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이 점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열의가 낮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에 세대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 남성은 “20대<30대<40대≒50대”라는 경향성을 보이며, 20대는 50점대, 30대는 60점 중반, 40대와 50대 이상은 70점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세대별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기 드러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대별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20대와 30대는 50점대, 40대와 50대 이상은 60점대 점수를 보인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20대는 비슷하지만, 30대 이상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기존 논의는 틀리지 않다. 그런데, 세대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정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남을 주목해야 한다. 남성은 세대가 높아지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한 단계 정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은 세대가 높아진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 결과 20대의 경우는 남녀 간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유사하지만, 30대 이상이 되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30대 이상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낮다. 더구나 〈그림 1〉에서 최근 추세를 보면 여성 30대의 경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20대와 유사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려면, 젊은 층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여성의 경우 세대와 관계없이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일 필요성에 대한 추세를 볼 때, 금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조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으로 40대 이하의 남성과 20대 이하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표 1〉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성별 세대별 공감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세대가 높아질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대, 30대의 경우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통일대박론이 젊은 세대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1〉 통일대박론에 대한 성별 세대별 공감정도(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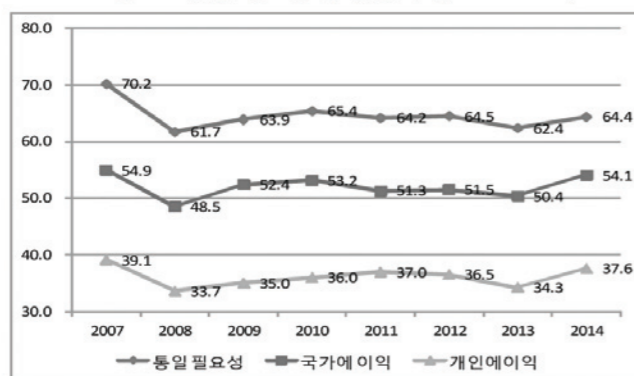
	남성			여성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19-29세	21.7	51.2	27.1	22.3	43.6	34.2
30-39세	25.9	41.5	32.6	22.3	41.5	34.1
40-49세	34.0	37.3	28.7	33.1	35.1	31.8
50세이상	45.1	34.0	21.0	36.7	40.3	23.0

비고: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50대이상 남성의 경우 통일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들 집단이 평소 통일 필요성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의지 천명으로서의 통일대박론이 한국사회 저변에 통일논의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현 단계 평가이다.

앞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통일이 국가, 개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통일 필요성과 통일이익(2007-2014)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60점대 초반이라면, 통일이 국가(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50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이 개인(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30점대 중반 점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 필요성, 통일의 국가이익,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비하면 2014년 통일이 국가 이익이나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졌다. 통일대박론의 실제 효과가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2013년, 2014년, 통일이 국가 및 개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점수화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과 국가이익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성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대와 50대 이상이 유사하고, 30대와 40대가 유사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는 유사한데, 50대 이상이 통일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이 국가이익에 된다는 면에 약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2013년, 2014년이 같은 유형이다. 통일과 국가이익과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 성별, 세대별 통일이익의 변화(2013, 2014년)

	국가이익				개인이익			
	남성 (2013)	남성 (2014)	여성 (2013)	여성 (2014)	남성 (2013)	남성 (2014)	여성 (2013)	여성 (2014)
19-29세	52.6	53.5	47.9	49.5	38.9	36.9	32.7	34.4
30-39세	57.4	57.6	47.2	49.1	36.6	40.5	32.1	33.3
40-49세	55.4	58.4	47.5	49.3	37.8	39.0	35.1	34.4
50세이상	52.2	53.4	43.9	45.7	34.0	43.4	28.4	36.6

그런데 개인 이익 면에서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남성의 경우 2013년도에는 50세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낮게 인식하였으나, 2014년 역으로 50대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2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한다. 통일대박론에 남성 20대층에서 낮은 공감을 나타낸 것과 같은 양상이다. 여성의 경우는 2013년도에는 50세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낮게 평가했으



나, 2014년도에 50세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통일이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박’이라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상용어를 사용함으로써 50세 이상에게는 통일을 개인의 이익 관점에서 살펴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전체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기보다는 50세 이상 연령층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젊은 층에는 통일대박론이 개인이익을 증진시키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유 및 통일 이후 사회문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여야 하나? <표 3>에서 보듯이 국민 중에 ‘통일에 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높다. 젊은 세대 통일무관심론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이 9.5%, 20대 여성이 11.5%로 아직은 소수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을 표명하는 20대 남성의 비율은 여성 30대 이상에서 통일무관심을 표명하는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세대 차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려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층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무관심층은 소수이고 젊은 세대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통일무관심층에 정책 역점을 두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존재를 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 3〉 성별 세대별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년 종합) (단위 :%)

	남성				여성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 성숙	현재 만족	통일 관심무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 성숙	현재 만족	통일 관심무
19-29세	9.4	61.2	19.8	9.5	4.8	62.0	21.6	11.5
30-39세	10.1	68.0	14.6	7.3	5.2	67.4	18.6	8.8
40-49세	13.3	71.3	10.9	4.5	7.3	66.1	19.0	7.5
50세이상	18.2	66.1	11.3	4.4	11.7	62.9	17.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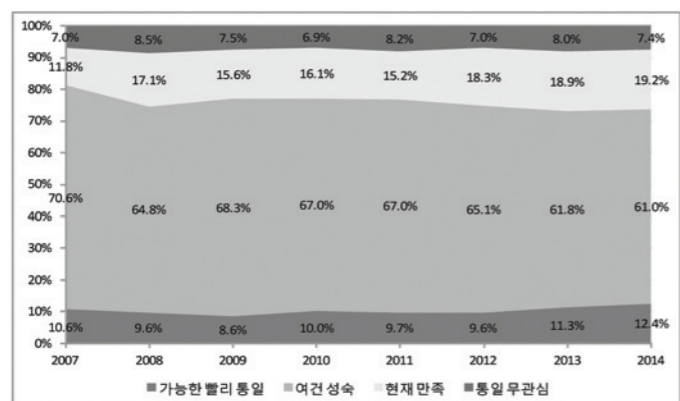
한편, 통일무관심층과 반대의 경우, 즉 통일을 무조건 지지하는 집단(‘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의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50대 이상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20%에 못 미친다. 이들에게는 현재도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지지자로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들이 후원자인 것은 맞지만, 통일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대박론의 포섭대상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대박론의 정책 개발 주요 대상은 각 세대별로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집단과 ‘현재대로가 좋다’는 두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0~70% 수준이다. 각 세대에서 다수를 이룬다. 이들이 요구하는 ‘여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여건을 충족시켜 나갈 때,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층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대로가 좋다’는 집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통일이 현재의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면, 통일무관심층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반통일’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대별로는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젊은 세대에서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가 북한과의 통일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율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편, 추세 면에서 <그림 3>에서 나타나듯 현재에 만족하는 집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건 성숙’을 언급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원하는 집단이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집단의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 데 반하여 통일조건으로 ‘여건 성숙’을 언급하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통일대박론이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을 확대하고, 반대로 통일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



먼저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표 4〉는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의견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 통일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을 선택한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그 비율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줄어서 20대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줄어든다.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젊은 세대일수록 높아진다. 통일이유로 '전쟁위험 소멸'을 선택한 비율은 남녀별로 비슷하다. '전쟁'이란 현재의 분단 상태, 남북대립이 갖는 가장 큰 부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립이 사라지면, 전쟁위험 소멸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확대시키려면 부정적 효과의 소실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의 발견이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통일이 되어야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된다'라는 주장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남성 2-30대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데, 여성의 경우 통일이유로 이산가족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는 '인도적 이익'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우 '선진국이 되려고'라는 '경제적 이익'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선진국이 되는 것'을 통일을 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통일을 현재 및 미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관점

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통일대박론'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미래 지향적인 용어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통일로 인한 이익이 구체화되면 통일대박론이 2-30대 남성층에 매력적인 통일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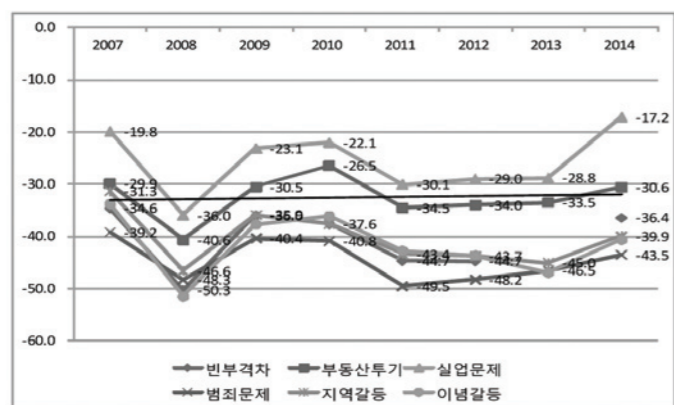
〈표 4〉 성별 세대별 통일이유에 대한 견해(2014)

(단위 : %)

	남성						여성					
	같은 민족	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위험 소멸	북한 주민 잘살게	선진국 되려고	기타	같은 민족	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위험 소멸	북한 주민 잘살게	선진국 되려고	기타
19-29세	35.3	7.6	28.8	3.1	24.3	0.8	39.2	10.9	28.0	3.1	18.6	0.9
30-39세	43.9	5.8	23.5	2.7	23.3	0.8	44.1	10.0	24.0	3.5	16.6	0.7
40-49세	46.7	6.5	23.1	4.6	18.6	0.5	46.3	8.8	23.3	4.7	16.3	0.5
50세 이상	55.2	5.5	20.8	4.7	12.9	0.8	54.1	9.8	21.1	4.3	10.4	0.3

이어서 통일이 가져다 줄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자. 통일에 신중하거나 현재에 만족하는 경우 통일 후 사회문제를 두려워한다. 〈그림 4〉는 여러 사회문제가 통일 되면 통일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점수가 모두 '-'이다. 이는 통일 후 사회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악화된다고 예상하고 있음을 말한다. 연도별 등락이 있지만, 사회문제별로 악화될 것으로 보는 순위는 매년 거의 유사하다.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중에서 '범죄문제, 이념갈등, 빈부격차, 지역갈등'은 유사한 정도로 심하게 악화된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동산투기와 실업문제는 여타 사회문제보다 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을 주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됨이 틀림없다.

<그림 4>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2007-2014)



비고: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필요하다=50, 차이 없음=0, 약간 악화=-50, 크게 악화=-10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렇다면 이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각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4년도의 경우 제시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에서 2013년에 비해 악화 정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보인다.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통일대박론의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 통일을 대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14년도 조사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고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보다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문제 중에서는 세대와 관계없이 범죄문제가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실업문제와 부동산 투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 악화를 기성세대보다 우려한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통일대박론은 제반 사회문제가 악화되리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 악화를 외면하면,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비현실적인 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익추구

보다 손실회피를 추구하는 성향에 비추어 젊은 세대는 통일대박론에 대비되는 통일 쪽박론에 쉽게 기울 수가 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제대로 된 통일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표 5> 성별 세대별 통일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2014)

	남성						여성					
	빈부 격차	부동 산투 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격차	부동 산투 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19-29세	-43.1	-37.7	-15.8	-48.1	-44.2	-44.2	-41.5	-33.9	-26.7	-51.7	-43.6	-47.9
30-39세	-30.0	-25.6	-10.7	-40.7	-40.0	-42.2	-41.5	-39.2	-25.0	-44.6	-50.4	-51.2
40-49세	-36.9	-33.9	-15.4	-43.5	-37.9	-37.6	-32.1	-29.5	-14.9	-39.7	-37.1	-39.1
50세 이상	-33.2	-24.6	-15.2	-44.2	-33.2	-32.5	-35.9	-25.5	-16.9	-38.8	-38.0	-37.5

비고: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필요하다=50, 차이 없음=0, 약간 악화=-50, 크게 악화=-10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 3)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효과 그리고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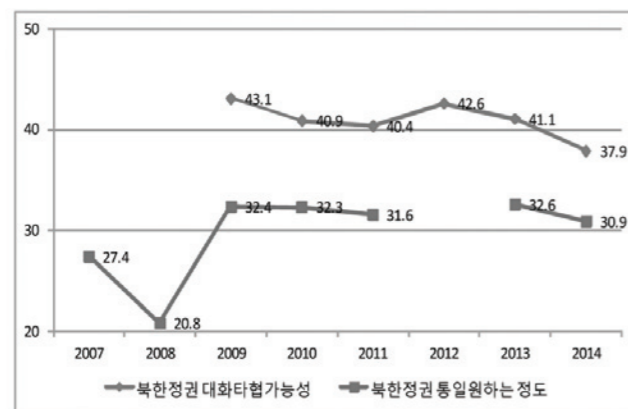
북한정권 및 북한주민은 한국정부 통일정책의 또 다른 주요 대상자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은 통일 논의 상대자로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북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이상의 쟁점과 관련해서 전체 및 세대별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는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2문항('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0-100점 사이로 평가한 점수를 조사년도 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 국민들은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30점 정도로, 대화타협이 가능한 상대인지에 대해서는 40점 정도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된다. 국민들이 북한정권이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 정권이며, 그보다는 다소 높은 평가이나 대화 타협도 쉽지 않은 상대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성별, 세대별로 구분해도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다(〈표 6〉). 성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을 상대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다.

〈그림 5〉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07-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가능하다, 매우 원한다=100,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소 원한다=66.6, 별로 가능하지 않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33.3,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표 6〉 성별 세대별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14)

	북한정권 통일 원하는 정도		북한정권 대화타협 가능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29세	31.0	31.3	38.9	34.7
30-39세	29.6	29.7	38.7	37.4
40-49세	30.9	29.6	39.6	37.7
50세이상	32.4	31.9	37.8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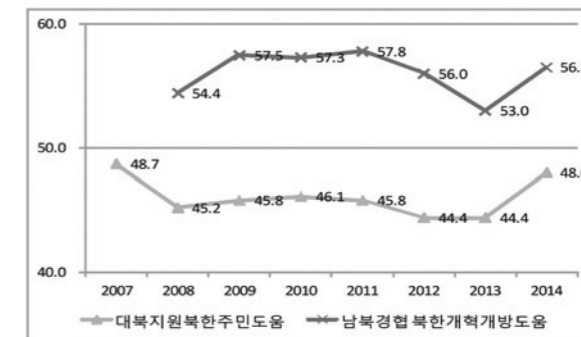
비고: 응답별로 '매우 가능하다, 매우 원한다=100,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소 원한다=66.6, 별로 가능하지 않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33.3,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렇다면 대북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2문항('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0-100 점사이로 평가한 점수를 조사년도 별

로 제시하였다(〈그림 6〉).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40점 중반 점수로 평가하고,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0점대 중반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나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서는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53.0→56.5)'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44.4→48.0)' 모두 조금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통일대박론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변화를 통일대박론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과거 조사에서도 2014년 정도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2014년 조사에서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개선된 것은 2013년 남북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6〉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2013년, 2014년 2개년에 대해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 〈표 7〉이다. 예외적으로 남성 40대의 경우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9→47.9'로 다소 줄었고, 여성 20대의 경우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55.7→53.1'로 다소 줄었지만, 대체로 세대나 성과 관계없이 지난 1년 사이에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평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7〉 성별 세대별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20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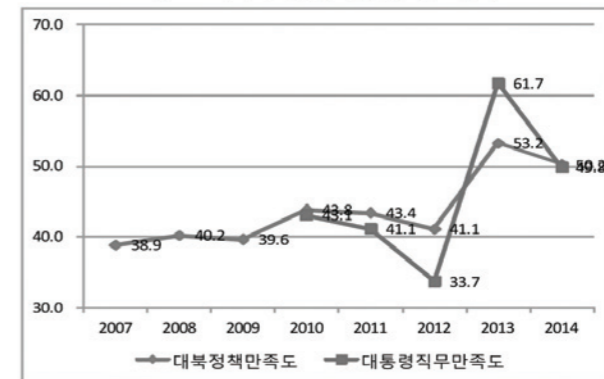
	대북지원 북한주민 도움				남북경협 북한개혁개방 도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19-29세	40.4	45.9	42.8	47.7	52.6	54.8	55.7	53.1
30-39세	43.9	48.4	48.0	48.4	55.5	56.3	53.4	56.1
40-49세	50.9	47.9	41.7	47.4	51.6	58.8	52.0	57.1
50세이상	45.9	50.6	40.9	47.4	49.9	59.8	54.4	54.8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하지만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다 중요한 변화는 세대별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나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는 청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가 북한정권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세대별 갈등이 크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대통령 직무만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림 7〉은 대북정책 및 대통령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2007-2012년까지 40점대 초반에 머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50점대로 높아졌다. 이 명박 대통령시기와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정권교체 효과 내지 박근혜 대통령 효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3년 급속히 높아졌다는 점이 이 논의를 방증한다. 하지만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만족도도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되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7〉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



비고: 응답별로 '매우 만족, 매우 잘하고 있다'=100, 다소 만족, 대체로 잘하고 있다=66.6, 다소 불만족,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3.3, 매우 불만족, 매우 잘못하고 있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하여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대통령 직무수행 만족도 변화를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성별 또는 세대와 관계없이 대북정책 만족도에 정권교체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세대에서도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2014년 2013년에 비해 대북정책 만족도가 하락했는데, 이 역시 모든 세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5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 30대, 40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매우 유사하다.

대통령 직무만족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차이는 변화폭에 있어 모든 세대에서 대통령직무만족도에 대한 변화폭이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한 변화폭보다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무만족도의 평가범위가 대북정책 만족도에 비해 넓기는 하지만 대북정책만족도 하락이 대통령직무만족도 하락의 부분적인 원인이 됨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전 세대에서의 대북정책만족도가 하락했다.

대북정책 만족도 측면에서 세대별 차이보다 세대별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보다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관심 갖고 있는 영역에서 대북정책 성과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성별 세대별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 (2013, 2014)

	대북정책 만족도						대통령 직무만족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9-29세	40.9	49.8	48.5	36.8	50.4	47.5	30.0	57.5	43.4	30.9	57.7	44.4
30-39세	41.2	50.5	46.6	40.3	50.7	49.7	29.4	56.5	42.0	32.8	58.2	47.1
40-49세	39.2	53.1	48.1	40.8	52.8	47.6	30.0	62.3	45.1	35.7	64.6	51.4
50세 이상	45.2	58.7	53.5	42.6	56.4	56.3	37.4	67.3	56.0	40.0	65.4	61.0

비고: 응답별로 '매우 만족, 매우 잘하고 있다=100, 다소 만족, 대체로 잘하고 있다=66.6, 다소 불만족,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3.3, 매우 불만족, 매우 잘못하고 있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 3.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이 큰 동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통일주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통일주도세력을 찾을 것인가? 이 글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왜 그럼 민주적 가치인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7.7선언(198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등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인 선언과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민주화를 이룬 시민사회세력이다. 즉, 당시 통일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냉전체제 해체와 독일통일이라는 외적 요인의 영향도 컸지만, 내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룬 시민사회가 다음 목표로 민족통일을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이제는 통일 자체보다 '어떠한 통일이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민족' 통일만으로도 통일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지금은 민주주의가 결여된 통일은 논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1) 민주적 가치 내면화 집단의 추출과 기본특성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 한국의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9〉는 조사연도별로 각 사건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2012년 내지 2013년 사이에 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특징이 있다.

〈표 9〉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19	.31(.50)	.32(.51)	.32(.52)	.37(.51)	.28(.54)	.31(.54)	.18(.57)	.18(.58)
5.16	.07(.55)	.15(.57)	.08(.58)	.10(.58)	.11(.57)	.00(.59)	-.06(.62)	-.08(.61)
10월 유신	-.09(.56)	-.00(.58)	-.06(.56)	-.09(.58)	-.06(.57)	-.20(.58)	-.20(.59)	-.21(.59)
광주 민주화운동	.28(.59)	.25(.60)	.28(.60)	.31(.60)	.24(.61)	.24(.62)	.13(.63)	.11(.65)
6월 항쟁	.28(.53)	.22(.52)	.25(.53)	.29(.53)	.23(.53)	.24(.54)	.13(.58)	.09(.58)

비고: 응답별로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잘 모름=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계산한 것임.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논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되었던,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나 반대로 비민주적 사건으로 평가되었던 5.16, 10월 유신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

모든 사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아진 이유는 질문이 각 사건이 민주화에 기여했느냐와 같은 명확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는 점이다. 만일 응답자가 각 사건을 단순히 '민주-반민주' 잣대로 평가했다면, 민주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민주화와 관련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변동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은 각 사건을 평가할 때, 민주화와 구분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연도별로 각 사건을 평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연도에서 한 개가 아닌 2개의 요

인(Eigen Value 1 이상)이 추출되었다.

이에 8년(2007년-2014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10> 및 <그림 8>로 제시하였다. 성분 1은 6월 항쟁, 광주민주화운동,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5.16과 10월 유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분 1이 '민주적 가치'와 관계가 깊다. 이에 응답자별로 성분 1 값을 '민주적 가치'라는 변수의 변숫값으로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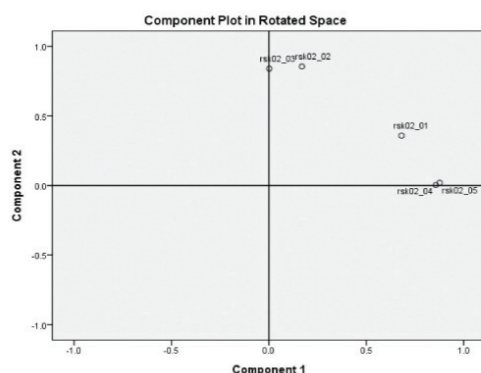
<표 10> 2007-2014년 성분행렬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1	2	1	2
4.19	.768	-.047	.681	.358
5.16	.589	.643	.170	.855
10월 유신	.438	.717	.002	.840
광주민주화운동	.734	-.442	.856	.003
6월 항쟁	.759	-.438	.877	.020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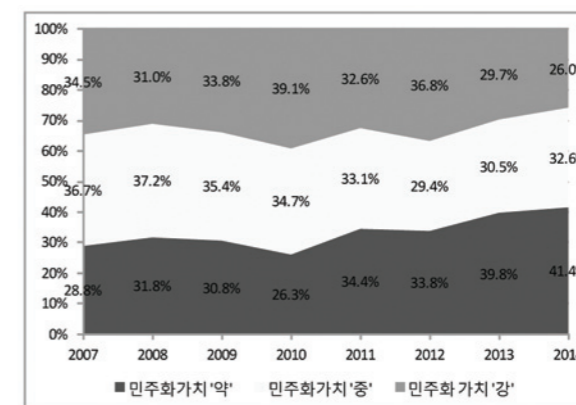
<그림 8> 2007-2014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응답자별로 '민주적 가치(평균=0, 표준편차=1)'는 차이가 나는데, 최솟값이 -2.77이고, 최댓값이 1.87이었다.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별로 구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점수 몇%를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구분해 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현시대에서는 보편가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몇 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1.5점 이상, 1점 이상, 0.5점 이상, 0점 이상 등 여러 기준이 가능하다.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의 비율이 점수 1.5 이상으로 하면 5.5%, 1.0 이상으로 하면 15.3%, 0.5 이상으로 하면 32.9%, 0 이상으로 하면 54.8%가 된다. 조사대상자가 일반국민이고, 한국인의 상당정도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기에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0.5 이상 값을 가진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민주적 가치 '강')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응답자 중 0.5~0.5사이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 '중'', -0.5 이하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 약'으로 구분하였다. 그렇게 해보니 2007-2014년간 전체 응답자가 민주적 가치 면에서 '약'(33.4%), '중'(33.7%), '강'(32.9%)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그림 9>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민주적 가치에 따른 구성비를 제시한 것이다. 2010년도에는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39.1%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은 26.0%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반대로 민주적 가치가 약한 집단이 2010년 26.3%에서 2014년 41.4%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 비중이 줄어들었음이 나타난다.

<그림 9> 민주적 가치 '약', '중', '강' 분포의 변화(2007-2014)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된 민주적 가치 정도별로 구분되는 세 집단은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가? 민주적 가치의 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내부 구성을 2007-2014 전체 및 2014년 조사로 구분해져 제시한 것이 <표 11>이다.

전체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중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의 비중이 크다. 세대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40대에서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고, 정치이념별로는 보수와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보다 진보라는 사람 중에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2014년도의 경우도 이상과 같은 경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대별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각 하위집단별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 비율이 다르지만,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특정 하위집단에 몰려있지 않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가치가 약해진 2014년의 경우에도 각 하위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최소 20% 이상 존재한다. 각 하위집단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적 가치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집단이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독점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한국사회를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하위집단에 일정 수준 이상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표 11> 민주적 가치 내면화 수준별 특성 (단위: %)

	민주적 가치(2007-2014)			민주적 가치 (2014)		
	강	중	약	강	중	약
전체	32.9	33.7	33.4	26.0	32.6	41.4
남성	38.6	32.3	29.2	29.1	31.5	39.4
여성	27.2	35.2	37.7	22.8	33.7	43.5
20대	32.5	34.2	33.3	25.8	34.7	39.5
30대	32.8	34.6	32.7	26.8	31.3	41.9
40대	35.7	33.7	30.6	27.0	31.9	41.1

	민주적 가치(2007-2014)			민주적 가치 (2014)		
	강	중	약	강	중	약
50세이상	30.7	32.5	36.8	24.8	32.6	42.6
중졸이하	23.3	33.4	43.2	16.3	25.0	58.7
고졸	27.8	34.7	37.5	22.6	34.0	43.3
대학이상	39.8	32.8	27.4	30.4	32.6	37.0
200만원 미만	30.8	32.4	36.8	24.5	30.2	45.3
200-299만원	31.0	35.1	34.0	25.8	31.3	42.9
300-399만원	31.5	34.4	34.1	22.2	34.5	43.3
400만원 이상	37.5	32.2	30.3	29.7	32.1	38.1
진보	44.3	30.0	25.8	33.5	31.0	35.0
중도	28.9	35.5	35.6	24.0	33.2	43.3
보수	28.5	34.3	37.1	22.0	33.2	44.7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정치성향별 민주화 가치 분포이다. 진보는 자신을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보수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표에 나타나듯이 진보라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 내부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50%가 되지 않는다. 2014년의 경우는 겨우 1/3을 넘었을 뿐이다. 또한 역으로 보수라는 정체성을 갖는 경우에도 30% 정도는 민주화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고, 2014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20%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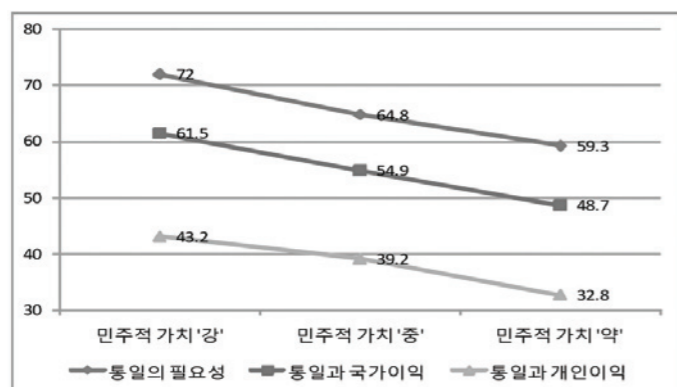
## 2) 민주적 가치와 통일외식 그리고 민주주의

통일이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제라는 점에서, 2014년 조사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적 가치와 통일 관련 의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결과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림 10>은 민주적 가치별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국가이익, 통일과 개인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0-100점 사이로 점수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과 국가 및 개인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0〉 민주적 가치와 통일인식(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 '와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실제로 민주적 가치가 강한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이다(〈표 12〉)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한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낮다. 그렇다고 통일지상주의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다. 타 집단에 비해 통일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많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통일의 이익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타 집단과 유사한 정도로 통일 후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이다.

〈표 12〉 민주적 가치와 통일에 대한 견해(2014) (단위: %)

	강	중	약
가능한 빨리 통일	14.1	15.1	9.3
여건 성숙	69.2	58.3	57.9
현재 만족	13.5	17.9	23.7
통일관심무	3.2	8.7	9.1
계	100.0	100.0	100.0

또한 〈표 13〉을 통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크게 구별되는 특별한 통일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정책을 펴는데 있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단지 세부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이산가족 고통해결을 이유로 든 비율이 낮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조금 높다. 이들 집단이 타 집단보다 미래지향적 특성이 조금 강하다는 점이다. 통일이 미래 과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이다.

〈표 13〉 민주적 가치와 통일이유(2014) (단위: %)

	강	중	약
같은 민족	46.2	47.7	44.0
이산가족 고통 해결	5.5	8.6	10.1
남북간 전쟁위험 소멸	24.1	23.4	24.5
북한주민 잘 살 수 있도록	3.8	3.4	4.7
한국이 보다 선진국 되기 위해	19.8	16.4	16.1
기타	0.7	0.6	0.7
계	100.0	100.0	100.0

그렇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한국은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표 14〉에서 통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민주적 가치와 관계없이 가장 많다. 민주화 가치의 강도와 관계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북한 관계보다 국내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벽해야 통일이 되기보다는 통일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표 14〉 민주적 가치별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2014) (단위: %)

	강	중	약		강	중	약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6.9	29.4	25.2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42.2	36.0	29.1
남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1.5	22.0	25.2	북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7.1	30.1	34.0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가 없다	51.6	48.6	49.7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가 없다	30.7	34.0	36.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그러나 북한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민주적 가치 강도와 관계없이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줄어든다. 특히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에서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가까운 시일에 북한 내부역량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이 북한 내부 민주화 가능성보다 통일에 의한 북한민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들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앞선 논의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는 민주적 가치별로 선호하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제시한 것이다. 통일 한국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각기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낮다. 이는 현 북한 체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을 포함하여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과반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관계없이 남한과 북한 체제를 절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남북한체제를 절충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도 내용면에서 현재의 국민주권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현 남한 체제를 크게 벗어난 체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현 남한 체제가 최적이 아니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와 큰 관계가 없고, 따라서 정치체제 선택과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한 체제로 통합하되 현 남한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통일 상황에 적합하게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민주적 가치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2014) (단위: %)

	강	중	약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47.1	50.3	39.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	40.1	35.6	38.2
통일 이후도 남북한 두 체제 각기 유지	10.3	11.3	16.5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6	2.8	6.0
계	100.0	100.0	100.0

### 3) 민주적 가치와 대북인식 및 대북정책

이어서 민주적 가치별로 북한과 관련된 인식에서 대북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6〉은 민주적 가치별로 북한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표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들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타 집단에서 보다 많다. 대신 북한을 위협대상 보는 경우는 타 집단에 비해 적다. 북한을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으로 구분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협력대상으로 보는 것이 남북한이 합의 협력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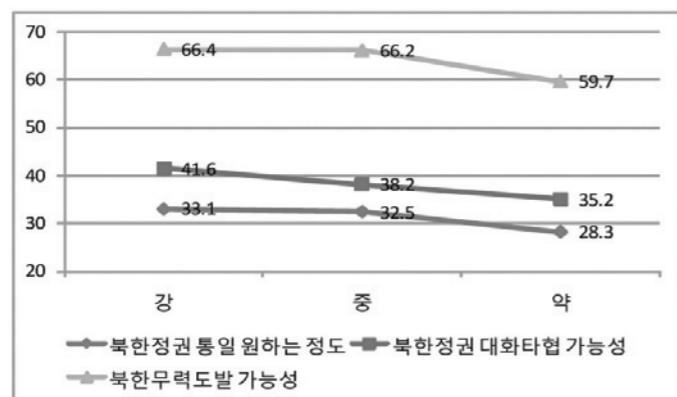
〈표 16〉 민주적 가치와 대북인식(2014) (단위: %)

북한에 대한 인식	강	중	약
지원대상	13.5	14.1	13.9
협력대상	55.4	47.3	38.6
경쟁대상	2.6	3.1	6.6
경계대상	20.2	19.7	24.9
위협대상	8.3	15.9	15.9
계	100.0	100.0	100.0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정권에 국한해서 민주적 가치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조사결과를 〈그림 11〉로 정리하였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북한정권을 유화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정책의 상대방으로서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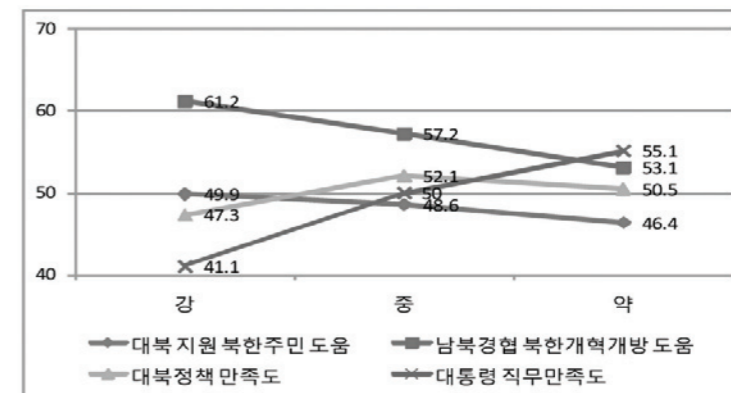
〈그림 11〉 민주적 가치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가능하다, 매우 원한다=100,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소 원한다=66.6, 별로 가능하지 않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33.3,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그림 12〉.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결국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인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찬성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림 12〉 민주적 가치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만족=100, 약간 도움이 된다, 다소 만족=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소 불만족=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불만족=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반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집단에 비해 크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들이 남북한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직위가 민주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한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형태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어떠한가? 〈표 17〉을 보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에 대해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통일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비율이 높은 반면, 반대로 타 집단에 비해 통일대박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가장 높다. 현재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의 기본 전체에 공감하되,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대박론이 구체화되면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보다 통일대박론에 공감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민주적 가치와 통일대박론(2014)

(단위 : %)

	강	중	약
공감한다	34.0	32.1	29.3
보통이다	34.9	40.3	43.0
공감하지 않는다	31.1	27.7	27.7
계	100.0	100.0	100.0

비고: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 4. 맺음말

통일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논의는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연계되기보다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잠시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통일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 글은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실천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일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세대' 및 '민주적 가치'에 따라 통일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의 통일의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30대 이상이 되더라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젊은 층의 통일 필요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여성의 경우 세대와 관계없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부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대박론이 개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직은 소수이다. 젊은 세대에서도 타 세대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무관심층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 성숙을 통일조건으로 내세우는 다수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모든 세대에서 민족통일을 통일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전쟁위험 소멸과 통일이 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통일이유에 주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장래 이익이 보다 구체화되면 통일대박론이 2-30대에 매력적인 통일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통일이후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세대에서 보편적이다. 이 점이 통일보다 현재에 만족한다는 층이 늘어나는 주요 이유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 악화를 기성세대보다 우려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사회문제 악화에 대처하는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통일대박론에 대비되는 통일쪽박론에 기울 우려가 있다.

다섯째,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효과 평가 등에 있어서는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고, 더구나 세대별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북정책 추진면에서 세대 갈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지만,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이 점도 세대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특정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보다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에서 성과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평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 중간적인 집단, 약한 집단으로 3분화하였다. 민주적 가치별 집단은 전체적으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하위집단별로 구분하면 각 하위집단별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 비율이 다르지만,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특정 하위집단에 몰려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적 가치가 약해진 2014년의 경우에도 각

하위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최소 20% 이상 존재한다. 모든 하위집단에 일정 수준 이상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과 국가 및 개인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타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방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 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와 관계없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 중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북한 내부 민주화 가능성보다 통일에 의한 북한 민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 역시 민주화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한 체제로 통합하되 현 남한체제를 근간으로 통일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다.

넷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다. 또한 타 집단보다 북한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정책의 상대방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실용적인 입장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남북한 교류가 단절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한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 통일대박론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일대박론이 구체화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가장 많이 공감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통일을 주도

하는 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도하는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 세대는 어떠한가?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관심하거나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잘 알려주고, 또한 통일 이후 염려되는 사회문제 악화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어 보인다. 한편, 민주화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은 어떤가? 통일의식 면에서는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014 통일의식조사: 세대와 민주적 가치(요약문)

김병조 (국방대)

1.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실천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일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세대' 및 '민주적 가치'에 따라 통일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의 통일의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세대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

- 1)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30대 이상이 되더라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젊은 층의 통일필요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여성의 경우 세대와 관계없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2)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부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대박론이 개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 3)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젊은 세대에서도 타 세대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을 통일조건으로 내세우는 다수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4) 젊은 세대의 경우 전쟁위험 소멸과 통일이 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통일이유에 주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장래 이익이 보다 구체화되면 통일대박론이 2-30대에 매력적인 통일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5) 통일 이후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세대에서 보편적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 악화를 기성세대보다 우려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사회문제 악화에 대처하는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통일대박론에 대비되는 통일쪽박론에 기울 우려가 있다.

- 6)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효과 평가 등에 있어서는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고, 더구나 세대별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보다 전체 국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두는 영역에서 성과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민주적 가치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

- 1)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전체적으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각 하위집단별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 비율이 다르지만,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특정 하위집단에 몰려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민주적 가치가 약해진 2014년의 경우에도 각 하위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최소 20% 이상 존재한다. 모든 하위집단에 일정 수준 이상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 2)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과 국가 및 개인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타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방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 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3) 통일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 중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북한 내부 민주화 가능성보다 통일에 의한 북한 민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 역시 민주화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 4)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다. 또한 타 집단보다 북한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정책의 상대방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실용적인 입장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 5)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남북한 교류가 단절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한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양면적인 평가를 하

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 통일대박론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일대박론이 구체화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가장 많이 공감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4. 통일을 이루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필요할 것이다.

- 1) 청년 세대는 어떠한가? 절망적은 아니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잘 알려주고, 또한 통일 이후 염려되는 사회문제 악화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어 보인다.
- 2) 민주화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은 어떤가? 통일의식 면에서는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분석결과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